

2018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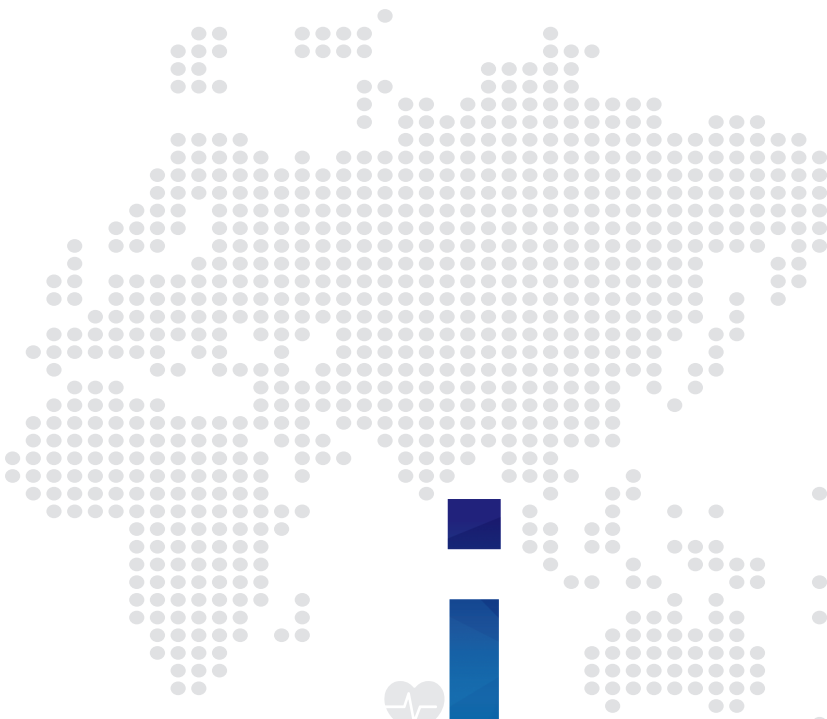
2018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2018 연차보고서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더 행복한 사회,
더 신뢰받는 연구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의
내일을 열겠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홍 식

조 홍 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71년 가족계획연구원으로 설립된 후 지난 50년 가까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보장 분야 연구를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8년에는 미래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보건정책 개발,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증거기반 사회 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 정책조정 지원,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8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57편과 정책보고서 129편을 집필·발간하였습니다. 총 186편의 연구를 통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대안을 찾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부문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를 지원하였으며, 정책 집행 평가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여 앞으로의 연구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8년의 연구 목표와 운영 방향, 연구사업 등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 활동을 소개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포용복지국가 구축에 일조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사회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미래를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 정책의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부응하는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Contents



발간사	02
KIHASA 2018 주요 행사	08

01 KIHASA 현황

0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20
02. 조직도 / 인원 현황	21
03. 비전 및 경영목표 / 추진 계획	22

02 2018년 연구 사업

01. 2018년도 사업 목표	26
02. 2018년도 연구 사업 운영 방향	26
03.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	28

03 2018년 연구 성과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34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36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38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40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42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44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 - 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	46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48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52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54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수준과 정책방향	56
유망 의료기술의 개발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의료체계 성과 향상 방안: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	58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60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62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65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70
2018년 빈곤통계연보	72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74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77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80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83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I):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85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8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91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94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97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99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104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I):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06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108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110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112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115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117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119

Contents



0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124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126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배분과 정책과제	129

06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	132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13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136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 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139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141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143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빈곤 및 고용실태 비교연구	146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149

07 미래세대 성장 자원과 저출산 극복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I)	154
영·유아돌봄 서비스 공급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157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160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162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165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167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169

08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174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177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180

09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8	184
-------------------------------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186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	188
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	190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	192
2018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194

04

2018년 연구 활동

01.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198
02. 2018년 정기간행물	209

05

부록

01. 도서관	222
02. KIHASA 웹사이트	224
03. 간행물 회원제 안내	226

국제회의



01

01 제8차 한몽브 국제컨퍼런스 개최 (5.10.)



03

03 한국의 이주 배경 아동과 정책적 대응 국제 컨퍼런스 (8.23.)

02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국제컨퍼런스 (5.25.)



02



04

04 건강형평성 국제컨퍼런스 (11.26.)

세미나·토론회



01

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년학회 정책세미나 (5.11.)

02 제6차 통일사회보장세미나 (6.15.)



02



03

03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10.31.)

04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4.9.)



04

포럼·MOU



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6.5.)



02 2018년 제1차 인구포럼 (7.5.-6.)



04 제7차 세종통일연합포럼 (4.18.)



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양대 평화연구소 (6.15.)

03 아시아 미래 포럼 (10.31.)

06 제1차 포용복지포럼 (12.18.)



MOU·학술대회



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교류 및 협약 (5.30.)

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립정신건강센터 업무협약식 (10.24.)



03 제10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12.14.)

04 제11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9.14.)



원내활동



01 제13대 조흥식 원장 취임식 (3.21.)



02 춘계 체육행사 (4.26)



03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타운홀 미팅 (9.17.)

06 자유학기제 사회보장교육 (9.20.)



04 우간다 방문 (8.21.)



05 호주 연방 (4.12.)

07 추계농촌일손돕기 (10.19.)

08 윤리경영 및 청렴 특강 (5.14.)



01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KIHASA 현황

KiHAsA

-
- 0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 02. 조직도 / 인원 현황
 - 03. 비전 및 경영목표 / 추진 계획
-

설립 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
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과 이해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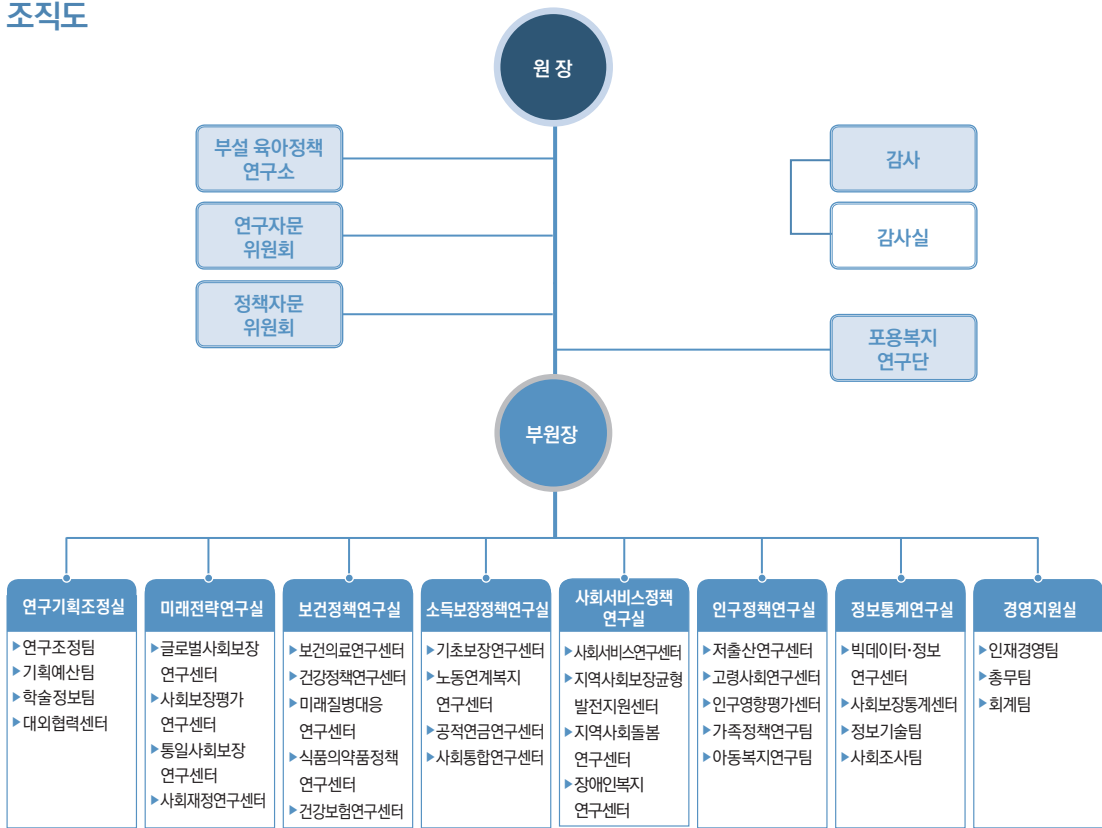
연혁

1971. 07. 0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1976. 04. 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법률 제2857호)
1981. 07. 0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법률 제3417호)
1989. 12. 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법률 제4181호)
19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법률 제5733호)

주요 기능

- ▶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와 정책 개발
-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 생산
-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 있는 연구용역 수탁
- ▶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와 홍보
- ▶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 및 기타 연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도



인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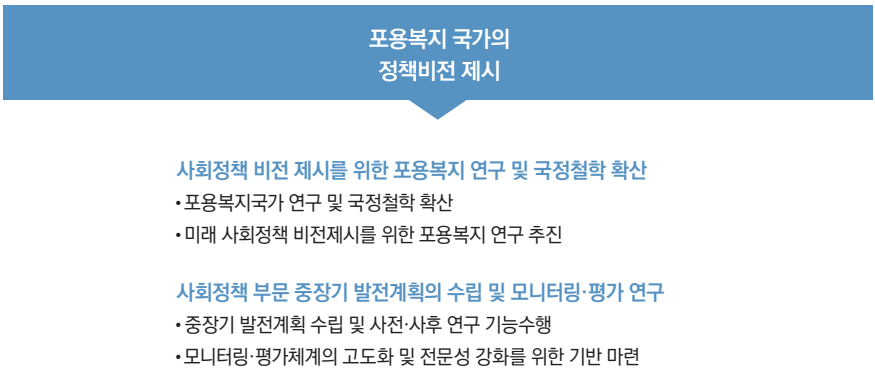
구분		현원
임원	원장	1(1)
	선임연구위원	11(10)
연구직	연구위원	48(41)
	부연구위원	30(26)
	전문연구원	27(3)
전문직	책임전문원	4(1)
	선임전문원	4(-)
	전문원	3(-)
행정직	책임행정원	8(1)
	선임행정원	5(-)
	행정원	9(-)
계		150(83)

2018년 12월말 정규직 기준, ()는 박사학위 소지자

비전 및
경영 목표



추진 계획



사람중심·실사구시의
국가정책 기여도 제고

행복 제고를 위한 삶의 질 개선 전략 개발

- 행복·사회통합·삶의 질에 대한 종합 연구 실시로 행복 연구의 허브기관으로 위상 정립
- 사회통합·국민의 행복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실용적인 정책 대안 수립 지원

“사람중심”가치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보건복지 정책패러다임 연구

- 모두가 건강한 사회와 가치기반 보건의료체계 (비용↓, 질↑)로의 전환 모색
- 저출산·고령화·돌봄 등에 대한 사람 중심의 체감도 높은 대응 정책과 수평적·수직적 사회보장제도 설계 지원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객관적 근거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 건강한 공론장(public sphere) 형성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체계적 근거자료 생산
- 보건·사회정책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자료 정보 구축 및 대외 공개

대한민국 100년의 보건복지
정책분석과 미래대응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미래대응 전략 마련

- 대한민국 100년 보건복지정책의 역사적 평가와 전망
- 초고령사회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한 보건복지 제도개선 및 남북한 교류·협력방안 논의 활성화

- 남북 보건복지 격차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사회통합 방안 마련
- 사회발전 모형을 활용하여 분야별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

국제협력을 통한 아시아 사회발전 모델 개발 및 확산

- 사회보장 국제협동연구로 아시아 동반자국 사회발전 모델 도출
- 국제사회보장 정책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성과 확산

창조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혁신

사람 중심 경영관리 고도화

- 통합적 경력개발제도 구축 및 구성원 권익 신장
- 성과관리제도 합리적 재설계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위한 소통 기반 확충

- 참여형 융합연구 운영체계 확립
- 국내외 전문가 연결 플랫폼 구축·운영
- 조직내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심표가 있는 일터 혁신

- 가족친화적 일·가정 양립제도의 이용확산
- 재창조를 위한 연구휴직·연수훈련 제도 활성화

열린 연구원 행정 운영

연구성과의 개방과 확산기제 강화

- 수요자 중심의 연구성과 개방을 통한 성과 확산 강화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제공 기반 고도화

정책수요 의견수렴 활성화

-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연구 과제 개발
- 정책 기여도 제고를 위한 관계부처와의 소통과 협력 강화

예산 편성·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 구성원 참여 예산제 도입
- 정보 공개 확대를 통한 열린 행정 운영

기관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

- 2021 비전 선언서 발표 및 'KIHASA e-역사관' 개관

02

2018년 연구 사업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KiHSA

2018년도 사업 목표

2018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2018년도 중점 추진 과제

2018년도
사업 목표

총괄 목표	사회보장정책의 국가 비전 선도와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세부 목표	-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추진 -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마련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발전 사회 구현 - 전략적 사회보장재정 운영 및 평가체계 마련

2018년도
연구사업
운영 방향

-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 사회정책 대안 설계
 -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는 현금지원 및 현물지원정책의 선택과 설계 시에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에 대한 심층 연구.
 - 사회서비스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 효과 분석.
 - 향후 남북한 통합 및 통일과 연관된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미래 변화 양상에 부합하는 복지모형을 지속적으로 연구.
- 보건의료체계 질 제고 및 사회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건정책 개발
 - 4차 산업혁명 및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관련 연구 수행.
 -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전략 개발 연구 추진.
 - 근거 중심 보건의료정책 강화를 위한 정책 평가 및 지식확산체계 구축 연구 수행.
- 저출산·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심층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
 - 가족정책
 -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 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 고령사회 대응 정책
 -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근거에 기반한 정책 개발 기초 마련.

-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정책 방안 도출.
- 노인 인권[치매 노인의 증가, 성년후견인제도의 도입, 연명치료 등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관심]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아동복지정책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전체 생애주기에 걸친 학대와 폭력 경험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대상 집단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개입 전략 검토.
- 정책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사회정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아동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증진하는 방안 검토.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검토.

■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

- 향후 5년은 인구 보너스(demographic dividend)의 마지막 기간으로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성공적 대응을 위해 중요성이 높은 시기.
- 노년기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생활 지원 방안.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와 정책 당사자인 일반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논의의 장 마련.

■ 사회보장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최적의 서비스 수급 여건 구축 연구

- 사회보장정책의 총괄 조정 모색 및 복지전달체계 효율화.
- 장애인 권리 보장을 통한 고용 격차 해소.
- 급속도로 진행되는 '정보화'가 야기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모색.
- 보건의료 분야, 사회복지 분야의 다년도 패널조사,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복지 실태조사, 다양한 사회조사를 통해 과학적인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원.

■ 증거 기반 사회보장 평가 및 효과적인 사회보장정책 조정 지원

- 사회보장 평가 및 조정 방안 연구를 통한 성과 지향적 사회보장제도 운영을 지원.
- 지식경제사회 진입 이후 산업구조 조정, 장기 고용 감소 및 자영자 증가 등 각종 사회적 위험이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장 미래 위험 관리 툴 개발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
- 사회적 수요에 부응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공급을 위해 시설 평가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마련.

■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 통일에 대비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합리적 정책 방안 제시,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통합 모형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 필요.

■ 포용복지의 개념 정립 및 구현을 위한 토대의 마련

-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분야는 본 연구원과 가장 관련이 있음.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정책의 선제적인 국가정책 비전 제시가 반드시 필요
- 불평등의 심화, 과도한 지출구조 등 국민생활의 왜곡을 바로잡아 인간 존엄을 회복함으로써 국민통합을 달성하는 것은 시대적 필요이자 복지국가의 사명
- 이에 포용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개념, 발전 방향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써 정립하고, 관련 논의의 확산 및 통합적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학제 간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및 국·내외 전문가와의 세부적 논의 과정을 진행
-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사회에 대비한 포용복지국가 기반조성을 위한 일자리, 서민금융, 복지육구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를 올해부터 수행

■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준비

- 남북관계가 급속히 변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국면의 변화 진폭이 클수록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와 통일을 대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 통일 대비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과제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교류협력방안을 도출,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남북의 인구구조는 한반도 통일 이후 노동력을 비롯한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편 보건·복지를 비롯한 사회지출의 주요한 결정요인이 됨. 이러한 점에서 남북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보건·복지 분야 대응 방안과 소요재정 등을 사전 연구

■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연구

- 정치학·경제학·사회학·사회복지학·지리학·심리학 등 범(汎)사회과학적 관점에서 (1)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사회적 요인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2) 그 결과를 통합하여 한국인의 행복증진을 위한 사회과학적 한국형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3)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장·단기적인 제도적 실행방안을 제시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행사

- 2019년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정부 및 학계, 민간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전후(前後) 100년간의 보건복지정책을 분석하고 전망하고자 함.

■ 2018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식 기념행사 준비

- 202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설립 50주년 비전 선포식 기념행사 준비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2018년을 대한민국 사회정책을 선도하는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갖는 위상 정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함.

03

2018년 연구 성과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KiHASA

-
-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05 휴식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06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07 미래세대 성장 지원과 저출산 극복
 - 08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09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2018년 연구 성과

0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 국민건강정책의 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참여형 건강영향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
-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KiHASA

연구보고서(기본)
2018-03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 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Estimation of Disease and Disease Burden by Health Behavior

연구 책임자 김대중
공동 연구자 이난희

연구 목적

- 본 연구에서는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 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를 위한 미시 모의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특히 건강행태 중 흡연율이 감소하였을 때 질병 발생과 질병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추정하였음.
 - 모의실험에는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FEM(Future Elderly Model) 방법론을 사용하였음. 모의실험이기 때문에 모형에서 가정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수행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 더 많은 가정들을 모형에 도입하여 다양한 정책실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연구 내용

- 고령화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n Aging) 자료를 사용하여 수행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 단위의 이행확률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실험, 그리고 인구통계적 변화를 고려한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50세 이전의 누적 흡연량과 만성질환 유병률의 관계를 밝혀내고, 누적 흡연량의 감소 시나리오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계량화하여 제시하였음.
- 이를 위해 누적 흡연량의 30% 감소, 하위 30% 흡연자의 금연, 상위 30% 흡연자의 금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효과를 살펴보았음.
 -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건강 수준에 유의한 변화가 있었으나 특히 흡연량이 가장 높은 상위 30%의 금연을 유도하였을 때 각각 2.36년의 기대수명, 1.4년의 장애가 없는

건강수명(disability-free life years), 1.6년의 질병이 없는 건강수명(disease-free life years)이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암, 당뇨, 심장질환, 고혈압, 폐질환, 뇌졸중 등의 유병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반면 누적 흡연량이 가장 낮은 하위 30%의 금연을 유도하였을 때에는 기대수명, 장애가 없는 건강수명, 질병이 없는 건강수명이 각각 0.21년, 0.13년, 0.13년 늘어나 상위 30%의 금연을 유도한 결과와 큰 차이를 나타냈음.
- 특정 군이 아닌 누적 흡연량의 전체적인 30% 감소의 경우, 1.16년의 기대수명 연장, 0.83년의 장애가 없는 건강수명 연장, 0.28년의 질환이 없는 건강수명 연장, 그리고 암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볼 때, 금연정책은 흡연량이 많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정책을 마련할 때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정책 제언

■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활용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음.

- 금연정책과 관련한 효과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지정, 미디어 캠페인, 금연 자료 접근성 향상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 있음 (David T. Levy et al., 2004).
- 그러나 과거 흡연량을 고려하여 정책을 시도한 바는 찾을 수가 없음. 이에 대상 (supgroup)별로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 예를 들어, 과거 흡연량이 많았던 고흡연자(heavy smoker)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그리고 고흡연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예산 투입을 늘린다면 정책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연구보고서(기본)
2018- 07**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Impact of ill health on employment and household economic
condition and its policy implication연구 책임자 김수진
공동 연구자 김기태, 정연, 박금령, 오수진, 김수정**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에서 질병 발생이 개인과 가구의 경제활동 및 소득 상실에 미치는 위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정책 현황과 가능한 정책 방안들을 검토하여 제시함으로써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 질병 발생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실직과 소득 상실로 이어져 가구의 빈곤화를 야기할 수 있음.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 외에 질병이 야기하는 소득 상실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함.

연구 내용

■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 국외 연구들은 질병의 발생이 고용상태와 같은 개인의 경제활동과 임금 소득 등 경제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가구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는데 가구의 다른 구성원들은 소득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강화할 수 있고 반대로 환자의 돌봄을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음.
- 질병 혹은 건강상의 문제가 개인과 가구의 사회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이나 가구가 가진 사회경제적 자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사회적 수준에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의 존재 여부나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가 있는가에 따라라도 달라짐.

■ 질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중증질환을 경험한 직후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 정도와 근로소득이 감소하였고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비율이 증가함. 가구주가 중증질환을 경험한 경우 가구근로소득이 감소하였고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 소득을 받는 비율이 증가함. 가구총소득은 증가하였는데 민간보험 진단금 등 근로 외 소득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었음. 가구총소득에서 의료비를 제외한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비율이 증가함.
- 입원을 경험한 직후 개인의 경제활동 참여정도과 근로소득이 감소하였고 근로소득이 최저임금 이하인 비율이 증가함. 가구근로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비율이 증가하였고 민간보험 등 근로 외 소득이 증가함. 입원은 중증질환보다 그 영향이 작았고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은 1~2년 정도로 짧았음.

■ 질병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국내외 제도분석

- 국내 제도 조사 결과 공무원을 제외하면 업무 외 상병 발생 시 일자리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제도는 없으며 사업장에 따라 취업규칙 혹은 노사협약을 통해 관련 규정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상병급여 제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아픈 노동자를 실직과 소득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었는데 OECD 34개 국가 중 29개 국가는 두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하고 있었고 두 개 국가는 공적 현금 지원 제도만을, 세 개 국가는 업무 외 상병과 관련한 휴가/휴직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었음.

정책 제언

■ 업무 외 상병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과 공적 영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두 가지 접근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사용자의 법적 책임강화라는 측면에서 병가제도와 관련한 법적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는 상병 휴가·휴직제도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외 상병 발생이 실직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과 함께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함.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기업이 제공하는 상병휴가 및 휴직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경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적 영역의 상병수당 제도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함.

연구보고서(기본)
2018- 18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The Production and Use of Statistics on Regional Health Expenditures

연구 책임자 신정우
공동 연구자 김한성, 정승용, 천미경, 이유진, 신지영

연구 목적

- 전 세계적으로 국민 중심의 의료(people-centered care)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제도를 국민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통계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목표와 기능이 제대로 이해해야 함
- 의료비 통계는 보건의료제도의 주요한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를 들여다보는 중요한 자료원이 됨
- 본 연구는 국제기구의 제안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비 통계를 지역 단위에서 생산하는 방법(지역보건계정 구축)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의료비를 지역별로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더불어,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활용 방안을 제안함

연구 내용

- 우리나라 국민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를 집합한 국민보건계정과 정합성을 맞춰 2016년 기준 지역별(17개 광역자치단체) 의료비를 산출함
- 이를 위한 기준과 자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생산하는 국민보건계정과 최대한 일치시킴
- 지역별 의료비를 구하기 위해 총액을 배분하는 방식과 영역별 값을 더해 주는 방식을 복합적으로 사용함

정책 제언

- 총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이 실제 지출한 금액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지만, 지출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인구수와 같은 대리 정보를 투입하여 지역별 의료비를 추정함
- 지속가능발전목표의 하나인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 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표의 관리가 중요함
- 지표의 측정과 현 상황에 대한 확인이 전 세계적으로 우선적인 과제가 되는 가운데, ‘보건계정체계’는 한 국가의 의료비 통계를 생산하는 데 표준이 됨
- 본 연구에서 구축한 지역보건계정은 ‘지역’의 관점에서 의료비 통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킨 것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건의료제도를 바라보는 시야를 더욱더 넓힐 수 있었음
- 의료비 통계를 시작으로 보건의료제도의 목표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지역 단위에서 생산되어서 보건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국민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두텁게 할 수 있기를 기대함

연구보고서(수시)
2018- 07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Health and medical service demand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s
for Healthcare Development Plan연구 책임자 황도경
공동 연구자 안수인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 및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등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방향 결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수립 등에 필요한 근거 자료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연구 내용

- OECD 국가들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 비교
 - 주요 OECD국가들의 보건의료 지출, 건강 수준, 보건의료 자원, 의료 이용 현황, 의료 전달 체계, 의료의 질 등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객관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비교·검토함.
- 보건의료 정책 수요 조사 및 분석
 -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남녀 총 20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 만족도 및 불만 요인, 미래 보건의료 체계의 비용, 질, 보장성 등에 대한 인식 그리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파악하여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의료시스템 수준과 정책 수요를 파악함.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를 접근성, 보장성, 의료의 질로 세분하여 각각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의료의 질과 보장성 만족도는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구·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음.
 - 의료전달체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4명 중 1명은 동네의원 이용 후 1개월 이내에 동일 질환으로 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의 약 8명 중 1명은 동네 의원 진료 후 동일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스스로 이용한 경험이 있었음.

- 건강보험료 부담과 적정 보장수준에 조사한 결과, 국민이 지향하는 적정 건강보험 보장률 수준은 현재보다 약 10%포인트 높은 약 73%로 나타났으나, 보장성 확대에 따른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음. 노후 또는 자녀 세대의 미래인 20년 후 보장성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대한 정책 지향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의 보장성과 건강보험료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보장성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보편적 치료 및 검사에 대한 보장성 확대 의견이 가장 많았고 보건의료 체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는 중대 질병이라도 큰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 응급 상황 시 이용할 응급실, 중환자실 등이 충분할 것, 가까운 곳에서 진료 받을 수 있을 것 등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접근성, 보장성, 의료서비스의 질 등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소득계층 간,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

- 필수 의료 항목의 급여화를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질적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소득계층 간 의료 격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민간 주도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으로 필수 의료서비스의 공백을 없애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며,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불충분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어느 지역에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적 투자의 확대도 필요함.

-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신뢰 구축이 필요함.

- 중소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 병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더불어 '전문 병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험료 인상은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구축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 25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Exploring social networks in recovery from addiction

연구 책임자 전진아
공동 연구자 오미애, 이난희, 이용주, 김남희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중독자와 보호자, 중독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가지는 사회연결망의 특성을 살피고 이를 기반으로 중독 회복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둠
 - 사회연결망 기반 중독 회복 지원의 개념 정의 및 국내외 중독 회복 지원 체계 검토
 - 질적면담조사, 설문조사 방식을 활용한 중독자와 보호자와 중독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자의 사회연결망 특성 파악
 - 사회연결망 기반의 중독 회복 지원 방안 제시

연구 내용

- 중독자와 보호자의 질적면담을 통해 중독이 되는 과정과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가족, 직장 동료, 치료기관, 지역사회기관, 동료 중독자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
 - 중독자는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회 및 가족과의 단절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단절도 경험하고 있음.
 - 중독으로 이르는 과정 및 현재까지의 회복 경험들 속에서 중독자는 그들이 맺은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회복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계들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이 관계들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특성들을 보임.
- 중독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 체계인 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독 회복 지원을 위해 관계를 맺고 있는 자원들 역시 시·군·구청, 동주민센터, 의료기관, 경찰서와 소방서, 사회복지관, 초·중·고등학교, 교정시설, 지역사회활센터 등 다양하게 나타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중독자의 재활과 관련한 영역의 경우 네트워크가 약하게 구축되어있어 중독자가 가지는 재활(직업 및 취업 등)에 대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구조임.

정책 제언

- 사회연결망에 기반을 두고 중독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중독 회복 지원 방안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제공 체계와 관련한 방안도 함께 고려하여 제시하였음.
 - ‘자신과 마주하기’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자신과의 단절이 아닌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과 연결되는 것이 사회연결망 기반 중독 회복 지원의 첫걸음이 되어야 함. 자조 모임이나 유사한 경험을 해온 회복자 상담가를 활용한 프로그램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복자 상담가 양성 프로그램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교육과 더불어 중독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중독 회복 지원 교육 강화
 - 중독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주류접근성 제한 조치, 회복경험 공유 방식 다변화 등
 -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 강화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및 정신재활시설 확대
 - 중독회복지원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 치료 세팅의 중독 회복 지원 역량 강화
 - 내소상담이 아닌 방문 방식의 중독회복 지원 방식을 통한 접근성 개선
 -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연결망 강화
 - 중독 예방 및 회복 지원 서비스 제공 주체 및 유관 자원 간 연계 강화
 - 중독 회복자의 연대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확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건강정책 추진 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건강영향평가가 국가 건강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건강영향평가는 제안된 정책 및 사업의 의사 결정 과정에 정보를 제공하고, 예상된 건강영향의 적정화를 추구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국민 건강을 위해 제안된 정책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예측된 건강상 문제의 크기를 산출하고 예측된 편익을 확대함과 동시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측 근거를 작성하여 정책 형성 과정에서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 국내외 건강영향평가 현황

– 선행연구를 통하여 건강영향평가의 개념을 정리하고, 국내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사례와 국외 건강영향평가 제도화 사례를 제시함.

■ 건강 스크리닝 및 건강정책 현황

– 건강영향평가의 주요 대상이 되는 건강결정요인의 항목을 정리하고, 예방가능사망률 및 회피가능사망률 지표를 산출하여 건강격차 현황을 분석함. 지역별로 예방가능사망률 및 회피가능사망률을 비교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지원,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검토함.

– 이와 더불어 현재 국가의 건강정책, 특히 건강증진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제공되고 있는 정책 현황 및 한계점을 제시함.

■ 건강영향평가 체계 및 건강위험평가모형

– 건강영향평가의 수행 절차를 제시하고 선행연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을 고찰함.

– 국내의 위험평가모형 개발 현황을 살펴본 후,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선형혼합모형을 적용한 위험평가모형을 제시하고, 이 모형을 치매에 적용하여 지역별로 치매에 대한 건강위험평가 분석 결과를 제시함.

■ 치매친화마을의 건강영향평가

– 치매를 건강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치매국가책임제의 실행 전략 중 하나인 치매 친화마을(치매안심마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방안을 제시함. 치매친화마을의 정책 평가 도구를 제공하고, 치매친화마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함.

■ 건강영향평가의 적용 방향과 정책과제

– 건강영향평가를 위해 향후 수행해야 할 정책과제와 로드맵을 설정함.

정책 제언

■ 건강영향평가의 단계적 확대를 위해 지자체 건강증진사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 건강증진기금 재원 할당 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

■ 건강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간 협조 체계 정비, 평가수행을 위한 지역별 자료 수집과 분석의 병행이 필요함

– 정책 담당자 및 실무자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공

■ 원활한 평가수행을 위해 역학 데이터,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과 같은 정보의 제공과 활용은 필수적임

■ 건강영향평가는 평가 방법,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우리나라는 아직 건강영향평가수행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기초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며,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도 어려우므로 이를 개선해야 함.

■ 「지역보건법」에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를 검토

– 건강영향평가의 수요를 높이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가능

연구보고서(일반)
2018-28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 - 참여형 건강영향
평가기법의 적용 및 활용방안Health Impact Assessment Technical Support: Application of
Participatory Approaches연구 책임자 최은진
공동 연구자 김정선, 이난희, 김진호, 이희나, 김진희

연구 목적

- 2018년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사업은 참여적 기법을 건강영향평가의 과정에 적용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공모로 선정된 건강도시 지방자치단체의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 관련 보행친화성을 중심으로 건강영향요인을 검토하고 건강증진적 성과증대방향을 모색함. 해당지역 이용주민의 전반적 만족도와 지원적 환경요인을 검토하여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정책개발에 활용함.
- 간이건강영향평가의 모형을 적용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연구 내용

- 종로구 도시비우기 사업대상 참여형 건강영향평가
 - 건강영향평가의 세부사업명: 필운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 경복궁역 앞 마을경관 개선사업, 성곽마을 재생사업
 - 평가내용: 보행환경의 편리성, 안전성, 만족도 등 일반인 조사, 현장조사 및 공무원, 전문가 의견수렴
- 간이건강영향평가 추진
 - 종로구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간이건강영향평가 추진
 - 송파구 블록형 금연구역설치에 대한 주민참여형 간이건강영향평가 지원
- 건강영향평가지식포털 웹사이트 홈페이지 운영
 - 국문 웹사이트 업데이트, 보완 및 운영, 간이건강영향평가 도구 업로드

정책 제언

- 참여형 건강영향평가에는 공무원의 참여, 주민의 참여를 적용하였고, 건강영향을 이해하고 정책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됨.
- 간이건강영향평가지도구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함으로써 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간이건강영향평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온라인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강영향평가기술지원의 확대
 - 건강도시를 지향하며 모든 정책에 건강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건강영향평가 기술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함. 정책과 사업의 주제에 따라서 도구가 보완되고 수정되며 발전할 것임. 이후에는 건강영향평가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요청을 연초에 모두 수렴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참여적인 간이건강영향평가를 지원하고 기술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건강영향평가의 단계별 참여 활성화 전략
 - 건강영향평가에 지역사회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건강취약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보호
 - 본 연구결과 유모차 이용자, 장애인, 어린이 등 건강취약인구집단에 대한 건강영향요인의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도출하였음. 길거리 간접흡연의 영향인식이 어린이, 청소년 등에게 집중되고 많은 우려와 불만을 발생시키므로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영향평가를 더 개발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협동)
2018-01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방안Development of Strategy on Senior Friendly Healthcare for Healthy
Ageing

연구 책임자 김남순

공동 연구자 전진아, 송은솔, 차미란, 김창오, 김광준, 김창오, 박연진, 정윤희, 백상숙, 이지연,
최지원, 김태희, 김태환, 박윤정

연구 목적

■ 2018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노인이 갖고 있는 건강 문제는 신체적, 정신적 역량이 감소하는 문제와 함께 여러 질환이 복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 성인과 다른 접근이 필요함. 따라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

■ 이 연구는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노쇠 현황을 파악하고 노쇠 예방 및 관리서비스 제공 방안 모색. 둘째, 노인 친화적 병원과 함께 전환기 의료 발전 방안 제시.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도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지역사회 노쇠 현황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노쇠 유형 및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파악 및 지역사회 노쇠 예방 및 관리사업 현황과 문제점 파악

- 지역(충남) 거주 65~85세 노인 6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악력 측정 수행하였으며, 노인의 노쇠 및 만성질환 유병률과 건강 인식, 의료 및 돌봄서비스 수요에 대한 인식 및 이용 현황, 지역의 노인건강 관련 일반적 보건복지 인프라 현황을 파악하였음.

- 서울과 충남 지역의 노인 대상 사례관리 실무자인 간호사 그룹 및 사회복지사 그룹 면담을 통해 보건소, 동사무소 간호 인력에 따른 서비스 제공 상황을 파악하고, 노쇠 예방 및 관리사업 문제점 도출함.

■ 지역사회 중심 통합적 노쇠관리 시범사업 실시

- 서울 중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3개 동 지역 노인 중 노쇠 및 전노쇠 상태인 노인 196명을 파악하고 CGA 평가를 진행하였음.

- 노쇠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중재 모형을 중구 보건소와 함께 기획하고 건강 교육과 함께 영양 문제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social kitchen 프로그램 제공함.

- 형성연구방법(formative research method) 사용하여 시범사업의 지역화 과정과 발전 및 장애요인 파악하였음.

■ 급성기와 전환기 노인 친화적 의료서비스 제공방안 마련을 위한 노인 친화적 병원 시범사업 운영

- 대퇴골 골절 환자 대상 노인포괄평가 및 협진을 수행하고, 폐암으로 종양내과에 입원한 노인 환자 대상 노인포괄평가 시행, 종양내과 의료진과 치료 방침 결정 시 협력하였음.

- 척추 환자는 수술 전 노인포괄평가, 환자와 보호자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포괄평가와 수술 후 예후의 상관성 분석을 실시함.

- 노년내과의 심부전 환자에게 재활운동 및 심장재활운동(심폐기능 및 근력 향상) 등의 중재를 제공하고 환자의 전반적 건강상태를 평가하였음.

- 노인 친화적 병원, 전환기 의료, 가정방문 일차의료서비스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 및 전문가 의견조사 통해 정책 방안을 도출함.

정책 제언

■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에 노쇠 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쇠관리가 포함되어야 함.

- 노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 프레임으로 전환해야 하며, 노인 친화적 병원 도입이 필요함.

- 노인 친화적 병원은 노인포괄평가, 케어플랜 수립, 기능 회복 서비스, 다학제적 협진과 전환기 의료 등을 포함하는 진료제공 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노인 환자를 위한 아급성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 전환기 의료를 제공하는 가정방문 일차의료 등이 필요함.

■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원칙

-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회복력 증진

- 노인과 가족의 의사 존중

- 근거 기반 포괄적 서비스 제공

- 다학제 협진과 팀 서비스 제공
-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계되는 서비스

■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정책 과제

- 전략과 거버넌스
 - 노인 친화 보건의료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인보건의료혁신청과 고령 친화 통합케어지원단과 같은 새로운 조직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 프레임과 원칙 등을 포함한 전략 수립.
 - 보건의료인, 정책 담당자, 지역사회 주민의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냄.
-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 노인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 계획 수립
 - 기존 인력의 역량 증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노인의학전문의, 노인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등을 양성하고 보급함.
- 지역사회 노쇠 예방 및 관리서비스
 - 노쇠 예방과 관리를 커뮤니티케어에 포함하고, 노쇠 단계에 따른 제공 전략과 서비스 내용 개발
 - 지역사회 동 단위 노인 간호사 중심 다학제적 케어팀 양성
 -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 특성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주민 참여와 사회적 중재를 같이 제공하도록 해야 함.
- 일차의료와 전환기 의료
 - 전환기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일차의료, 데이케어센터를 확보함.
 - 일차의료 의사들이 노인의 전환기 의료 및 노쇠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함.
 - 노쇠와 질병 관리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함.
- 노인 친화적 병원
 - 급성기병원과 전문병원 등에 노인 친화적 병원 제도를 도입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함.
 - 노인 친화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를 확보하고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노인 친화적 서비스로 제공해야 할 신규 서비스, 다학제적 서비스, 묶음 서비스 등을 위한 지불제도를 개선해야 함. 노인 친화적 병원 인증과 질 평가제도 도입을 고려함.

03 2018년 연구 성과

02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
-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수준과 정책방향
- 유망의료기술의개발및경쟁촉진을통한의료체계성과향상 방안: 바이오시밀러를중심으로
-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 과제
-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연구보고서(기본)
2018-02-02**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연구**A study on the institutional system for improvement in dying journey
and dying experiences the patients and their family연구 책임자 서제희
공동 연구자 임정미, 최지희, 이나경, 백상숙**연구 목적**

- 죽음의 장소와 방법을 대상자가 결정하는 제도적 기반을 개선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관련법과 제도를 인지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도록 하는 데 필요한 논의와 함께, 관련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방법의 제도적 방안 모색.

연구 내용

■ 국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은 죽음을 앞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환자의 가치를 존중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라는 측면에서 일부 제한적임.
 - 생애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의 대상 범위가 생애말기 의료에 제한되지 않고 국외 사례와 같이 전반적인 의료로 확대되어야 함.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환자가 추구하던 삶의 가치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대신할 '의료임의대리인' 지정 절차 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우리나라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의 대상 범위와 서비스 내용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부분 병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한점이 있음. 생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장소가 병원이 아닌 평상시 익숙했던 공간 또는 고인이 진정 원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기관의 다양화가 필요함.
 - 케어 세팅을 고려하여 케어 세팅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하며, 병원이 아닌 곳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확대는 생애말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임.

■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인식

- 서비스 이용자를 인터뷰한 결과 죽음의 장소가 대부분 병원인 것에 대해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이용자들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죽음의 장소로 병원을 고려하고 있었음.
 - 죽음 여정에서 환자와 가족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으려면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음.
 - 현재 제도는 몇 가지 특정 질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시기, 정책 개입 시기 또한 한정적이었음.
- 서비스 제공자를 인터뷰한 결과 새로운 법령이 마련되어 이에 근거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 중이나 여전히 종합병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음.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제도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정책 제언

■ 죽음 여정과 경험 개선을 위해 국내외 관련 제도와 사례 연구를 분석하고,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인식을 파악한 결과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함.

-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생애말기 케어 정책의 리더십 설정과 거버넌스 구축
- 죽음 여정의 단계 확대 적용과 적절한 개입 방안 마련
-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보상
 - 암 환자에 대한 다학제진료 수가나 15분 진료 수가와 같은, 말기 환자에게 그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의료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서버 접근 권한의 확대 및 접근 용이성 향상
- 서비스 제공 장소 다양화와 연계: 지역사회 돌봄과 일차의료 강화
 - 일차의료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 장기요양시설에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인프라와의 연계
-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 관련법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결정위임자 지정 제도 마련
 - 생애말기 케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
 -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보 및 보장을 위한 인식과 문화의 전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환자의 존엄한 죽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인권적인 측면의 제도임을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
- 서비스 제공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의 의무화

연구보고서(기본)
2018- 04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Policy Directions for Comprehensive Performance Improvement of
Future Healthcare Technology연구 책임자 고숙자
공동 연구자 정영호, 이정아, 배정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보건의료기술 발전→국민 건강 수준 향상→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선순환구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기술 발전이 경제적 편익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자 데 목적이 있음.
-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빅데이터와 정밀의료, 인공지능, 원격의료·건강관리, 첨단의료 기기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나 기술이 추구하는 산업적 목표와 공공적 목적은 대립할 수 있음. 기술 자체는 가치중립적이나 각각의 목적은 다르기에 반드시 산업 측면과 공공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구 내용

-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국내외 현황 고찰
 - 고령화의 속도가 높아지고 저성장으로 진입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ICT 융합 의료산업, 유전체 빅데이터 활용 의료산업, 맞춤형 의학 등의 영역별 사례와 주요국에 대한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미래형 보건의료기술 현황에 대해 고찰함.
- 보건의료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정책 과제 제시
 -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정책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보건의료와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 현황과 우선순위 설정 방안, 예산배분 및 조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보건의료산업의 연구개발 파급효과 분석

- 보건의료산업에 있어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함.
- 이에 앞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구조를 분석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 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노동유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 향후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미래 기대편익을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 방안 제시

- 미래 보건의료에서 논의가 필요한 영역을 소개하고,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

정책 제언

- 신기술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므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해서, 미래혁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혁신 달성의 노력들과 환자중심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건강관리 및 건강정보를 수집·저장·전송 관련 단말기에 대한 의료기기 허가 규제의 완화를 통해 건강관리 내지 건강모니터링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ICT+의료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원격지에서의 건강모니터링, 정보 수집·관리·전송, 진료 및 처방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현을 위한 규제 및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미래형 의료기기의 도입 타당성에 따른 법, 제도에 필요한 근거자료와 기술 상용화에 대한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하고 우선순위를 수립함으로써 연구 효율성을 높여야 함.
 - ICT 기반 보건의료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지원을 받기 위한 도구로 적합하지만 좋은 정보가 생산되고 수집되어야 좋은 분석과 활용이 가능하므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하지만 관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및 처벌 규정 등이 필요함.
 - 문제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회적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우선 해결할 문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보건의료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형에 대한 이슈를 발굴하고 현장의 수요가 잘 반영되며, 성과가 정책에 연결되고,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보건의료 R&D의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수시)
2018-04**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 분석을 통한 공공
보건의료수준의 적정 수준과 정책 방향**The appropriate level of public health sector through analysis of
performance of health care supply system연구 책임자 오영호
공동 연구자 금예진, 이나경**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 수준 연구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첫째, 보건의료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후 주요 요인들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는 것임. 특히 공공의료비 비율이나 공공병상 비율이 건강수준에 또는 비용 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함.
- 둘째, 의료부문에서의 공공부문의 적정한 비율을 추정하는 것임. 적절한 공공부문의 비율을 OECD 국가 전체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율과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율을 평가해 보고자 함.

연구 내용**■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 적정 수준 및 정책, 국가의 역할 논의**

- OECD 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기 전에, 국가개입이 필요한 특수한 영역으로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가개입 적정 수준을 논의하고 국가개입을 위한 정책을 검토한 후, 보건의료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하였음.

■ 보건의료체계 성과 관련 선행연구 고찰

- 보건의료 성과 분석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에 포함되어야 할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 성과 변수로 선정된 건강수준과 국민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함.

■ 계량분석 방법

- 계량분석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모델에서 사용하는 연구변수 그리고 모델 추정 방법과 적정 모델 판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른 보건의료성과분석

- 보건의료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후 주요 요인들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비 비율이나 공공병상 비율이 건강수준과 비용 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음.
- 다음으로 인구 · 사회 · 경제적인 변수와 의료공급변수 등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패널 분석을 하였으며,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건강수준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를 보건의료체계 유형별로 비교 · 분석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적정 수준 평가

- 본 실증연구의 두 가지 주요 목적 중 두 번째 목적인 보건의료부문에서의 공공부문의 적정한 비율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 적절한 공공부문의 비율을 OECD 전체와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율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율을 평가하고자 계량 모형을 통해 OECD 국가들의 공공의료부문 비율을 추정하였음.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율을 평가하고 공공의료부문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정책 제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낮은 편임.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부문 비율이 본 연구에서 추정한 적정 수준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임. 또한 장기간에 걸쳐 현재까지 구축된 보건의료공급체계하에서 인위적인 제재를 가하여 단기간에 급격히 공공보건의료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의료의 기능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는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함.**

연구보고서
2018- 41유망 의료기술의 개발 및 경쟁 촉진을 통한 의료
체계 성과 향상 방안: 바이오시밀러를 중심으로Improving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by Developing Promising
Technologies and Competition: Focusing on Biosimilars연구 책임자 박실비아, 송은솔, 김대은, 배정은
공동 연구자 000, 000

연구 목적

- 바이오시밀러 개발 및 시장에 관한 국제 동향을 조사하고 외국의 바이오시밀러 허가 및 안전관리, 약가 및 지불제도, 처방 및 조제 관련 정책 등 정책 현황과 쟁점을 고찰하여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특성, 정책의 특성을 파악함.
- 국내 바이오시밀러 관련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등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을 고찰하며, 바이오시밀러 관련 시장 경쟁 현황을 분석하고 의사의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함.
- 외국 시장 및 정책을 통한 시사점과 국내 현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바이오시밀러의 산업적, 의료체계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함.
-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정책의 국제 현황
 - 문헌을 중심으로 우선 바이오시밀러의 일반 현황을 개념적,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바이오시밀러의 세계 시장 현황을 고찰함.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정책을 허가 및 안전관리 제도와 시판 후 정책으로 나누어 고찰함.
 - 각 정책 영역의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주요 정책별로 구분하여 미국, 유럽 등의 국가별 동향을 비교 고찰함.

연구 내용

- 국내 바이오시밀러 시장과 정책 현황
 - 식약처 홈페이지의 허가데이터베이스와 특허목록, 기업의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과 제품 현황, 기업의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현황을 조사하고, 바이오시밀러 정책 현황을 허가 및 안전관리 제도와 시판 후 정책으로 구분하여 고찰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약가파일과 시장분석업체 IQVIA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시밀러의 경쟁 현황을 가격 경쟁과 시장 침투율로 나누어 분석함.
-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의사의 인식과 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관절 류머티스내과, 소화기내과, 피부과, 종양내과, 종양외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전문조사업체를 통해 웹 기반 설문조사로 수행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함.

■ 고찰 및 결론

- 바이오시밀러 시장 및 정책에 관한 국내외 현황의 연구 결과를 고찰하고, 향후 정책 방안을 도출함.

정책 제언

- 우리나라에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산업적 성과와 의료체계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발된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서 적절하게 채택되고 원활히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 시장에서 낮은 가격의 의약품에 대한 의사 및 환자의 수요 기전이 강화되어야 함. 바이오시밀러만을 겨냥하여 성급하게 사용 촉진 제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국내 의약품 시장과 수요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적절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의사 처방에서 바이오시밀러와 같은 낮은 가격의 의약품이 채택될 수 있게 하고, 환자도 임상적으로 바이오시밀러로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낮은 약가의 제품을 선택하여 비용 절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지되고 장려되어야 함.
 - 바이오시밀러의 사용과 관련한 시판 후 근거 생산과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함. 바이오시밀러에 관한 연구자원 투입은 새로운 제품의 개발만이 아니라 개발된 제품의 적절한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생산에서도 이루어져야 함.
 - 바이오시밀러가 신약이나 제네릭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의약품 영역이 니만큼, 그것의 적정 사용을 통한 임상적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생성되어야 함.
 - 바이오시밀러로의 처방 교체가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이 비용효과적인 약물의 선택이라는 원칙을 의사, 병원, 환자가 모두 공유하는 가운데, 바이오시밀러로의 처방 변경에 요구되는 추가 자원과 불확실성에 시스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 34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 한국 의료시스템의 성과 평가와 정책과제

2018 Korea Healthcare Quality Report
: Korea Health Care System Performance

연구 책임자 강희정
공동 연구자 고제이, 하슬임, 김소윤, 홍재석, 박종현, 이은주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질 향상에 대한 추이와 격차를 지표 단위로 분석하고 문제 영역 또는 관심 정책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혁신의 진전을 점검하고 의료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 추진방향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접근도와 비용, 질 성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비용대비 가치의 향상을 중심으로 함

연구 내용

- 의료 접근의 향상에서 추이와 격차
 - 공적 보장제도의 보장성 제고 필요성과 재정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해야 하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성과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확인
- 의료 질 향상에서 추이와 격차
 - 예방적 의료와 관련 건강결과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가 뚜렷하고 그 추세가 유지
- 지역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비교
 - 지역(17개 시도)별 보건지출 수준 대비 치료가능사망을 비교를 통한 효율성 비교
- 보편적 건강 보장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적합성 검토
 - 한국 의료패널(2015년)을 활용한 비교정태분석을 통해 개인 및 가구 의료비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정책의 미시적 기대효과를 추정

-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의 감소 효과는 보편적 건강보장의 주요 성과인 저소득층의 재정위험 보호 기능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됨

정책 제언

-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 성과 모니터링과 보고체계 구축
- 데이터와 측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성과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확대
- 일차의료에서 건강 상담과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환자참여 확대

연구보고서(일반)
2018- 35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r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연구 책임자 김동진
공동 연구자 최지희, 이정아, 배정은, 김창엽, 박유경, 정여진, 최영은, 김명희, 민동후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3차 연도 연구로,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건강불평등 통계와 지표 생산
 - 지역의 결핍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박탈지수의 개발 및 산출
 -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위해 미충족 의료필요를 이용한 정성적 모니터링 체계 제안

연구 내용

- 건강불평등 지표 모니터링
 - 2017년 수행된 2년차 연구에서는 중재 요인과 건강 결과 중심으로 지표를 산출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사회구조적 요인 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산출함.
 - 본 연구에서 생산된 사회구조적 요인 지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에 해당하는 지표로서 건강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원인이자 건강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상위요인들이며, 원인의 원인에 해당함.
- 지역박탈지수 개발 및 산출
 - 이 연구에서는 기존 지역박탈지수의 한계를 넘어 다차원적으로 지역의 박탈수준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박탈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지표의 활용 목적을 고려해 국내 맥락에 맞는 지역박탈 변수를 구성하고 지표화함.

■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 지역 간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 정성적 미충족 의료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결과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해 봄. 또한, 지역 간 미충족 의료의 정성적 측정 결과를 통해 이와 관련한 의료 접근성 정책을 일부 검토하고 불평등 완화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함.
 - 기존의 미충족 의료 측정에서 정의하는 미충족 의료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미충족 의료의 단지 경험 여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인식과 이용 결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차원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정책 제언

■ 건강불평등 지표 모니터링

- 국제적으로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은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기전으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불평등에 초점을 두고 건강불평등에 연계시킬 수 있어야 함.
- 아울러 차제에 건강불평등과 관련한 국가 단위의 공식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지역박탈지수 개발 및 산출

- 개별 지역의 박탈수준뿐 아니라 박탈의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박탈이 심한 지역에 대하여 가중치를 두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경제적·조직적 지원을 지원해야 함.
- 지역박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 박탈 정도뿐 아니라 어떤 영역에서 박탈이 가장 심각한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함.
- 향후에는 지역박탈을 개선하기 위한 참여적 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해야 함. 주기적인 지역박탈 모니터링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의료이용의 불평등 모니터링

- 정성적 측정은 주관적인 측정 방법인 미충족 의료의 정량적 측정도구를 개선하고도 여전히 현실의 미충족 경험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이므로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범적 측정이 체계를 갖추어 여러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미충족 의료를 측정할 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험과 심층에 놓인 기제와 구조를 더욱 잘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 평가와 개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연구보고서(일반)
2018- 40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질병 이환, 만성질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6 : Chronic Disease, Morbidity, Health Behaviour and Health Status

연구 책임자 김남순

공동 연구자 서제희, 정연, 이정아, 배정은, 이나경, 김은주, 염아림, 윤열매, 서남규, 문성웅, 강태욱, 오하린, 정다인, 고충률, 이희제, 김찬호, 김우중, 김성식, 안윤균, 김규성, 이영민, 김유진, 김진영

연구 목적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 수행의 근거 마련을 위해 생산된 한국의료패널 자료에 대한 기초 분석과 생산 자료 활용 증진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를 수행하고, 한국의료패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계획안 마련.

연구 내용

■ 2016년 한국의료패널 연간 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 실시

- 이탈 가구 분석
 - 2008년, 2015년 표본 가구 중 2016년에 이탈한 가구를 추출하여 2016년까지 유지된 가구와의 특성 차이를 파악하였음.
- 질병 이환 현황 및 유병 상태 분석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를 기준으로 질병 이환 현황 및 다빈도 질환을 파악하였으며, 8대 주요 만성질환(군)(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결핵)을 선정하여 유병 상태를 파악하였음.
-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분석
 - 의료 이용 데이터를 활용하여 가구원 및 가구 특성에 따른 연간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을 살펴보았음
- 개인의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분석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대상 가구와 가구원의 특성에 따른 주요 건강 행태 차이를 분석하였음.

■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발간(연구보고서 2018-40-1)

- 1기 한국의료패널의 조사 수행체계, 조사 설계와 패널 운영 방식, 조사 내용과 조사 방법, 데이터 활용 편의성 등에 대한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2기 한국의료패널의 개편 방향과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을 마련하였음.

■ 제10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개최(2018.12.14. 대한상공회의소)

- 의료서비스와 환자경험을 주제로 메인 세션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건강행태 결정요인, 상용치료원과 일차의료를 주제로 한 8편의 논문과 4편의 대학원생 우수 논문을 발표함.

정책 제언

[2016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결과]

■ 가구 및 가구원 특성

- 가구의 일반적 특성: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27.2%로 2008년에 비해 약 5.6%포인트 증가하였음. 세대 구성을 살펴보면 2세대로 구성된 가구가 2016년 원표본 기준 49.1%, 통합표본 기준 49.3%로 가장 많았음.
- 가구원의 일반적 특성: 연도별 성비 변화는 거의 없으며, 2016년 49.8%, 여자 50.2%로 여자가 남자보다 약간 많음. 조사가 지속됨에 따라 연령층 또한 높아져, 2008년에 비해 40대 이하의 연령대는 감소하고, 50대 이상의 연령대는 증가함.

■ 이탈 가구 분석

-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특성 차이: 2008년 대비 가구원 수가 4~5인 가구일 때, 세대 구성이 2세대일 때,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경기·서울·인천·울산에서 이탈률이 높게 나타남.
- 이탈 가구와 유지 가구의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차이: 이탈 가구의 2015년 응급·입원 이용률은 유지 가구보다 높지만 외래 의료 이용률은 유지 가구보다 낮게 나타남.

■ 질병 이환 현황 및 유병 상태

- 주요 만성질환 유병 상태: 8대 질환 가운데 1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이상 가구원은 총 1만 4347명 중 5962명(41.6%)이며, 1명 이상의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총 6437가구 중 4233가구(65.8%)임.
 - 주요 만성질환 중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은 고혈압으로 질환자 수가 전체 가구원 수의 24.7%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관절병증(21.4%), 고지혈증(13.9%), 당뇨병(10.0%) 순으로 빈도가 높음.

■ 의료 이용 및 의료비 지출

- 가구의 연간 의료 이용: 2016년 통합표본 기준 응급(19.8%), 입원(26.9%), 외래(97.5%) 이용률은 전년 대비 변동폭이 크지 않음.
-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 만성질환자의 질환별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시간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 2016년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절병증의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2008년에 비하여 증가한 반면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 환자의 외래 연간 본인부담의료비는 2008년 대비 감소함.
-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현황: 만성질환자의 의약품 복용 현황 분석 결과 관절병증을 제외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환자는 높은 의약품 복용률(80% 이상)과 복약순응률(90%)을 보임.

■ 건강 행태와 건강 수준

- 2016년 연간 데이터 분석 결과, 현재 흡연율은 20.4%, 고위험 음주율은 16.0%,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은 14.0%,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은 13.1%로 나타남.
- 활동 제한에 대한 분석 결과, 55세 이상 가구원의 ADL 장애율은 3.3%, IADL 장애율은 11.2%, ADL/IADL 전체 장애율은 11.3%로 나타남.
- 복합적 건강 위험 행동: 흡연,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세 가지를 주요 건강 행태로 하여 복합적인 건강 위험 행동 양상을 살펴본 결과, 2016년에 흡연, 고위험 음주, 운동 부족 세 가지 건강 위험 행동 모두를 하고 있는 사람은 4.6%이며, 세 가지 건강 위험 행동 중 어느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은 31.1%로 나타남.

[2기 한국의료패널 구축·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 결과]

- 의료패널 데이터의 보건정책 관련성을 높이고 정보의 풍부함을 갖추기 위해 조사 내용 개편.
- 국민 의료 이용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위한 표본 설계와 패널가구 이탈 방지 노력 강화.
- 조사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데이터 질 관리체계 구축.
- 자료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처리방식의 효율성 제고.
- 국내외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내용 개편.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KiHASA

2018년 연구 성과

03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 2018년 빈곤통계연보
-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I):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 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정책자료
2018-03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연구 책임자 이태진
공동 연구자 이병재, 정희선

연구 목적

■ 본 사업은 일선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현장 전문가 중심의 포럼을 운영하여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성을 강화한 근거 중심 정책(evidence-based policy)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집행 과정 및 성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모니터링 전문위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운영체계 및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지역복지 관련 현장 전문가로서,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의 효율성 및 효과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기초통계자료와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 등 정책대안 마련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긴급지원제도 모니터링

- 긴급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현장 실무자의 고충
-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의 적절성
- 긴급지원 급여의 적정성
- 긴급지원의 재정과 행정
- 긴급지원과 타 제도와의 관계 설정
- 조건부수급제도 모니터링
- 조건부과유예, 조건제시유예, 조건불이행의 특성과 대응 방안

- 조건부수급제도 발전방향
- 주거급여 개편과 실무자의 복지인식
- 주거급여 개편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의견
- 수급자 낙인, 부정수급 등에 대한 현장 실무자와 전문가의 인식

정책 제언

■ 긴급지원제도 모니터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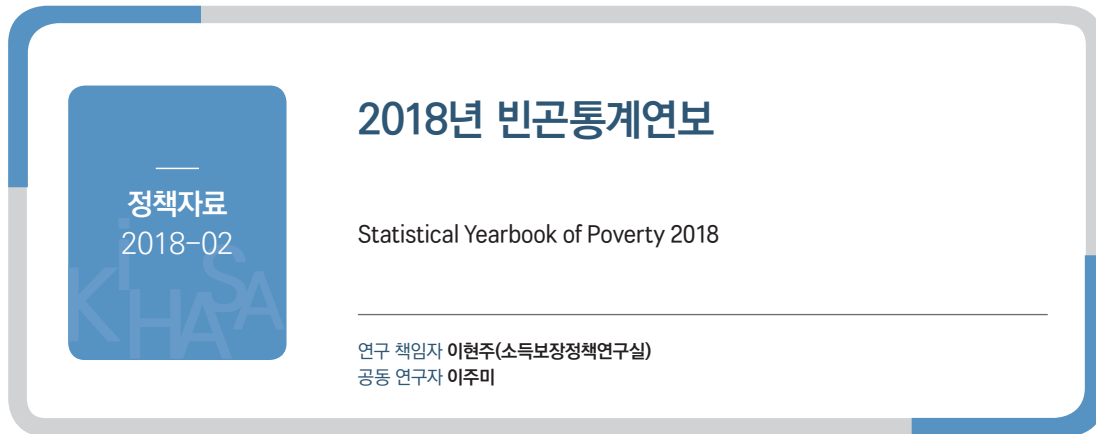
- 현장 실무자의 안전 보호를 우선
- 선정기준, 급여 수준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량권 부여의 조화가 필요
- 대상자 관리에 있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

■ 조건부수급제도 모니터링 결과

- 조건부과유예와 조건제시유예의 개념 정립과 조건불이행을 유도하는 정책의 개선이 필요
- 조건부수급을 확대하는 현행 제도는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 현장 실무자의 입장에서 매우 부담이 되므로, 자활사업이 아닌 청년을 위한 아이템, 자산형성지원 등을 확대해야 함
-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시행 필요
- 자활사업의 목표를 탈빈곤·탈수급이 아닌 현실적인 성과지표로 수정·보완해야 함

■ 주거급여 개편과 실무자의 복지인식 모니터링 결과

- 지방주택도시공사의 주거급여 전달체계 편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지만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는 증가하는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함.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실무자의 권한도 확대되길 바램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된 빈곤통계연보(2006~2017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빈곤 및 불평등 관련 통계자료의 최근치를 생산하여 관련 분야의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신뢰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정책 입안자 및 관련 연구자에게 빈곤과 불평등을 파악하고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전문가뿐만 아니라 그 밖의 관심 있는 국민들도 손쉽게 찾고 이해할 수 있는 통계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연구 내용

■ 전년도 『빈곤통계연보』와의 차이점

- 2018년 『빈곤통계연보』는 전년도(2017년) 『빈곤통계연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달라짐.
-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가 가계수지(소득 및 지출)통계에서 가계지출통계로 특화되어 '가계지출조사(지출)'는 연간 자료로, '가계소득동향(소득)'은 분기 단위로 공표됨.
- 이에 따라 이 보고서에서 지출 관련 지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간 자료로 산출하였으나, 소득 관련 지수는 분기 자료로 산출함.

■ 상대적 소득계층 분포 파악

- 빈곤(가구)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소득 50~150% 분포 등

- 2017년 분기별 빈곤율은 분기적 특성에 의해 등락을 반복하며, 2018년 소득별 빈곤율은 전년 동 분기 대비 증가한 모습을 보임.

- 중위소득 50~150% 소득 분포, 지니계수, 소득점유율 등 불평등지수 산출

■ 인구 유형별 빈곤율 제시

- 연령범주별 빈곤율

- 연령 범주는 OECD 기준에 따라 18세 미만, 18~25세, 26~40세, 41~50세, 51~65세, 66~75세, 76세 이상으로 구분함.
- 소득 범주별 상대적 빈곤율 모두 76세 이상, 66~75세, 51~65세, 18~25세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여성가구주가 빈곤율, 아동 빈곤율, 노인빈곤율, 취업자 빈곤율, 한부모가구 빈곤율, 1인가구 빈곤율 등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 적용)

정책 제언

■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는 취약계층과 사회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함.

- 빈곤 및 불평등의 규모는 해당 국가의 사회적 위험이 어느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나타냄.

■ 빈곤 및 불평등의 심화는 가정해체 및 범죄율 증가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해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더 나아가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는 어느 집단이 취약계층인지,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여 사회정책의 방향, 정책 대상자의 규모 및 관련 정책의 지출 규모를 결정하여야 함. 이때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지표가 정책 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빈곤 및 불평등의 변화는 정책을 실행한 이후의 정책 효과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공하는 결과는 OECD 등의 국제기구와 국내외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로,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학자,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램.

정책자료
2018-09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효과 분석

Analysis of the Effects on Financing Methods on Social Expenditures

연구 책임자 남상호

연구 목적

-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복지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복지지출의 재원 조달 문제와 그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은 본격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음
- 주어진 복지지출 수준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의 차별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 추가적으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한 사회적 후생 감소를 최소화하는 재원조달 방안 도출 정책방안 모색, 장기 및 단기적인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되, 거시 사회회계행렬의 작성 과정을 원천별로 구분하였음
 - 투입산출표와 국민계정 자료를 결합해 거시 사회회계행렬 제어치를 작성하였음
 - 사회회계행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회계행렬에서의 '행'과 '열'의 합이 서로 같도록 조정하는 balancing 과정을 통해 정방행렬로 구축하였음
- 다음 단계로는 미시 사회회계행렬을 작성하게 되는데, 각 거시 사회회계행렬의 값을 투입산출표와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하여 행렬과 벡터로 나누어 주었음
 - 분석의 편의상 마진값과 상품세, 잔폐물 등을 구분해주었음
 - 중간재 수요 및 국내 공급 등에 해당하는 값은 행렬로 확장하며, 피용자보수 및 영업잉여 등에 해당하는 값은 벡터로 확장하였음
 - 생산자가격과 기초가격의 차이인 순생산물세 및 잔폐물 발생 영역에 대해서 행렬 형태로

사회회계행렬 안에 포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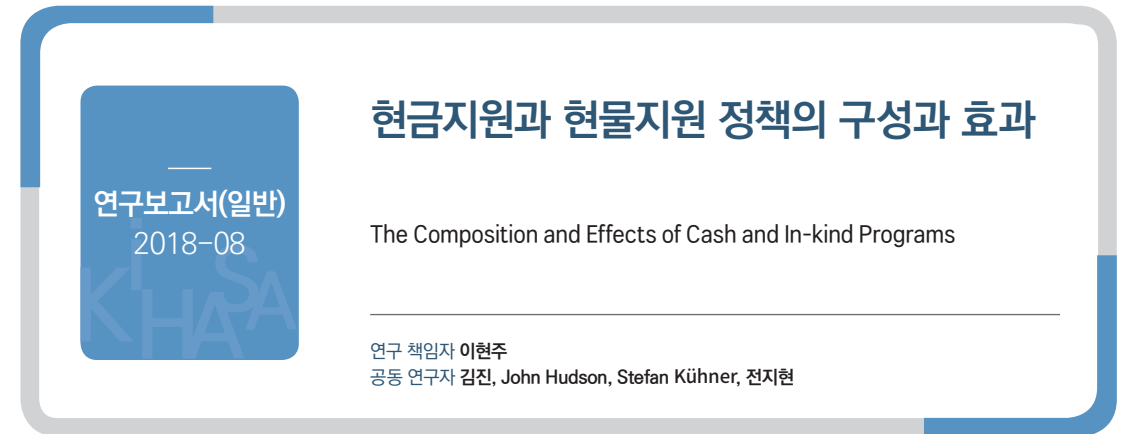
- 거시경제 구조로 ORANI-CGE 모형을 이용하고, 산업별 생산은 투입산출 구조를 이용함
 - 거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외생적 요인으로는 기술 수준의 변화, 자본 축적의 변화, 노동 공급의 변화, 수출 변화 등임
 - 국내 노동 공급 및 국내 노동 수요를 동시에 CGE 모형 내의 내생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이들로부터 노동시장 균형을 얻을 수 있음
 - 산업생산의 변화가 세대별 노동력 수요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세대별 수요 변화가 산업생산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환류효과를 동시에 고려 가능함

- 주어진 사회지출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증세의 경우를 검토하였음
 - 법인세로 조달하는 경우에 비하여 소득세로 조달하는 경우가 고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모형의 구조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법인세로 조달하는 요소소득 분배가 증가하는 반면, 소득세의 경우는 감소하고 있었음
 - 소득세로 조달하는 경우 가계부문의 실질소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정책 제언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만성적인 성장 동력 부족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경제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경제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사회지출 수준에 대하여 재원조달 방안별 파급효과를 분석하였음
 - 특히 동 주제에 대한 기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복지지출과 재원조달 문제를 하나의 분석틀 내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분석도구로는 호주방식의 ORANI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와 모형의 구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였음
 - 이 분석도구는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강구하는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 분야나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폭넓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음
- 주로 검토한 시나리오는 복지지출 수준이 정책적으로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법인세와 가계부문의 소득세 인상을 주로 검토하였음
 - 분석결과, 재원조달 방법에 따라 경제 전반에 대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초래함을 확인함

-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소득주도형 성장 전략에 대하여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음
 - 임금소득 증가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자 한다면 소득분배의 개선이 수요 증대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
 - 기존의 일반균형이론과 ORANI-CGE 분석 방법으로는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이 주장하는 형태의 정책효과가 얻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현물과 현금이라는 급여 형태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을 살펴보고, 각 급여 형태의 효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또는 추정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사회 구성원의 생활상의 어려움은 다차원적인 것으로 국가는 일부 욕구에 대해서는 현금(소득)지원으로, 일부는 현물(서비스)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함.
- 본 연구의 출발이 되는 문제인식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빠르게 발전하여 왔으나 사회 구성원의 불안은 그리 낮지 않다는 데 있으며, 현물지원의 저급성이 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함.

연구 내용

- 현금·현물지원의 변화: 공적 사회지출 분석

- 우리나라의 공적 사회지출 수준은 교육부문의 공적지출을 제외하고 OECD 평균과 비교하여 크게 낮음.
- 서구의 복지선진국과 비교할 때 노령과 장애 영역의 공적 사회지출이 공통적으로 큰 차이를 보임.
- 국가 비교를 보면 현물지원을 위한 지출의 국가 간 편차가 현금을 위한 지출의 편차보다 낮아서 기초육구 영역의 현물지원은 각국이 채택한 주요 정책임을 추정할 수 있음.

■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역사

- 각기 다른 정책적 특징을 가진 독일, 영국, 미국, 스웨덴을 중심으로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역사적 전개와 특징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정 시점 이후 선별적 소득보장인 순현금 제공에서 축약형 공적 제공을 거쳐 나가지만 일정 시점 이후 국가에 따라 순현금 제공으로, 준보편적 공적 제공이나 보편적 공적 제공으로 경로가 상이함.
- 각국의 정책 환경과 정책 지향이 낳은 상이함으로 해석됨.

■ 현금·현물지원 정책의 가치 논쟁: 가족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 현금·현물지원의 선택에서 자주 거론되는 가치 쟁점을 가족정책 영역에 초점을 두어 고찰한 결과, 급여 형태의 선택과 조합이 사회 가치, 정책 지향이나 목표에 따라 이루어 지고 성과의 차이로 이어짐.
- 아동빈곤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현금급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
- 현물 서비스는 현금급여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 선택권을 넓히고 구조화함으로써 부모 (및 잠재 부모)를 지원함.

■ 현금·현물지원의 효과

- 우리나라는 여타 OECD 회원국과 비교하여 소득 빈곤 외 의료비, 교육비, 돌봄을 위한 가계 부담이 크고, 성과지표인 기대수명, 학업성취도는 양호하며, 상대적으로 불평등 수준도 심각한 수준은 아님.
- 기초육구 영역의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를 차감한 조정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과 불평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의료비 차감 빈곤과 불평등은 가처분소득 빈곤율, 불평등보다 큰 차이로 나쁜 수준임.
- 정부가 추진 예정인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현금과 현물급여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에서는, 현재의 정부 정책 기획으로는 주거, 의료, 돌봄 등 현물지원의 빈곤과 불평등 완화 효과가 현금지원의 효과와 비교하여 더 클 것으로 추정됨.
 - 현금지원 중 아동수당 도입, 청년구직촉진수당, 기초연금 상향과 현물급여로 행복주택, 주거급여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노인돌봄 등 서비스지원, 교육비 경감 확대 등 주요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현금과 현물급여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현금지원의 확충으로 빈곤율은 0.77%포인트 낮아지고 소득갭 비율도 2.33% 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지니계수도 0.007 정도 낮아질 것으로 추정됨.
 - 현물 확충 효과로 빈곤율은 0.96%포인트, 소득갭 비율을 3.95%포인트 낮추고 지니계수는 0.009 정도 낮출 것으로 추정됨.

정책 제언

- 해외 복지선진국 중 삶의 질 수준이 높은 국가와 급여 형태별 지출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노령 현물, 장애인 대상 현금과 현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지원을 더 확충하면서 공적 사회지출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기획이 필요하며 이러한 기획에 종합 기획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보장제도 거버넌스 구조를 갖추는 것이 전제가 됨. 이와 더불어 앞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는 현금지원뿐 아니라 지체된 현물지원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정책을 기획, 추진하여야 함.

연구보고서(기본)
2018-13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 지원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and the Job Accommodation Schem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연구 책임자 오육찬
공동 연구자 김성희, 서정희, 심재진, 오다은

연구 목적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제도 사이의 관계 설정 필요

- 장애인의 고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편의 지원 제도의 마련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의무와의 법적 관계 설정이 중요함.

■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음의 연구 목적 설정

- 국제규범하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원칙을 고찰함.
- 한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적용 현황을 실태조사, 결정례 및 판례를 사용해 분석하고, 고용편의 지원 제도의 실태를 파악함.
- 주요 국가(미국, 영국, 독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고용편의 지원 제도를 분석하여 한국과 비교함.
-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과 고용편의 지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연구 내용

■ 국제규범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2018년 발표된 일반논평 제6호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접근권과 구분하여 사후적이고 개별적인 이행의 원칙을 확인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합리성 요건이 비용 합리성이 아닌 조치의 효과성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사업주가 의무의 이행 과정에서 장애인과 대화 및 협의를 통해 필요한 편의를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함.

- 유럽연합 고용평등지침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불비례적이거나 과도한 부담 판단 시 공적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유럽연합사법재판소가 판결을 통해 편의의 범위는 지침에 예시된 형태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점 또한 중요함.

■ 한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

-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미이행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지만, 편의의 내용이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적용 범위 또한 30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해석을 살펴본 결과, 법률에 규정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을 예시적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고 열거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었으며,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이 장애인등편의법이나 교통약자법의 기준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접근권에 대해서도 불비례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의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나타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공적 편의 지원이 고려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음.
- 한국의 고용편의 지원 제도는 물리적 편의와 비물리적 편의가 모두 지원되고 있는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특별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 제도는 상당 부분 신청 주체가 사업주로 한정되며, 신청 시기나 예산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장애인의 편의 지원 욕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구조를 갖고 있음.

■ 주요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고용편의 지원제도

- 본 연구에서 살펴본 국가 중 미국과 영국은 고용차별 금지를 장애인 고용을 위한 주된 정책 수단으로 삼는 국가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이 중요함. 반면 독일은 한국과 같이 장애인 고용 할당 제도와 그에 따른 고용편의 지원 제도를 장애인 고용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있음.
-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독일의 경우 개인의 권리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미국과 영국은 긴 역사를 갖고 있음. 이들 국가는 한국과 달리 법률에서 정당한 편의의 내용적 범위가 개방적인 것이 확인되며, 적용 범위에서도 미국은 15인 이상 사업장, 영국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한국보다 포괄적임. 또한 한국과 달리 불비례적이거나 과도한 부담을 판단할 때 외부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령 수준에서 확인됨.
- 고용편의 지원 제도에서 한국의 경우 보조금이나 현물 방식의 급여가 지원되지만 상대적으로 상담, 진단, 컨설팅 등의 비물리적 지원은 부족함. 또한 조세 지출 방식을 주로 채택하는 미국을 예외로 하면 고용편의 지원 제도의 신청 주체를 장애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한국과 차이가 있음. 미국과 영국의 고용편의 지원 제도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특히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도 주목할 만함.

정책 제언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입법론적 개선 방안

- 입법론적 개선 방안으로 정당한 편의의 내용을 개방적으로 정의하는 방안, 적용 대상 사업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불비례적이거나 과도한 부담 항변에 대한 판단 시 공적 지원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방안, 사후적·개별적으로 장애인과의 협상 및 대화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의 절차적 요소를 규정하는 방안, 불비례적이거나 과도한 부담 항변을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장애인 고용편의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 고용편의 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의 신청권 보장, 예산 제약의 해소와 지원 범위의 확장, 정당한 편의제공 상담·진단 서비스 개발을 제시함.

연구보고서(기본)
2018-15

치매노인과 돌봄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 방안 모색

Public Policy for the Older Adults with Dementia and Their Caregivers

연구 책임자 유재언
공동 연구자 배혜원, 이윤경, 임정미, 김수진, 정경희, 이선희

연구 목적

■ 치매노인과 다양한 돌봄제공자가 치매진행에 따라 겪는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들이 가진 어려움과 정책적 요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함

- 치매돌봄정책이 치매노인들과 돌봄제공자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제공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점검하고, 실효성 높은 치매돌봄정책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
- 현행 치매돌봄정책이 치매노인과 공식적·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다양한 어려움과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진단하고 평가함. 이를 통해 향후 치매돌봄정책이 모든 수요자의 욕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제시함

연구 내용

■ 국내외 치매돌봄 정책분석

- 국내 치매돌봄 정책: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 수립 이후 치매지원 서비스 대상자와 인프라 지속적 확대되었음. 그러나 돌봄정책의 명확성 확보 및 제도 간 연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제도구축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음
- 국외 치매돌봄 정책: WHO, OECD 등의 국제기구 및 일본, 영국 등의 선제적인 치매대응전략을 통해 1) 치매정책의 실행주체, 역할, 세부지표 및 전략 등의 명확성 확보, 2) 치매친화적 사회조성전략 운영안 제시, 3) 치매환자의 가족 및 돌봄제공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마련, 4) 치매연구를 위한 R&D 구축과 중장기적 치매정책 계획 수립, 5) 치매검진과정에서의 정책적 욕구 및 시사점 등을 도출함.

■ **치매검진참여율 분석 결과, 검진참여율 증가 외에 검사 이후 악화를 예방하는 실질적인 치매예방 정책 강화정책 요구됨**

- 1차 검진 비율은 약 80%, 2차 검진 비율은 40% 정도에 불과함
 - 치매검진 관련해서는 선별검사 이후 진단 및 감별검사에 대한 비용지원, 지역 치매 관련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과 전문인력 양성 필요함

■ **치매돌봄과정에서의 정책적 욕구 및 시사점**

-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어려움은 치매로 인한 행동정신이상증상의 다양성, 치매노인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 대한 돌봄의 부담, 가정 내 치매노인 돌봄을 위한 가족구성원의 역할 분담에서의 갈등, 공식적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었음
- 비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정책적 요구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경증치매노인 돌봄제공자 대상의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확대,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및 송영서비스 시설 제공, 장기요양시설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새로운 제도와 서비스에 대한 안내 및 홍보 강화, 보호자 대상의 교육·상담·자조모임 활성화였음
- 공식적 돌봄제공자의 어려움은 시설요양보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및 처우, 치매노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 및 갈등, 치매노인돌봄에 대한 전문성 미인정, 성추행에 대한 보호장치 부족 등이었음

정책 제언

■ **치매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의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와 서비스 제공**

- 치매안심센터의 치매예방, 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 및 관리, 사례관리 및 자원 연계 운영, 치매상태별 케어플랜 제공 및 경과 모니터링

■ **비공식적인 돌봄제공자를 위한 치매교육, 상담, 자조모임, 서비스 홍보 및 안내 등의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및 확대**

- 비공식적 돌봄과 공식적 돌봄의 균형정책 및 이에 대한 지원
- 전문적인 치매 및 치매환자 대응 교육,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 안내와 돌봄 휴식을 위한 자조모임, 상담, 휴가제 등의 다각적인 서비스 접근

■ **공식적 돌봄제공자를 위한 전문적인 치매지식교육, 노동자로서의 권익 보호, 처우 및 인식 개선 방안 마련**

-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및 처우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연구보고서(기본)
2018- 17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Ⅰ)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 Study on Welfare Expenditure for Improvement of Welfare of Local Residents (Ⅰ) : Centered on metropolitan municipalities

연구 책임자 고정환

공동 연구자 이연희, 신정우, 강지원, 김형수, 김승연, 신지영, 정영애

연구 목적

- **누구나 생애 동안 맞이하는 생로병사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정부와 사회보험의 재정지출을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료 수집과 표준화된 생산 등 체계화에 목적을 두며, 부수적으로 지역 간 복지지출의 격차와 불평등 완화방안을 탐색하는 등 궁극에는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지역복지지출통계의 체계화**

- 지역계정, 지역통계 용어가 중심어(key words)로 발간된 선행 연구를 고찰하고, NUTS 등 외국 지역통계의 생산 현황 및 사례를 분석함.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통계의 생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함.
- '지역복지지출'은 OECD가 권고하는 '복지지출'매뉴얼(SOCX: Social Expenditure of Database)의 개념과 체계에 따라 추계함

■ **데이터 수집 및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지출, 5대 사회보험의 급여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구축함
-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소 등의 지역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포럼을 운영함

■ **지역복지지출의 규모와 구조의 파악**

- 지역복지지출의 규모를 파악하고, 제도별, 자원별, 기능별 지역복지지출의 구조 분석.

- 제도별 구조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를, 자원별 구조는 일반 정부(중앙, 지방) 재원, 사회보험급여, 공기업 부담 등 및 변화를, 기능별 구조는 노령,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의 규모 및 변화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 분배지표로 지역복지지출 총액 분포와 인구 1인당 지역복지지출액, GRDP 대비 %.

정책 제언

■ 복지지출 수준 격차 비교를 위한 다각적 지표 검토

- 가령 사회복지지출 규모(총액)로는 경기, 서울이 높은 편이고 광주는 낮은 편이나, GRDP 대비 사회복지 수준으로 보면 오히려 광주가 제일 높게 나타남. 이는 어떤 변수로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측정하느냐에 따라 지역별 사회복지 수준이나 노력의 정도가 달리 나타난다는 것을 시사함. 따라서 자치단체 간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 분석 할 경우 복지 수준이나 노력을 제대로 비교할 다각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여야 함

■ 사회복지 수준 격차 중 자율성 진단 통계 구축

- 국가보조사업은 국가가 정한 의무사업을 추진하는 보조금으로 국가가 이양한 복지 업체에 대해 지자체의 자율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음. 이 경우 사회복지지출 대비 자체사업비 지출 비율로 광역자치단체 간 사회복지 수준 격차(불평등)를 진단하는 통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 격차를 완화하는 재정 확충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통계

- 광역자치단체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및 사회복지지출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별 통계 생산이 요구됨. 지역 복지 욕구 대비 복지지출은 광역자치단체별 사회복지 수준의 격차를 판단할 수 있는 질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음

■ 사회복지 수준 격차의 원인 탐색을 자원별로 분석

- 사회복지지출 비용을 재원(국비, 지방비)별로 구분하여 사회복지지출 불균형의 원인을 재원 출처별로 파악하고 그에 따라 대응 방안을 모색함. 사회복지사업별로 중앙, 광역, 기초 지역의 사회복지지출비의 부담금 정도를 파악하여 광역 지역의 수요 대비 재원 지출 격차를 확인하고 재원 활용 방안을 강구함.

■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필요

-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재정은 중앙-광역 국가보조율 부담(재정자주도와 복지 수요

기준)과 광역-기초의 배분(기초자치체의 재정 능력과 복지 수요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국에는 중간매개자로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요구됨. 광역 단위 수준에서 사회복지지출의 격차가 발생할 시 중앙-광역-기초 3자 간에 상호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며, 아울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보다 확충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기본)
2018- 01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Governance and Soci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연구 책임자 박아연
공동 연구자 강민아, 김경희, 정해식, 최현수, 신지영, 안민영

연구 목적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삶의 만족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음. 본 연구는 이들의 누적효과와 구조적 상호작용 효과를 적절한 통계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 삶의 만족도,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검토
 - 각 개념의 이론적 정의에 대해 논의하고 소득,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한계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
- 변수들의 탐색적 분석
 - 각 변수를 측정하는 하위 지표들을 선정하고, 지표별 시간적 변화 추이를 국가별로 살펴봄. 이 단계에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수들(삶의 만족, 거버넌스, 사회적 자본, 시민적 자유)의 변동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의 특성과 발전 단계를 확인하고 검토함
 -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변수들의 지표 체계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시행함. 이때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요인분석 및 군집분석을 한 이유는 분석 국가 범위를 확장하면 국가들 간의 발전 단계적 이질성이 높아 구성타당도를 평가하기가 다소 어려워지기 때문임. 요인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수행한 군집분석 결과, 추정된 군집들이 흔히 예상하는 국가 분류(복지국가형, 영미형, 남미형 국가 등)와 일치하게 나타남

- 향후 회귀 모형을 설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를 추정함. 이때 평활 스플라인 기법을 활용함으로써 변수 간 상관의 유연성을 높임

- 변수들의 구조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경로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과 집단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함. 국가의 발전 단계에 따라 설명 요인들 간 상호작용 효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한 후, 분석에 포함된 국가들의 중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고소득 국가와 저소득 국가를 나누어 분석함. 기존 연구와 달리 분석에 포함된 국가의 범위가 넓어 국가 발전의 단계에 따라 변수 간 상호작용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사회적 자본과 거버넌스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변수 간 상호작용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함
- 계층적 구조를 가진 변수들을 결합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하고, 변수들의 차원 축소를 시도함. 반복 측정의 형식을 띤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합형 상호작용 모형을 데이터에 적합시킴
- 저소득 국가와 고소득 국가의 구분은 분석 대상 국가들의 중위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고소득 국가들에 한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정책 제언

- 정부는 경제성장과 분배 정책뿐만 아니라 이번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제시된 세부 정책과제의 실천을 통해 정부와 사회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삶의 만족을 위한 물질적인 조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거버넌스가 사회적 신뢰 등 사회적 자본과 시민적 자유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만족도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부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개인의 효용(utility)을 높이기 위한 경제성장과 분배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정부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거버넌스 및 제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 정부혁신 종합계획에 제시된 새로운 실천 과제들은 기존의 정책과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임

■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임

-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 효과적 거버넌스 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상호 영향을 미침.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 또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한다는 것은 국민이 지향하는 방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었거나 나타나는 과정에 있음을 의미함. 다시 말해, 국민이 신뢰한다는 것은 거버넌스 체계가 정상적이고 그것을 지지한다는 것임

연구보고서(일반)
2018-48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Designing A Korean Welfare State Model V: Philosophical Foundation of Welfare State

연구 책임자 **여유진**
공동 연구자 **남찬섭, 조한나**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4년 이래 진행되어온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연구’의 5차 연도 보고서이자 본 기획을 마무리짓는 연구임.

- 본 연구는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사회, 경제, 문화적 특수성, 가족과 개인의 경제적 상황과 안녕의 실태에 대한 이해, 비교 국가적 관점에서 한국 복지국가의 현 좌표에 대한 인식의 바탕 위에 한국 복지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함으로써 ‘한국형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지향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되고 진행되어 옴.
-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복지국가의 역사적 흐름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한국 복지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통찰과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과정을 네 단계-응급구조 시기, 개발국가 시기, 민주화 시기, 외환위기 이후 시기-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의 연대, 시민권과 보편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그 경로 의존적 결과들을 기술함.

■ 먼저, 응급구조 시기는 한국 전쟁과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서구 복지국가에서 권력 자원 동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계급’ 자체가 실종되는 상황에 직면함.

- 그 결과 초기 노동계급의 형성 단계부터 연대의 억제와 억압에 직면함으로써 연대의 실질화 결과인 복지국가 지체에 큰 영향을 미침.

■ 개발주의 시기 복지제도의 특성과 그 영향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경제개발 중심으로 국가 기능이 편재되고 국가의 복지 제공 기능은 주변화됨으로써 현재까지도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전도된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됨.
- 둘째, 권위주의적 개발국가에 의해 도입된 복지제도의 보수적, 최소주의적 성격과 성장주의적 관점 또한 오늘날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와 같은 문제들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됨.
- 셋째, 권위주의적 정권의 성격으로 인해 사회복지나 복지국가를 둘러싼 민주적 정책 아레나가 형성되지 못함으로써 시민사회가 복지국가에 대한 학습 기회를 놓치게 됨.
- 마지막으로, 초기 사회복지제도의 형성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나 산업화 필요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 이로 인해 정착 '안정'의 기제가 필요한 불안정 계층보다는 비교적 고소득의 안정적 계층부터 사회복지제도가 적용됨. 그 영향은 사각지대의 편재와 분절화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민주화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4대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사회서비스 관련법의 제정, 최저임금제도 도입 등 사회복지와 관련 제도의 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

- 하지만 이 시기에도 개발주의가 소멸되기보다는 권위주의적 개발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개발주의로 그 형태와 성격을 바꾼 채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침.
- '성장 중심'과 '시장 중심'성으로 인해 '저부담-저복지'의 기조가 강화되었으며,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거나 정체됨.
- 또한, 하향식 사회보험 확대에 의한 한계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됨. 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하층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배제되었고 이는 이후 전 국민에게로 사회보험이 확대된 이후까지 '빈 허리'의 문제를 남겨놓게 됨.

■ 외환위기는 사회안전망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됨.

- 이후 산업구조조정,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점들이 본격적으로 제기됨으로써 사회복지 확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됨.
 - 또한 진보적 성격의 정권이 연이어 집권한 것도 이 시기 사회복지의 급격한 확대와 복지국가로의 도약의 주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이 시기는 사회복지 발달사에서 '결정적 시기'라 칭해질 수 있을 만큼 사회복지의 제도적 확대,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 국내총생산에서 공적 사회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급격한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짐.
- 하지만 복지국가 발달 과정에서의 경로의존적 한계도 여전히 남아 있었음.

-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는 그 당시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잔여주의, 선별주의, 워크페어적 성격을 드러냈으며, 실제로도 3대 사회보험의 형식적 개보험화 이외에 구휼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를 현대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면 개편한 것 외에 두드러진 복지국가로의 전환 의지를 찾기는 어려움.
- 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사회투자국가는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진일보한 관점으로 평가할 수 있음. 하지만 근로장려세제의 도입과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 등에서 비춰지는 친시장중심성을 통해 볼 때, 개발주의 유산이 전략적 선택과 선택적 투과성의 범주를 여전히 제약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이 시기 사회보험의 개보험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 근로자와 영세 자영자의 상당수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됨. 또한 산업화 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함으로써 민간 공급체계를 주도로 사회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으로써 공공성과 서비스의 질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한계로 남게 됨.

■ 요컨대, 우리나라는 2014년을 기점으로 국내총생산의 10% 이상을 공적 사회지출로 사용하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상병급여를 제외하고 선진 복지국가에서 갖추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를 구비하고 있음.

- 단기간의 복지 확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지만, 하향식 복지확대의 한계로 인한 '빈 허리' 문제, '공공성이 결여된 보편주의'의 문제, 여전히 지배적인 성장중심적 개발주의 인식의 유산 등이 극복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음.

정책 제언

■ 한국 복지국가는 지난 20여 년, 좀 더 확장해 30여 년간 도약에 가까운 발전을 거듭해 옴.

- 먼저, 개발주의적인 유산을 극복하고 좀 더 '경제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복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빈 허리'의 문제는 향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임.
 - 가장 불안정한 집단들-저소득의 불안정한 비정규직, 영세자영자, 미취업 여성 등-을 포괄하지 못한다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제'로서의 복지국가의 기능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늦은 출발과 이른 조정'으로 인해 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며, 소득보장에 있어 좀 더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는 늦었지만 서둘러야 할 과제임.

연구보고서(일반)
2018- 30사회통합 실태 진단 및 대응 방안 연구(V):
사회갈등과 사회통합A Study of Social Conflict and Social Cohesion in Korea with Policy
Recommendations연구 책임자 정해식
공동 연구자 김미곤, 여유진, 김성근, 류연규, 우선희, 김근혜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우리의 사회통합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향과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연구 사업의 보고서로, 2018년에는 ‘사회갈등과 사회통합’을 연구 주제로 하였음.
- 본 연구는 유형별 사회갈등의 양상을 밝히고, 한국 사회의 각 개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 경험과 그 처리 과정, 그리고 그것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 사회계층에 따른 갈등 인식과 (재)분배에 대한 태도 분석
 - 우리 사회의 계층갈등 인식은 객관적 소득계층보다는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 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이는 실제 소득보다는 종합적으로 인식된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계층갈등의 중심축임을 의미함.
 -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특히 주관적 소득계층에서 하층이 중상층에 비해 이러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음. 세대 내 이동의 가능성, 세대 간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 저소득층 혹은 하위계층이 가장 비관적인 입장을 보였음
 - 국가 개입과 복지 태도 등의 영역에서 중간층의 보수화, 혹은 자기 이해적 접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음.
- 젠더갈등과 사회통합
 - 사회적 젠더갈등 인식의 균열 지점을 찾아본 결과, 성별보다는 미혼, 청년세대일수록

사회적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실업자 혹은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젠더갈등을 조금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치적으로 보수적 성향일수록 젠더갈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미투운동 등으로 젠더갈등이 첨예화된 시점에서 보수적 성향의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이 심각해진 것으로 유추되었음.
- 사회적 젠더 불평등 인식에 대해서는 임금 또는 취업 및 승진 분야에서 특히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세대별 인식의 분기와 사회통합

- 세대별 인식의 분기 상황을 분석한 결과, 세대, 특히 비교적 젊은 세대는 실제 소득과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계층의 간극이 크지 않은 집단으로, 계층적 이해와 세대의 이해가 일치할 가능성이 다른 어떤 집단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들 집단에 대해 현실적이며 욕구 해결 중심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자유와 평등의 가치 지향에서 민주화 이후 세대가 개인자유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는 급진적 변화 필요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음.

■ 공공갈등과 사회통합

- 우리 국민들은 공공갈등이 자주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발생 원인으로 '소통문화의 부재'나 '전반적인 사회신뢰의 부재'를 언급하고 있음.
- 공공갈등의 해결과 관련하여 정부나 지자체가 갈등 해결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갈등 해결에 적절한 법이나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라고 응답하였음.
- 공공갈등과 사회통합의 관계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공공갈등은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요소라고 인식하지 않음. 따라서 공공갈등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공공갈등을 최대한 줄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당한 정책집행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사회갈등과 사회통합 실태조사」가 밝히는 계층갈등, 젠더갈등, 세대갈등은 가치관 갈등과 이해관계 갈등의 복합적 지점에 있음.
 - 이를 위한 갈등 해결의 프로세스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부 역할의 공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또한 이해관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조정자로서 각종 이해관계의 배경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여러 기본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이해관계에 기반한 갈등 상황을 사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일반)
2018-38

201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e 2018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연구 책임자 김태완, 이봉주
공동 연구자 오미애, 이주미, 신재동, 정희선, 이병재, 최준영, 박나영, 강상경, 박정민, 유조안, 정원오, 백승호, 김화선, 신유미, 김정욱

연구 목적

- 국민들의 삶의 영역에서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그에 따라 정부의 정책 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 변화에 따라 풍부한 지식과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 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는 조사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한국복지패널(KOWEPS)'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층의 가구 형태, 소득수준, 취업 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층의 규모 및 생활 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연구 내용

- 표본추출
 - 한국복지패널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종단면 조사임.
 - 최초 원표본 가구 규모는 7,072가구이며, 조사 대상은 표본 가구와 표본 가구에 속한 15세 이상 가구원, 그리고 부가조사 대상으로 구분됨.
- 조사표 구성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 조사표, 가구원 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 조사표는 가구원 공통 항목에 대한 설문 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 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설문 내용이 구성됨.
 - 아동, 복지 인식,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순환 주기에 따라 2018년 13차 조사에서 아동에 대한 다섯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함.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패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응답한 내용을 현장에서 CAPI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면접 조사를 원칙으로 함.

■ 2018년 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수행 결과

- 조사 완료 가구
 - 12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 대상 원표본 4,389가구 중 4,266가구를 조사 완료하여 원표본 가구 기준 조사 완료율은 97.00%로 높은 수준임.
 - 13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4,266가구에 더해 기존 분가 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분가 가구를 포함한 731가구, 신규 패널 가구인 1,500가구 중에서 조사가 완료된 1,477가구까지 총 6,474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96.50%)하였음.

■ 13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한 기초분석 결과 제시

-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경제활동 상태, 가구경제(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등), 주거 및 건강, 가족, 생활 실태와 자원활동, 사회보장 관련, 장애인 부가조사의 기초분석 결과를 제시함. 또한 13차까지의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빈곤 및 소득 동태분석, 생계 및 의료지원 이용 경험의 변화, 아동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함.

정책 제언

■ 한국복지패널은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함.

- 국민의 복지 실태와 복지 욕구를 정태적, 동태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는 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선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복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적 인프라 제공이 가능함.
-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문 분야별 연구 활성화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39

201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해외 주요 패널과의 비교 연구

The 2018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An In-depth Report - International Comparison of Panel Studies in Selected Countries

연구 책임자 김태완
공동 연구자 이병재, 이주미, 최준영, 김기원, 박수지, 송치호, 주찬희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복지패널을 해외에 알리고 그 성과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행 되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과제를 진행함.

- 첫째, 복지패널을 해외에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주요 패널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특성을 파악하고, 각국의 패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복지패널의 해외 연구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현재 국내 연구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복지패널의 조사표, 유저가이드 등을 영문화하는 과정을 진행함.

-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 유럽, 아시아에서 오랜 기간 조사가 진행되었고 활용도 또한 높은 주요 패널을 분석함.

- 해외의 주요 패널로는 미국의 소득역동성패널연구(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PSID, 이하 PSID), 영국의 가구패널조사(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BHPS, 이하 BHPS), 독일의 사회경제패널(Socio Economic Panel: SOEP, 이하 SOEP)를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아시아 국가의 패널로는 일본의 가계패널조사(Japan/Keio Household Panel Survey: KHPS/JHPS, 이하 KHPS/JHPS), 대만의 가정 동태 데이터베이스(Panel Study of Family Dynamics: PSFD, 이하 PSFD)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연구 내용

■ 영국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BHPS)

- BHP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패널의 국제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임.

- 패널의 국제화를 위해 주요국이 모여 패널 자료와 연구를 공유하는 CNEF에서 해당 패널을 공유하고 있으며, 격년 단위로 국제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음.
- 자국 및 해외 패널 활용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사용자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패널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미국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PSID)

- 미국의 PSID는 1960년대에 시작된 오래된 패널임에도 끊임없이 패널 확산과 우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먼저 패널조사 관리 측면에서 조사 대상자, 조사원 등의 패널조사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답시간에 대해 조사하고, 어려운 질문과 쉬운 질문 등을 구분하여 어려운 문항에 대상자들이 조금 더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함.
- 표본과 관련해서는 시기별로 중요한 패널표본을 추가하거나(이민자 패널) 분가가구에 대한 관리 강화로 패널표본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줌. 특히 분가가구의 경우 1960년대 패널이 시작된 이후 약 4세대까지 조사가 이루어져 생애주기는 물론 세대 간 연구가 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 PSID 역시 영국의 BHPS와 같이 CNEF에 정형화된 패널조사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국가의 연구자들이 PSID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독일 Socio Economic Panel(SOEP)

- 독일의 SOEP는 영국의 BHPS와 함께 유럽의 대표적 패널로서 독일의 현대사를 반영하듯 표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는 특성을 지님. 예를 들어 독일의 통일을 추진하며 동독 주민과 이후의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이민 및 난민 등을 포함하는 등 독일의 인구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최근 독일의 생활상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패널의 조사표를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시의적절한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SOEP 역시 패널의 국제화를 위해 유럽국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LIS, LWS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 CNEF에도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일본 JHPS/KHPS

- 일본 JHPS/KHPS는 일본의 대표적 패널로서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패널조사 자료임.
- KHPS와 JHPS는 각각 개별 조사로 실시·관리되어 왔지만, 2014년부터 '일본가계패널 조사(JHPS/KHPS)'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조사내용은 경제활동상태, 소득 및 지출, 주거, 교육, 건강·의료 등 복지패널과 유사한 부분이 많음.
- JHPS/KHPS는 국제연계를 위해 LIS, CNEF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외에 국제기구 등에 비교 연구 제공은 물론 관련 자료 제공도 하고 있음.
- 자국민을 위해서는 연간 패널데이터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등을 운영함으로써 패널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대만 PSFD

- 대만의 PSFD는 초기에 대만에서 시작되었지만, 이후 중국 본토까지 확대되는 과정을 거쳐 중국의 대표적 패널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있음.
- PSFD 역시 다양한 조사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사회의 가족 등과 관련된 주요 변화상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자료가 구축되고 있음.
- 반면 다른 비교 대상 패널과는 다르게 해외 패널과의 교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정책 제언

■ 해외 패널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통적인 시사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외부기관 등과의 협업으로 조사를 위한 편당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임.

- 복지패널의 경우 매년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조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다르게 해외 패널의 경우 외부에서 편당을 지속적으로 받고 관련 기관의 욕구에 부합하는 연구는 물론 자체 연구를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서로 보완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 패널과 관련된 데이터 설명회, 학술대회 혹은 별도의 컨퍼런스 등에 관련 기업이나 재단 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활용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면 연구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음.

■ 둘째, 패널 이용자를 관리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더불어 패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임.

-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패널이 학술대회를 중점으로 하여 이용자 관리를 하고 있지만, 해외 패널의 경우 패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 또한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패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패널 이용자 모임을 관리하고 관련 의견 등을 청취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

- 점진적으로 이용자 편의와 패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 설명회와 학술대회를 콘퍼런스 혹은 워크숍의 형태로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이용자 모니터링을 동시에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해외 패널과의 지속적 교류임.

-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의 주요 패널은 CNEF 혹은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외 패널과의 지속적 교류를 진행함으로써 패널을 홍보하는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의 경우 CNEF 혹은 해외 패널과의 교류 등을 모색한 바 있으며, 패널을 국제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에 대한 고민과 패널조직의 한계(인력, 전문조직 등)로 패널의 국제화가 충분히 진행되고 있지 못함.
- 향후 복지패널 또한 국내 타 패널 연구와 연합하거나 해외 패널과 연계해 공동 컨퍼런스 등을 개최함으로써 한국복지패널을 점진적으로 국제화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의 주요 연구 결과가 향후 한국복지패널의 발전에 주요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패널이 오랜 기간 유지됨으로써 주요한 연구자료와 국가통계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람.

03

2018년 연구 성과

04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I):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 지역 정신건강증진서비스 공급체계 확충방안

연구보고서(기본)
2018- 09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Localization and Welfare Disparity: Focusing o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연구 책임자 함영진

공동 연구자 김희성, 김태은, 이석환, 최항석, 최조순, 홍진이, 권영빈, 김진영, Katja Ilmarinen,
Paula Saikkonen

연구 목적

■ 지역복지 전달체계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위의 미시적 공간을 분석을
수행하여, 복지전달체계 여건 개선 및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다양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행·재정적 여건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복지 전달체계의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서비스 집행력과 접근성의 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지역 여건의 격차는 복지수요 대비 복지공급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전달체계 여건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에서 균형적·균질적인 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취약지역 또는 과소지역을 중심의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실태 파악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전달체계 구성요소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연구 내용

■ 공공복지 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아우르는 지역 간 복지격차의 다각적 분석을
통해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음.

-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분권 및 복지분권과 복지격차 간의 관계성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선행연구 검토는 제도적 관점에서 지방분권을 설명하고 복지분권과 복지격차 간의 관계성을 기술하였음.
 - 복지격차와 관련된 기존 문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복지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변수와 지표를 검토하였음.

- 복지전달체계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복지격차 분석

- 2017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누적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여건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규모별 복지격차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음.
- 2016~2017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여건에 따른 지역 간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격차를 분석하였음.
-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복지지출 및 복지시설 등 주요 복지지표를 중심으로 지역 간 복지 불평등도와 변화행태를 분석하였음.
- 노인을 중심으로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복지공급의 비형평성 분석을 수행하였음.

- 국내외 지역복지 격차 관련 정책사례 분석

- 국내 사례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을 살펴보고, 국외 사례로는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이용 격차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별 정책 대안을 살펴보았음.

- 앞서 분석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전략 및 개선 방안 제시

- 전달체계 구성요소 문제를 짚어봄으로써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정책 제언

■ 지역복지 격차 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언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여건 측면에서 조직, 인력, 복지 수요 및 자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지역복지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요구되며, 주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의 제언을 도출함.
 - 지역 특성 및 규모 차이를 고려한 제도 및 정책 설계 필요
 -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효율화를 위한 지역 간 연계 필요
 - 지자체 재정 및 복지담당 인력 확충
 - 지역단위 복지시설 및 제공기관 불평등 문제 해소 필요
 - 지역복지 취약지역 지원 필요
 - 현황 진단 및 목표수립을 위한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및 데이터 관리 필요
 - 범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연구보고서(기본)
2018- 10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
체계 연구(II):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II)
: A Focus on the Local Governance for Welfare Services연구 책임자 강혜규
공동 연구자 안수란, 류진아, 진재문, 엄태영, 홍재봉

연구 목적

■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력,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

- 대표적인 복지 부문 지역 거버넌스 유형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과·영향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
- 지역 단위 복지 거버넌스 작동의 주요 동인, 지역별 구성 특성, 거버넌스의 순기능과 역기능, 사회복지 공급부문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관련 정책 개선 및 지원 여건 마련에 기여

연구 내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 분석

- 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복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희망적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
- 협의체 활동은 민관 협력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풀뿌리 민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가능성을 발견
- 지역사회복지에 투여되는 공공 재원의 부족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자원이 발굴·개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
- 향후 사회적 경제, 공동체 만들기 등 구체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고 있음을 발견
-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공공 간사 및 민간 간사의 의지와 열정,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태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적절성과 자발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민간기관 중심 지역 거버넌스 사례 분석

-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 문제는 전통적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거, 세대 갈등, 정신건강, 다문화 문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인
-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 요인으로는 참여의 적극성, 참여 주체의 협력적 관계 형성,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시각·이슈·목표 설정, 기본적 이해·필요성 인식, 공공과의 관계, 조직 대표의 이해와 승인, 지역사회 자원 보유 등으로 분석
-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의 성과는 지역주민의 변화(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 태도·행동·인식의 변화, 욕구의 충족 등), 지역사회의 변화(지역복지 증진, 지역 내 지원 체계 형성 등)를 확인

■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

- 사례조사 결과 시민사회단체·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형성은 대체로 지역사회 내에 구체적인 문제·이슈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 이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진행되어 왔음.
-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인력의 역량, 유연한 운영, 명확한 역할 분담, 행정기관과의 거버넌스 확장이 이들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으로 파악

정책 제언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서, 유능한 간사(특히 민간 간사)의 확보와 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간사 양성 과정을 포함하는 사무국의 강화,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인력의 업무 연속성 및 독립된 집중 부서의 확보와 세대 간 인력 재생산, 시스템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의 확보 등을 제언

■ 민간 복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지도력을 갖춘 리더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 전개,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행할 인력의 확보,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의 유연성 보호를 전제로 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제언

연구보고서(기본)
2018- 1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효율화 방안 연구 - 규모의 경제효과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iciency plan of social service providers: focus on the economy of scale

연구 책임자 이철선
공동 연구자 김윤수, 조혜경, 허대원

연구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매출과 자본조달의 제약으로 소규모화되어 종사자 처우 개선의 여력이 부족

- 최근 최저임금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수가는 상승했지만 제공기관 중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이 66.7%, 연 최대 매출액이 3억 원 정도로 종사자 처우 개선 능력이 낮음

■ 제공기관들의 규모화를 위해 시민 중심의 사회적 자본 기반과 연계한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 및 자금조달 개선 방안을 모색

- (수요 확대) 중앙정부의 자원봉사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사업 특성을 벤치마킹해 사회서비스 촉진 대안을 개발
- (자금조달) 채권 발행 가능성과 사회적 금융 등 제공기관의 장기 타인자본조달 가능성을 검토

연구 내용

■ 현황 분석: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규모화 현황과 한계점

- (사업 현황) 직접 돌봄 관련 이용자 수가 감소하는 대신 제공인력과 기관의 급속한 증가로 제공기관의 소규모화 진행
 - (규모 정도) 2017년, 돌봄 종사자 1인당 이용자 수는 3.6명, 제공기관당 인력은 14.5명, 제공기관 평균 매출액 3억 3000만 원, 종사자 규모 3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66.8%

- (한계점) 근로시간 부족, 기관 등록제로 인한 일반관리비 증가, 높은 영업이익률에도 자금 축적이 어려워 제공기관의 규모화에는 한계점

- (근로시간) 2017년 총종사자 약 9만 2000명 중 60시간 미만 23.2%, 60~174시간 60.1%.

■ 대안 모색: 사회적 자본 기반의 사회서비스

- (방향) 사회적 자본 기반의 자원봉사·기부(기금) 등을 공공 사회서비스와 연계, 수요 확대와 자본조달 환경을 개선

- (수요 확대) 자원봉사자에 한해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 교부하거나 가격 할인을 통한 수요 확대 유발 방안을 검토
- (자본조달) 제공기관 자체의 타인자본조달 가능성과 기부 및 기금 등을 포함한 사회적 금융 이용 가능성을 검토

- (검토과제 1: 사회적 자본 형성과 사회서비스 연계) 중앙정부에는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이, 지자체에는 '지역화폐'가 존재하나 모두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는 부족.

- (정책 방향)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사업에 공공 바우처 사업을 연계하되, 돌봄 포인트를 정액제 사회서비스 구매 할인권으로 전환(본인분담금 감면)하고, 가맹점을 확보.

■ 수요 확대와 자본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 검토

- (결과) 수요 확대 차원의 5대 세부 과제는 긍정적이나, 자본조달측면에서 채권 발행과 사회적 금융 이용 가능성은 한계

정책 제언

■ 본 연구 결과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수요 확대를 위한 서비스 구매 할인권 도입과 제공기관의 장기 타인자본조달체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보완 과제 추진이 필요

- (수요 확대) 서비스 구매 할인권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자체의 자체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회서비스 사업과의 연계 추진
- (자본조달) 사회복지법인의 채권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과 사회적 경제 금융 활용을 위한 관련부처의 대응 필요

연구보고서(기본)
2018-12**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Strengthening Social Service System:
A comprehensive analysis of social service protection연구 책임자 안수란
공동 연구자 강혜규, 전진아, 유재연, 김혜승, 조현성, 남재욱, 송아영, 송나경, 하태정**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보장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실태를 생애주기별·영역별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 정책적 측면에서의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

- 범부처 사회서비스 행정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영역별 사회서비스 보장성을 정책 설계 측면(적용 대상과 사업 범위의 포괄성)과 정책 결과 측면(수급 범위와 급여 수준)으로 나누어 분석함.
- 사업 수로는 생애주기를 특정하지 않은 사업군의 비율이 높으나 예산 규모로는 영유아 대상 사업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생애주기별 사업은 특정 생애주기 인구집단이 처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연령 통합적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함. 소득 기준 없이 보편적으로 설계된 사업 비율이 높으나 성인, 노인 대상 사업군에서 선별적 특성이 나타남.
- 신체건강, 돌봄, 문화, 교육 영역 사업군의 수급 범위는 높게 나타나나 정신건강, 안전·권익보장 영역 사업군의 수급 범위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영역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충 방식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

■ 이용자 측면에서의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 진단

- 2015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특성에 따라 이용 대상의 포괄성(수요 충족률), 급여수준의 충분성(시간 충분성 및 비용 적절성)을 분석함.
- 돌봄 영역을 제외하면 영역별 수요 충족률은 30% 이하로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 가구의

수요충족률이 비교적 높아 정책 설계와는 달리 실제적 이용은 서비스 제공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용 시간 충분성과 비용 적절성은 생애주기별·영역별 차이를 보이나, 비용 부담에 대한 저항이 낮게 나타나 사회서비스 확대 전략에서 탄력적 가격 적용의 가능성이 확인됨.

■ 주요 사회서비스 영역 보장성 쟁점 도출

- 돌봄, 정신건강, 안전 및 권익보장, 고용, 주거, 문화 영역의 보장성 쟁점을 검토함.
- 이용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과 사각지대, 급여량의 충분성, 대상별 또는 급여 간 지원 형평성 문제가, 공급자 측면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예산 불충분, 서비스의 지역 격차, 유관 서비스 기관 간 협력 체계 부족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됨.

정책 제언

■ 사회서비스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종합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세분화하여 제안함.
 - (보장 영역) 특정 생애주기 특정 기능의 투자 집중 → 육구의 위기도, 사업의 수익성 등 사회서비스 특성에 따른 서비스 유형을 구분한 국가 주도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 (보장 대상) 보편적 정책 설계 + 저소득 중심 서비스 이용 체계 → 영역별 육구의 사회화 수준을 반영하여 적용 대상 범위 단계적 확대
 - (보장 방법) 영역별 예산, 공급 인프라, 인력, 프로그램 다양성 격차 → 도입기, 정착기, 고도화기 등 영역별 발전 단계를 고려한 다층적 차별적 전략 마련

■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 사회서비스 정책을 총괄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부처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 공유, 사회보장 체계 내의 사업 관리 영역 현행화를 촉진할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사회서비스 정책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확립

- 중앙부처 간 수평적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서비스 영역별 관계부처 회의체 또는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함. 특히 안전 및 권익보호, 주거지원, 문화 영역의 통합적 정책 관리 논의가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정책 영역별 공통의 사회서비스 성과목표와 지표를 설정·관리하고, 성과평가 결과의 책임을 관계부처가 공유하여 실질적 협력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범부처 사회서비스 제공의 통합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야 함.

연구보고서(기본)
2018-45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Study about the Improving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연구 책임자 오윤섭
공동 연구자 이아영, 강지원, 주찬희, 고경표

연구 목적

-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공급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시설 평가제도를 분석하며, 국외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관리 체계 합리화 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연구 내용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복지시설 및 시설 서비스는 정책 입안자가 시설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여러 특성을 지님.
 - 예컨대 복지서비스의 무형성은 품질 관리와 시설의 서비스 역량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은 저장 불가능성, 장소 결합성과 함께 시간적·공간적 서비스 수급 불균형과 접근성 문제를 야기함.
 - 이러한 시설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복지시설 정책은 시설 서비스의 수급 균형, 품질 보장, 적정 서비스 가격 유지와 같은 정책 목표를 가짐.
 - 현재 직면하고 있는 시설 서비스 정책의 현안과 장기적 방향은 나라별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의 지역별로도 다를 수 있음.
 - 결국 누가(중앙, 지자체, 제3의 기관 등) 어떤 방식으로 시설 서비스 제공에 개입해야 하는가는 역사적 과정에서 형성된 복지시설 서비스 공급 환경에 좌우됨.
 - 우리나라의 복지시설 정책은 우리 지역 현실이 반영되어 합리적인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이 고안되어야 함.
 - 복지시설 서비스 정책은 정부의 서비스 공급 범위, 제공 방식, 재정 지원, 품질 관리, 관리·감독, 기타 규제 수단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됨.

- 현재 시행 중인 시설 평가제도 역시 시설 평가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대다수 평가 내용은 법규 준수 사항이며, 일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

■ 국외 사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국 사회서비스 관리 체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서비스 품질 저하 및 수급 불균형 등의 서비스 제공 실패에 대한 대응에 중점을 둔다는 것임.
- 독일에서는 복지평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등 관리·감독제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특징이 있으며, 시설과 서비스의 품질 감시 및 감독에 필요한 권한이 감독기관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정책 제언

■ 시설 설치 신고제에 따라 복지시설 운영 수준이 운영 주체와 규모별로 다르므로 복지시설 유형별 최저 운영 수준을 유지하는 문제는 복지시설 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 동시에 시설 서비스의 품질 개선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시설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한 별도의 관리제도가 없었다. 품질 개선을 위한 시설 평가가 시행되고 있지만, 전체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 내용도 서비스의 질적 개선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최저 기준을 평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복지시설 운영의 최저 수준 관리 문제와 프로그램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별도의 정책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복지시설 평가제도는 시설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 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먼저 복지시설 유형별로 복지 관련 학계나 전문가 그룹이 현시점에서 인정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하여 각 시설 유형별 평가 프레임워크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전 시설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품질을 단기간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유형별 프로그램과 서비스 차원 평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평가 전략 계획에는 평가의 목표, 이에 상응하는 평가 프레임워크(평가 항목과 평가 지표), 평가 주기, 평가 전문위원, 평가 체계, 평가 후 조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시설 관리 정책에서 국외 사례, 특히 독일과 영국의 예에서처럼 시설 관리 정책의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
연구보고서(수시)
2018- 01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Integrated Indicators for Measuring Social and Economic Values of the Social Economy in Korea

연구 책임자 임성은
공동 연구자 문철우, 이은선, 윤길순, 김진희

연구 목적	■ 사회적경제의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개념, 범위, 흐름 탐색 ■ 사회적경제기업 유형화를 통해 공통적이면서도 다양한 특성 고찰 ■ 사회적경제의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국가통계로서의 공통 및 개별 지표' 제시
연구 내용	■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특성 고찰 -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역사, 사회적경제기본법(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법안) 파악 - 사회적경제기업의 유형 및 특성 분석 ■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산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 -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산출 방식 고찰 - 주요 국제기구(UN, OECD)의 사회적경제 통계지표 비교분석 ■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안) 분석 - 통계지표(안) 도출 개요 -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계지표(안) 제시 ■ 사회적경제의 사회·경제적 가치 측정을 위한 통합 지표(안) 제시 -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공통 지표'와 개별 사회적경제기업 특성 및 목적을 나타내는 '개별 지표'로 구분

정책 제언

- (지표 제안) 경제적 지표와 사회적 지표로 단순 이분하는 대신, 이 두 가지 특성이 모두 반영되는 전체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의 공통 지표와 일부 사회적경제기업의 고유특성이 반영되는 개별 지표로 구분

- (4개 개별 지표)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액', '협동조합 조합원 수 및 출자금', '마을기업의 지역 주민 고용률', '자활기업 참여자의 자활급여 대비 임금 증가액'
- (6개 공통 지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존율', '사회적경제기업의 유급 임금근로자 수', '사회적경제기업 유급 임금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 '사회적경제기업의 유급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수준',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액'

- 사회적경제 국가통계의 단계적 개발을 위하여 향후 법안 통과 이후 보완 사항

-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 시 공통 설문 문항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리·지원을 담당하게 될 부처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문항 개발과 데이터 구축이 요구
-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주가 확정되면 전체 및 기업 유형별 통계지표에 대한 단계적 개발 필요
- 중장기 관점의 사회적경제기업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목적 혹은 사업 내용 등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로 논리모형을 적용해 성과 혹은 가치를 측정할 필요
-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의 가치 수준을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책적으로 지원해 전반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요구

연구보고서(수시)
2018-03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지자체의 제4기 계획 수립-실행 지원 연구

Understanding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연구 책임자 강혜규
공동 연구자 김보영, 주은수, 채현탁, 이지영, 김태은, 이정은, 김진희

연구 목적

- 2018년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앞서 지난 10년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화를 검토하고 계획 수립의 목적과 의미, 활용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함.

- 본 연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의 담당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원칙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목적과 의미, 근거와 내용, 활용과 과제 등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계획 수립 전반의 이해를 증진시킴.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사회의 진단, 주체별 역할을 확인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과 평가, 환류과정을 제시하고 단계별 논의를 정리함으로써 계획의 정책적 활용을 제고할 수 있음.

연구 내용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 및 의의를 검토하고 전반적인 계획수립실행과정의 필요요소를 확인, 발전방안을 제시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배경으로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의미와 취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화, 기수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특징을 서술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현황을 분석, 제시함.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근거와 기준, 지역사회보장계획(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의 수립 절차를 소개함.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초와 근본적 이해를 위한 주요 용어 및 개념을 서술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준비단계
 - 계획수립의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을 소개함. 추진체계의 구성 및 운영, 역할분담의 원칙, 시도 공무원, 시군구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광역 연구기관 지역주민 등 주체별 역할을 제시함.
 - 지역사회 진단을 위한 방안을 상세하게 안내함. 지역사회보장조사의 실시(조사 및 현황 파악, 진단과 분석, 방향성 마련) 방안과 지역사회보장지표의 활용을 중심으로 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활용
 -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 방안으로서, 신규사업의 기획 방안, 성과지표의 설정 요령 등을 제시함.
 - 계획 수립 이후 그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체계의 운영 방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활용 및 환류 방안을 소개함.

정책 제언

- 본 연구결과는 지자체 계획 수립 담당자의 기본서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보장계획 취지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을 지원하게 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위상과 현황을 진단하여 향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토대를 마련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와 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평가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망라하여 후속 연구의 출발점으로 활용

연구보고서(일반)
2018-26

지역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공급체계 확충 방안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Reinforcing the Community Mental Health Care Systems in Korea
: Focusing on Community Care for Severe Psychiatric Disorders

연구 책임자 이상영

공동 연구자 채수미, 전진아, 윤시몬, 차미란, 정진욱, 윤장호, 김영우, 김주혜

연구 목적

-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재활 촉진 등을 위해 시설에서의 보호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강조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공급 주체 간 업무 및 서비스 연계 강화, 서비스 공급 주체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등 측면에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 내용

■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관련, 최근 법제도적 변화는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2018년 6월 7일 “커뮤니티 케어 추진 방향”(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강화) 발표 등이 있으며,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 등을 계기로 2018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 이 대책들은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지원 확대를 전제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복지 서비스 강화, 재활 및 사례 관리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의 정신질환자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관리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의 지역사회가 중증 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축적해 왔는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함.
-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관리와 관련된 또

하나의 모멘텀(momentum)이 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사회 여건, 서비스 공급 자원, 제도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심층 면접 조사 및 설문조사 실시**

- 심층면접조사는 병원급 및 의원급 정신의료기관,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조사표에 의한 설문조사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에 대한 문제점은 아래와 같음.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 서비스 공급 기반 취약하였으며, 환자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함.
- 기초 및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간 업무 및 서비스 제공 연계가 미흡하였으며, 정신건강 문제 심각성에 비해 지역사회 정신관련 예산과 인력자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의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공급 기반 확충, 효과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성에 기반을 둔 지역 친화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환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에서 관건은 의료적 치료, 재활훈련, 지역사회 내 거주 등 서비스가 환자의 욕구에 따라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주민과의 융화, 지역 주민의 심리적·정서적 지지 등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지역 자원의 활용과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관리 모형 및 서비스 제공 방식이 개발되어야 함.**
- **비자의적 입원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역사회에 중증도가 높은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지속적 치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의 질에 기반을 둔 성과 관리 강화임.**

■ **지금까지 양적 실적 위주의 성과 관리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신질환자의 중증도 개선, 반복적 입원·퇴원 방지 등 환자 건강성과를 바탕으로 한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중증 정신질환자의 특성상 응급 상황에 대응한 조치와 스트레스 관리, 복약 관리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응급 상황 발생 시의 이송, 입원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신의료기관, 경찰, 119,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간의 연계·협조체계가 강화되어야 함.**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2018년 연구 성과

05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배분과 정책과제

KiHSA

연구보고서(기본)
2018- 05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 질병부담과
대응 방안The Economic Burden of Diseases Attributable to Overwork and
Policy Implications in Korea연구 책임자 정연
공동 연구자 김수진, 송은솔, 오수진, 김수정, 우경숙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과로와 건강 간의 관련성 및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질병부담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와 함께 과로 관련 현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산재보험 등 현 사회제도가 안전망으로서의 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과로와 건강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 과로와 건강 간의 관련성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 우리나라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 고령화연구패널 조사 1~6차 자료를 이용해 노동시간이 우울과 심뇌혈관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국가별 노동시간과 건강 수준 간의 상관성 분석
 - 2000~2015년까지 OECD health data를 이용해 각 국가별 전일제 근로자 평균 노동시간과 주 48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연령 표준화 사망률과 수명손실연수로 측정한 건강수준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 분석함.
- 과로로 인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질병부담 추계
 - 2016년 한 해 동안 과로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질병부담을 사회적 관점에 근거해 추정하였으며, 크게 과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직접의료비용(입원, 외래

진료비)과 간접비용(직업손실비용, 조기사망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과로는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비표준적 근무시간 노동(교대근무)의 두 가지 방식으로 각각 정의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범위는 심뇌혈관계질환과 정신질환, 그리고 사망(allcause mortality)으로 한정함.

■ 과로 문제에 대한 주요 사회보장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 과로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과로로 인한 질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빈곤 등의 추가적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살펴보고 주요 문제점에 대해 고찰함.
- 과로와 관련한 외국의 사회보장정책 현황을 사전 예방, 사후 보상, 재활로 나누어 고찰함.

정책 제언

■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과로 자체를 줄이는 것임.

-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를 공공부문 및 장치산업 등의 불가피한 영역에 국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 장시간 노동을 실시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과로사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처벌을 강화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불가피하게 이러한 노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함.

- 현재 사업주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장시간 근로자/교대근무자 보건관리지침,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에 대한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야간작업 종사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의 사후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자들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 직장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과로에 대한 산재보험 인정기준을 완화하고 산재보험 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함.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망 확보 역시 중요한 이슈임.
- 질병 발생에서 직업 복귀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를 확립해야 함.
- 산재보험 외에 노동자들의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병수당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연구보고서(수시)
2018- 09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
방안 마련 연구A Study on the Countermeasures of Health 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Trend of Shortening Working Times연구 책임자 윤강재
공동 연구자 신영석, 윤시문

연구 목적

-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52시간”을 규정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이 사회적 추세로 자리 잡은 반면, 보건업은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업무 특성이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한계점으로 작용하고 있음.

- 본 연구는 보건업의 주요 구성 영역인 ‘병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근로 현황과 인식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추세가 보건업에 연착륙하는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지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음.

연구 내용

■ 근로시간 단축 관련 국내외 사례 고찰

- 국내 사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과거 장시간 근로가 허용되었던 ‘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었음. 이 과정에서 운수업(버스)과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바,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업종의 준비상황을 사례로서 제시하였음.
- 국외 사례: 독일의 경우 보건업에 대한 다양한 특례조항을 통해 보건업의 특수성과 근로시간 단축을 조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노동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업 노사 대상 조사와 인식 차이

- 151개 병원급 의료기관의 노사관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 76.8%인 116개 기관에서 단체협약이나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이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병원에서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된 사유는 ‘병원의 24시간 근무 특성’이었으며, 근로시간 단축에서 논란이 있는 업무 인수인계 시간과 업무 대기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비율은 각각 29.8%와 19.4%였음.
- 병원에서 장시간 근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인력 구인의 어려움(42.4%)’을 제시하였고, 보건업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에서 제외될 경우 ‘인건비 증가에 따른 경영악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응답하였음.

- 장시간 근로에 대한 병원 종사 인력 조사

-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근로시간 이슈가 제기된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음.
- 상기 인력들이 근무상 인식하고 있는 어려움은 ‘열악한 근무환경’,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과중한 업무량’이었음. 반대로 이들 인력의 근로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간호사 2.66점, 간호조무사 3.08점, 임상병리사 3.14점, 방사선사 2.92점).
- 이직 경험은 간호사(58.4%)부터 방사선사(69.2%)까지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육아 휴직 경험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양립 제도 활용 비율도 낮게 나타났음.
- 병원에서의 장시간 근로 발생 이유로는 ‘인력 구인의 어려움(34.2%)’과 ‘관행화된 초과근로 문화(34.0%)’가 높게 나타남.

- 본 연구 조사 결과, 근로시간에 대한 사용자(병원계)와 종사자의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음. 원인 진단에서는 ‘인력구인의 어려움’으로 공통적이었으나 정해진 근로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응답(병원계)과 열악한 근무환경 및 과중한 업무량(종사자)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

■ 보건업의 특수성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

-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로서의 성격 및 필요의 발생과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속성은 보건업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에 대해 他업종과 다른 특수성 부여(환자 케어를 위한 초과근무, 교대·교번, 응급상황 호출)
- 보건업 종사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라는 통념이 있으나, 실제 현실은 직종별로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있으며 ‘근로형태’에 대한 고려와 개선지점 모색이 필요함.

정책 제언

- 보건업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세부적 정의 필요
- 교대제도 개선방안의 검토
 -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보건업 특성상 교대제도의 활용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바람직한 교대제 모형에 대해서는 1)연장(초과)근로시간을 단축 2)밤(night) 근무를 최소화 3)휴가와 휴일 사용 환경을 조성 4)모성보호를 감안하는 방향이 고려되어야 함.
 - 궁극적으로는 인력 확보 방안과 연계된 교대제 모형 고려가 필요
- 보건업의 특례업종 포함 개선 고려
 - 근로기준법상 보건업의 ‘특례업종 존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업종 기준’의 특례업종을 ‘업무 중심’ 또는 ‘직종별 차등화’ 등으로 개선할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법적 검토 및 당사자(병원경영자, 의료인 등 종사자)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 근로시간 이슈가 되어왔던 인력(전공의, 간호사 등)과 더불어 논의에서 소외되어 왔던 역역인 지방중소병원 인력, 의료기사, 간병인력 등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중장기 로드맵 필요

연구보고서(일반)
2018-22

일·생활 균형을 위한 부부의 시간 배분과 정책과제

Time Allocation for Work-Life Balance of Married Couples and Policy Implication

연구 책임자 조성호
공동 연구자 김지민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동시간이 길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나라임.
 - 최근 정부의 정책 기조는 삶의 질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는 것으로, 이는 장시간 노동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초점이 두어지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동시간의 증감과 그 외의 시간 사용 간의 관계, 그리고 임금이 시간 사용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의 완화가 육아·가사, 여가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일·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남편과 아내 모두 노동시간이 가사시간, 육아시간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동시간과 가사·육아시간이 서로 상충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즉,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와 육아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그러나 시간 배분 현황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여성보다는 남성의 가사·육아 시간이 절대적 수치로도 매우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성의 장시간 노동 완화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남성의 장시간 노동을 완화시키는 것은 곧 부부의 일·생활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됨.

- 노동시간이 감소하면, 육아·가사시간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타시간도 동시에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줌. 본 연구에서 기타시간은 대부분 생존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가사를 할 정도로 여유가 생기면 수면 등의 시간도 증가하게 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됨.

■ **남성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여성은 직장에서 일을 한 뒤에도 퇴근 후 가정에서 육아와 가사에 치이는, 소위 독박 육아·가사로 인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달성하기 어렵게 될 것임.**

- 남편의 노동시간이 감소하여, 그 감소한 시간이 육아·가사 시간으로 이전된다면 그 만큼 아내의 육아·가사 시간이 감소하게 되고, 그럴 경우 아내도 일·생활 균형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됨. 즉, 일·생활 균형의 포인트는 남편의 장시간 노동의 완화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분석 결과에서는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요인이 있으면 노동시간이 증가하고, 가사·육아시간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임.**

- 부모와 동거하는 비율은 시간 사용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전체의 7.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가진 부부가 적을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시간적 제약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의 국외 사례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들의 특징은 소득대체율이 높다는 점이고, 남성 육아휴직에 있어서 소득대체율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책 제언

■ 중장기적 방안

- 주 52시간 근무제도 정착
-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다양화 및 기업 컨설팅 지원

■ 단기적 방안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03

2018년 연구 성과

06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
-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 중고령층근로활동이인지기능및정신건강에미치는효과
-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 빈곤 및 고용실태 비교연구
-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주거복지 분야

연구보고서(기본)
2018-02-01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연구

Ensuring Dignity in Old Age with Improved Quality of Death

연구 책임자 정경희
공동 연구자 김경래, 서제희, 유재언, 이선희, 김현정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의 1차 연도 연구로 우리 사회에서의 공유되고 있는 좋은 죽음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을 둬.
- 더불어 웰다잉이 갖고 있는 다차원적 측면에 주목하여 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좋은 죽음을 구성함에 있어 주요 개념으로 자기결정권이 도출됨.
 - 중노년층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두려움 없이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죽음, 자신이 죽은 뒤에 남아 있는 중요한 타자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는 죽음으로 밝혀짐.
 - 이를 위해서는 본인, 가족, 보건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죽음 준비가 선행되어야 함.
 - 무엇보다 먼저 본인 스스로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하며, 가족은 자주 접촉하여 사랑을 표현하여야 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국내외의 법적 및 정책적 대응에 대한 검토 결과, 도출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죽음이 좋은 죽음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해짐.
 - 둘째, 관련된 법과 정책에서 서비스의 영역이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연명의료, 호스피스, 장례와 같은 죽음의 발생 전후 시기와 관련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별·연속적 접근이 요구됨. 물질·인적 인프라 확보와 함께 전 국민의 인식 함양 및 관련 교육 역시 체계화 될 필요성이 있음.
- 셋째, 좋은 죽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비정부기구(NGO)의 생활 밀착형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중심에는 공공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됨.

정책 제언

■ 좋은 죽음의 구성 요소와 국내외의 법적·정책적 기반의 검토에 기초해볼 때 우리 사회에서 웰다잉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과제를 해결해야 함.

- 무엇보다 먼저 웰다잉도 삶을 잘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단계 중 하나임을 인식시키고 웰다잉을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함.
- 두 번째로는 웰다잉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검토하여 다양한 죽음의 형태에서 웰다잉이 구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세 번째로 웰다잉 관련 서비스의 대상자와 내용의 범위를 확대해 가야 함.
 - 이를 통하여 죽음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지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네 번째로 죽음 준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상대적으로 부족한 죽음 준비 항목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서비스의 적절한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의 전문화·표준화와 정보 공유가 요구됨. 현재 실시되고 있는 민간단체의 선도적인 활동과 시도들이 표준화되어 확산될 수 있는 기제 확립 및 지자체의 다양한 사업 등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강화되어야 함.
- 다섯 번째로 관련된 인프라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이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도 확보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웰다잉 구현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촉구되어야 함.
 - 무엇보다 먼저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접근이 강화되어야 하며, 고독사가 발생했을 시 이들 사망자의 시신을 조기 발견하고, 존엄성이 확보된 상장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가야 함.

연구보고서(수시)
2018- 06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use of the reverse mortgage for a stable elderly life

연구 책임자 백혜연
공동 연구자 김정주, 장인수

연구 목적

- 우리나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적·사적 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매우 낮은 편이며 노인 빈곤 또한 심각한 상태임.
- 우리나라는 가계 자산 중 금융자산의 비중이 낮고,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공공성 또한 띠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령층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

연구 내용

- 자료 기반의 주택연금 가입자 특성 관찰
 - 주택연금 가입에 따른 효과 분석과 관련된 여러 선행연구는 주택연금 가입 가정 내지는 증가하는 소득 위주의 비모수적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주택연금에 실제 가입한 이들을 대상으로 가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봄.
 - 일반적인 패널자료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 표본이 매우 적어 이 연구에서 수행할 주택연금 가입 효과 관련 시뮬레이션의 분석에 어려움이 있기에 희귀 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연금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가입률 제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한 가입 효과 분석

- 인구 고령화와 노인들의 주거자산 소유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연금제도 가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입률 제고에 따른 가입자 수를 전망함.
- 경제적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가입 효과를 분석함.

■ 노인의 자산과 소득을 고려한 가입 효과 분석

- 귀속임대료를 고려하는 동시에 주택연금제도 가입률 제고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 비중과 이들의 평균 소득 변화를 살펴봄.

정책 제언

■ 주택연금제도 개선 제안주거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안

- 가입률 제고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고 있는 계약들의 주택을 계약 종료 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 주택 수요와 공급 간의 간극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 담보 주택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한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 방안 제시.

■ 주택연금제도 개선 제안주택연금제도의 보증료율 체계 개선 제안

- 제도 운영 측면에서 크게 2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가 소득 분위별로 다른 보증료율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급적 모든 소득 분위의 요구를 고려하면서도 제도의 단순한 운영을 위해 단일 보증료율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임.

연구보고서(기본)
2018-14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부담 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Changes in Double Care Burden in Korean Families with Middle-aged and Older Heads: Policy Implications

연구 책임자 김유경
공동 연구자 이진숙, 손서희, 조성호, 박신아

연구 목적

- 중·장년층은 본인의 노후뿐 아니라 성인기 자녀와 노부모에 대한 이중부양 부담으로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높은 세대로 불안정한 고용환경은 향후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음.
 -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이중부양 부담 구조는 빈곤과 해체를 야기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하므로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부담 증가에 대비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중부양 부담 구조의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균형 있는 가족부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연구 내용

- 이중부양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동향 분석
 - 중·장년층과 중·장년층 가족 및 이중부양의 개념 및 범위를 정립하고, 이중부양 유형을 부양 주체, 부양 서비스 및 부양 대상별로 분류하는 한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함.
-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 및 특성
 - 중·장년층 가족의 부양 환경을 부양 관련 인식 변화, 인구사회적 변화 및 가족 변화를 중심으로 진단하고, 중·장년층의 특성을 인구가족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함.

■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변화 분석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비중, 이중부양 부담의 중·장년층 및 가족의 특성 변화 추이,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실태 변화 추이를 경제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시계열적으로 분석함.
- 전화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실태를 경제부양과 비경제부양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중부양 부담 관련 지표 및 이중부양 부담이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욕구를 도출함.

■ 국내외 이중부양 관련 제도 및 정책 사례 비교 분석

-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관련 정책 분석 틀은 성인자녀 및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지원과 비경제적 지원을 적용함.

■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 구조 전망과 정책 함의

- 전화조사 및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이중부양 환경이 미혼 성인자녀 및 노부모의 부양 구조와 부양 부담에 미치는 변화양상, 이중부양 주체 간 부양 부담 변화 등을 전망하고 정책적 의미를 도출함.

정책 제언

■ 중·장년층 대상 이중부양 부담 해소방안

- 경제적 지원으로 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 제도 활성화를 비롯하여 실직 중·장년층 대상 소득 보전과 취·창업 프로그램의 강화, 국민연금제도상의 부양 기간의 크레딧 인정 방안 모색과 함께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등이 검토·적용되어야 할 것임.
- 비경제적 지원으로 이중부양 보상 체계 마련 및 이중부양자 통합서비스 제공, 가족돌봄휴가와 휴직제도 확대, 중·장년층의 노후준비 내실화와 함께 이중부양으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의 해소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성인자녀 대상 이중부양 부담 해소 방안

- 경제적 지원으로 통합적 성인기 진입 지원 정책 마련과 함께 성인자녀의 일자리 및 주거 안정화 방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비경제적 지원으로 중·장년층과 성인자녀 간 상호부양과 사적 이전에 대한 기대 변화로 세대 간 자립적 관계를 모색하고, 세대 간 정서 지원 서비스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노부모 대상 이중부양부담 해소 방안

- 경제적 지원으로 공적 소득 지원 체계 강화와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대비하는 부양문화 형성 및 공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후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비경제적 지원으로 부양 유형별로 공사 간 부담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년층과 노부모 간에 교류 증진을 통한 상호부양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기본)
2018-43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재근로)이 인지기능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 - 효과 발생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Retirement on Mental Health and Cognitive Function

연구 책임자 **이아영**
공동 연구자 **고경표**

연구 목적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중고령층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의료 영역의 역할과 사후 대처는 물론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중고령층은 은퇴를 기점으로 인지적 자극 부족과 자기충족감 상실로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증 발생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됨. 이는 곧 당사자의 삶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 부양가족과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초래함.
- 그럼에도 이들의 우울증 및 인지기능 저하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식되는 데다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심각성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며, 예방적 차원에서의 인지 및 준비도 미흡한 상황임.

■ 그런 의미에서 현재 은퇴가 진행되고 있는 중고령층의 은퇴 후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변화와 변화 발생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근로활동(은퇴와 은퇴 후 재근로)의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효과와 그러한 효과 발생 메커니즘과 이질성 분석을 살펴봄.

■ 이상을 바탕으로 중고령층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를 생산함.

- 이를 토대로 중고령층의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 유지·증진을 위한 예방 차원에서의 개인 및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 봄.

연구 내용

■ 중고령층의 은퇴는 우울증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시차를 두고 그 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남.

- 특히, 50~65세 연령대, 남성, 저학력, 저숙련자 집단에서 은퇴가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
- 이러한 효과를 견인하는 중요한 요인은 사회활동 참여와 대인관계 형성의 부정적 변화임.

■ 우리나라에서의 은퇴는 은퇴자들의 여행 및 문화 활동, 대인관계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함.

- 은퇴는 경제 활동 중단으로 인한 소득과 소비 수준을 낮춰 은퇴자의 사회 활동 참여와 대인관계 형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
- 또한 일은 사회와의 통로로서 역할이 크고, 이러한 이유로 은퇴는 사회적 자본과 연결망 형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반면 은퇴 후 생산 활동은 중고령층의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긍정적 영향을 줌.

- 생산 및 사회 활동을 하는 것은 은퇴자들의 활동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높여줌.
- 또한 인지 자극(mental exercise)으로 인해 이들의 정신건강과 인지기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임.

정책 제언

■ 중고령층의 생산 및 사회활동은 정신적, 인지적 자극을 야기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함.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의료 영역 역할 확대와 사후 대처뿐 아니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은퇴 후 생산 및 사회활동 영역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일반)
2018-20

지역 인구공동화 전망과 정책적 함의

Regional Population Crisis and Migration Perspectives in Korea

연구 책임자 이상림
공동 연구자 이지혜, 임소정, 성백선, Bernhard Koeppen

연구 목적

■ 인구이동의 관점에서 지방(지역) 인구변동을 재구성하여 정책 방향 제시

- 국내 인구이동의 일반적 동향과 특성 분석
 - 지역에 따른 인구이동 양상 및 지역 인구변동에 미친 영향
- 지역 관계성에 기반한 연대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 제시

연구 내용

■ 기존 연구 분석

- 지방인구 감소관련 국내외 연구 분석
- 국내 지방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 분석 및 해외 사례분석(일본, 독일)

■ 국내 인구이동 경향 분석

- 지방인구 변동 경향 및 인구이동 경향(방향성/순이동) 분석
- 국내 인구이동 경향 유형화 / 지역 인구변동에 미친 영향 분석

정책 제언

■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정책 방안 제언

- 개별 지역발전론을 넘어선 관계 및 연대성에 기초한 정책 기초
- 인구이동에 기초한 지역 관계 및 연대성에 기초한 정책 제언
 - 통합지원 체계 마련

- 지역인구 영향평가/인구동향 반영 지방재정 체계
- 인구유입지의 귀촌·귀농 사업 지원
- 기초지자체 이하 단위 지역 인구백서 발간/ 관계성에 기초한 균형발전 지수 개발

연구보고서(일반)
2018- 44

초고령사회 대응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방안

Measures for Supporting Productive Activities In Later Life In Response to Super-Aged Society

연구 책임자 황남희
공동 연구자 유재연, 김세진, 이선희, 김난주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두고 노년기 생산성의 의미와 가치를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수요자를 중심에 놓고 보다 체계적인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선 사항을 모색함
연구 내용	■ 노년기 생산성이 다른 생애주기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지 아직 학문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여 경제적 가치를 규명한 연구는 매우 드물게 수행됨 - 초기에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결과가 많았다면, 최근으로 오면서 노년기 생산성이 다른 연령 집단과 다르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 - 생산적 활동은 유급의 임금을 획득할 수 있는 일,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무급의 가사활동, 가족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까지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노년기 생산적 활동 지원 정책은 경제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원봉사활동과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은 부족해 보임 - 경제활동 지원 정책들은 주로 전문직, 전기 노인 중심의 활동에 국한되어 비전문적 경제활동을 하는 고령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고령근로자의 생산성을 살펴본 결과, 내생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사업체 내 고령화가 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상당 부분 사라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없어짐 -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고령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노년기 생산성으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노년기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2014년 기준 300조 1700억 원으로 이는 GDP 대비 20.2%를 차지하는 규모임

- 최근으로 올수록 생산적 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55세 이상 고령 인구 규모의 증가 등으로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는 증가하는 추세임
 - 생산적 활동 중 일의 경제적 가치는 177조 1510억 원(GDP 대비 11.9%)이며, 무급가사일은 123조 190억 원(8.3%)임
 - 무급가사일을 세부 활동별로 살펴보면 가사활동 100조 9190억 원(6.8%), 가족 돌봄활동 9조 970억 원(0.6%), 자원봉사활동 2조 4430억 원(0.2%), 이동 10조 5590억 원(0.7%)임

■ 고령자가 생각하는 노년기의 생산적 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사례연구(FGI)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파악함

-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참여 동기는 1) 사회적 역할 찾기, 2) 생계를 위해 일 참여, 3) 강요된 가족돌봄 선택임
- 고령자의 생산적 활동 특성과 사회적 제약은 1) 생산적 활동의 비경제적 가치의 중요성 인식, 2) 다수의 생산적 활동 참여, 3) 생산적 활동 선택에서 개인적 차이, 4) 노년기 일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부정적 인식, 5) 경제적 보상의 임의성과 낮은 수준, 6) 일터 환경의 고령친화성 부족, 7) 자원봉사 욕구가 실제 참여로 이어지지 않기도 하며, 일보다 후순위임
- 고령자의 생산성에 대한 인식은 1) 사회적 저평가와 일할 기회 부족으로 생산성 발휘 기회 부족, 2) 업무 영역별 생산성의 차이, 3) 생산성에서 고령자로서 강점 존재, 4) 노년기 생산성이 사회적으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유연한 근로환경임

- 직장 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의 효과성 제고
- 노년기 다양성을 고려한 정책 추진
- 수요자 중심에서 노년기에 다양한 생산적 활동이 제공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마련 및 전달체계 정비

정책 제언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며 노년기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고령자 이미지 및 노년기 생산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 한국이 세대 통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일터와 가정, 지역사회 등의 노력
- 고령자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생산적 활동 참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정책 강화
- 노년기에 다양한 생산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 존중 및 참여 기회 제공

연구보고서(일반)
2018-31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및 고용실태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Social Security Systems in Asia
: Poverty and Employment of Elderly People in selected Asian Countries

연구 책임자 노대명 선임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박광준, 김현경, 최영준, Nguyen Thao, 김경휘, 임지영

연구 목적

■ 연구배경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한국사회에서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책적 대안모색을 위한 노력이 매우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 한국의 노인빈곤율과 공적 소득보장체계의 현실은 서구 복지국가가 아닌 아시아 각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그 민 낮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노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보전하는 현재 상황을 구조적으로 타개하기 위해 어떻게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강구해야 하는지 제안하는데 있음

연구 내용

■ 이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경제사회적 발전단계가 다른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과 노인고용문제를 비교하기 위한 방법론을 검토
- 한국, 일본, 대만,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6개국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문제를 분석
- 위의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관련 통계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실태를 비교분석
- 한국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아시아 각국의 노인빈곤 및 노인고용 문제에 대한 실태분석은 전체 연구진이 동일한 연구프레임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도록 설계

- 노인 빈곤 문제는 전통적 대가족사회에서는 그가 속한 가구의 빈곤 문제와 등치되었으나, 현대사회에 들어서는 가구분리가 증가하고 사적부양이 문제가 되면서 노인빈곤 문제가 독립된 문제로 대두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노인빈곤은 <가구분리 사적부양(자녀의 노인부모 부양) 공적부양(노후소득보장제도)의 관계에서 설명
- 노인 노동 문제는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자발적 노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노인노동을 위한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많은 국가에서 노인노동은 기본적으로 소득부족, 즉 빈곤위험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함. 따라서 노인노동과 노인소득 문제는 동전의 양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
- 각국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조합을 분석하고 있음. 그것은 기여(contribution)에 기반한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제도, 조세를 기반으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수당(사회연금, 기초연금 등), 조세를 기반으로 빈곤층에게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부조제도가 어떻게 해당 국가의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지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아시아 각국의 노인빈곤을 비교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방식의 빈곤율 추정치가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량적 비교를 시도

- 분석결과를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경제발전, 인구고령화, 소득분배구조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나타내며, 그것은 사적부양체계의 급격한 해체와 사회연금 등 비기여형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취약에 기인

정책 제언

■ 이 연구보고서의 정책제안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우리 사회는 사회보장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점.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은 미래의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개혁이나 미래의 근로연령층을 위한 재정개혁에 착수해야 하지만, 시급성으로 본다면 현재의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둘째, 현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개편과 관련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 이는 현 노인빈곤층에 대한 소득보장과 관련해서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
- 셋째, 노후소득보장제도 전체에 대한 재구조화와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 기초연금은 빈곤 갭을 축소하는 효과는 있지만, 정작 박탈을 경험하고 있는 노인빈곤층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 따라서 공적연금을 통합하고, 퇴직연금과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이 필요
- 끝으로 한국 사회의 사적 부양체계 문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적 부양체계가 이토록 급진적으로 해체된 배경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연구보고서(일반)
2018-33

사회보장제도 수급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 주거복지(주거급여 중심) 분야를 중심으로

The EFC(Error, Fraud, Corruption) and Blind Spot in Housing Welfare:
Focusing on the housing benefit

연구 책임자 임완섭
공동 연구자 김태완, 강지원, 이아영, 김혜승, 고경표, 최요한, 이규환

연구 목적	■ 사각지대 및 부정수급 등 비적격 수급에 대한 대응과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이에 대한 통계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체계 개편으로 주거급여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상응하는 관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는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관련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관리 체계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정책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또한 해외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다양한 복지 레짐에 속한 국가들이 사각지대와 부정수급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연구 내용	■ 주거복지 등 복지 분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제도적 문제(대상 제한, 선별적 적용 등)와 대상자가 미신청한 점, 낮은 급여 수준 등에 기인함 -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비교해 보면, 두 급여 모두 사각지대 발생의 가장 큰 이유가 구조적 배제였으며, 이에 대한 응답 비율에서 생계급여가 주거급여보다 높았음. - 또한 대상자의 비신청은 두 급여 모두에서 구조적 배제 다음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구조적 배제와 달리 응답 비율에서 주거급여가 생계급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급여를 받기 위해 신청했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고 탈락한 개인 혹은 가구는 주요 사각지대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복지급여 탈락자 및 미신청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조사한 결과 탈락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70% 이상이,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50% 이상이 이들에 대해 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LH의 주거급여사무소의 경우에는 신청탈락자에 대해 낮은 수준(15%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 부정수급 또는 비적격 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비교하였음

- 상당수의 응답자가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 모두 '제공받은 사람의 고의', 즉 기망(fraud)에 의해 부정수급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
- 조사 결과 중 특이할 만한 사항으로 '주거급여'가 '복지제도 전반'에 비하여 '제공받은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 과오 수급의 비율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의 공모로 발생'하는 부패로 인한 부정수급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음.
- 부정수급 또는 비적격 수급의 발생 유형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인식 결과로 볼 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정수급 발생 유형은 '제공받은 사람의 고의', 즉 기망(fraud)에 의한 부정수급임을 쉽게 예측해 볼 수 있음.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전부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적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 해외 사례 연구로 네덜란드와 스웨덴의 부정수급과 사각지대 대응에 대해 살펴보았음

-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보장제도의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는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기존의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사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복지급여 시스템은 부정수급과 사각지대에 있어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켜, '시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적용해 나가고 있음
-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평가받고 있으나 재정 위기 및 진보 또는 보수 정당의 집권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조정 기제가 변화되고 있음.
 - 최근 들어 스웨덴은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는데 여기에는 스웨덴이 범주적 공공부조제도를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 이후 엄격한 자산 조사를 도입한 제도의 경우 사각지대가 발현하고 있음.
- 한편, 스웨덴은 복지 부정수급을 경제범죄의 일종으로 간주하지만, 실제로는 범죄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복지수급의 교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정책 제언

■ 조사 결과와 사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각지대와 부정수급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음

- 먼저,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조직', '관련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 '홍보 강화'가 필요하며, 부정수급 해소 방안으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정비', '현장조사의 강화', '부정수급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
- 사각지대 대응 방안에서,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 지원을 위한 통합관리 조직'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정책자원의 집중을 통해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를 통해 과중·과다한 복지담당자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를 제어할 필요가 있음
- '관련 부처 간 정보시스템 연계 및 통합'은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기회비용을 제거하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홍보 강화'는 복지급여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를 모르거나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 필요함.
- 부정수급 대응에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정비'는 명확한 법적 규정으로 제도 수행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요구되며, 해당 급여의 재원이 전액 조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당위적 차원에서도 중요함.
- '현장조사의 강화'는 주거급여의 특성상 신청자와 현재 수급자에 대한 주택조사가 필수적인데, 이는 사각지대 발굴에도 이용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는 앞서 사각지대에서 언급한 자원의 집중과 전문화를 통해 부정수급 대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음
-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는 복지자원 연계성 강화를 통해 부정수급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음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2018년 연구 성과

07 미래세대 성장 지원과 저출산 극복

-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I)
- 영·유아돌봄 서비스 공급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 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 소득재분배 효과
-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KiHASA

연구보고서(일반)
2018- 19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I)

A Study on Low-Fertility Response Strategy of East Asian Countries

연구 책임자 신윤정
공동 연구자 우해봉, 윤자영, 임지영

■ 동아시아 국가 간의 비교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연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온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함

- 첫째,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 지표를 활용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출산율 현황을 분석하고 초저출산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의 향후 출산율 추이를 전망함
- 둘째,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어떠한 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이 원인 조건으로 작용하는지 분석하여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을 야기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을 규명함
- 셋째, 동아시아 각 국가의 인구정책에서 관측되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특성이 동아시아 권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는지 제시함

연구 내용

■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기간 합계출산율과 코호트 완결출산율을 분석한 결과 수십 년간에 걸쳐 네 개의 국가 모두 기간합계출산율과 코호트완결출산율이 하락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은 출산을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기된 출산을 이후 연령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출생아 수도 하락하였음
-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출산이 높은 연령으로 미루어져 있고 출산량 자체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되어 있어 향후에 출산율의 큰 반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한국은 최근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감소가, 만혼화 혹은 무자녀화 현상으로 첫째아를 낳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에서 기인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정책적인 관심이 요청됨

■ 퍼지셋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국가 비교 관점으로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합원인 조건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충분조건이 되는 원인집합 배열은 '성별 분업 반대, 높은 자녀 가치, 낮은 자녀 양육 부담, 출산·결혼의 연계 느슨, 남녀 근로시간 격차 적음'이었음
-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결과의 원인집합 배열은 '높은 전통적 성 역할 관념, 낮은 자녀 가치, 큰 자녀 양육 부담, 출산 전 결혼 한다는 생각이 강함, 남녀 근로 시간의 격차가 큼, 여성 고용률이 낮음'이었으며, 이러한 조건들이 동시에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의 국가 인구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일본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출산 억제와 관련하여 자유방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한 반면, 대만, 싱가포르, 한국은 공통적으로 경제발전 측면에서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모습을 보였음
- 일본의 인구정책 발달 과정의 특성으로 인하여 후속적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지체되는 동시에 그 대응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이루어졌음
- 최근 한국, 일본, 대만에서 과거의 발전국가를 대신하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반면 싱가포르에서는 인구정책에서 우생학적 고려가 강하고 인민행동당(PAP) 정부의 장기 집권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중국은 2013년과 2016년 이후 한 자녀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중국의 인구정책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중국의 경우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정책 공감대 형성이 어렵고 이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가로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책 제언

■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한 초저출산 현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강구해 온 정책적인 방안은 유럽 국가 등 다른 권역에 속한 국가들과 구분되는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음

-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인구정책이 국가 경제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국가 모델에서 복지가 경제에 종속되고 있어 동아시아 복지 체제에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은 관측되지 않고 있음
- 동아시아 사회에서 공식적인 영역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반면 양성 불평등 특히 자녀 양육 등 가족 내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 수준이 높게 지속되고 있다.

-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 직면하여 출산 장려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패러다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났는가는 분명하지 않음
-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새로운 가치 수립, 자녀 양육 부담 감면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전반적인 사회 정책으로서의 저출산 대응 추진, 실효성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능 강화,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체계 구축을 제시하였음

연구보고서(일반)
2018- 21

영유아 돌봄서비스 공급 구조 분석과 정책과제

Analysis of supply structure of childcare service and policy task

연구 책임자 김은정
공동 연구자 오신휘, 안현미

- 연구 목적

 - 국내 보육서비스 공급은 민간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상당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연구는 보육서비스 공급 구조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 공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 영유아기 시설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설 공급, 보육교사 공급 및 근로 환경, 재정 지원 측면에서 공급구조 분석
- 연구 내용

 - 현재 상당수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
 - 향후 국공립 비율을 4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하에 국공립 시설의 민간위탁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보육교사는 유형별로 매우 다양하며, 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사(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는 전체 교사의 12.3%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교사 인력은 단독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으로 교사들은 행정 및 사무 등으로 인한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요 원인은 교사대 아동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됨
 - 보조교사는 어린이집 1개소 당 평균 0.72명이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은 임금 수준이 높은 반면 근로시간이 길고 행정·사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근로환경에서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정책과제로 교사 대 아동비율의 개선과 호봉제 정착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일 9시간을 적정근무시간으로 볼 때, 응답자의 약 45%가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과근무의 이유는 대부분 행정이나 잡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 **본격적인 보육서비스는 대부분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여 보육서비스 제공 시간에 대한 재구조화가 필요함**

- 기본 보육시간을 명확히 하고 오전·오후 시간의 추가 보육에 대한 교사 및 아동별 지원을 차별화하는 구조개선 검토 필요

■ **보육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이며, 지자체의 재정 분담 정도에 따라 아동 1인당 보육 예산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경우 기본 보육료나 차액 보육료와 같은 지원금이 보육교사 임금 수준에 적절히 반영되는 구조 필요**

-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역 간 지원 수준의 격차를 해소할 방안과 효율적인 재정 운용방안을 검토하고 중앙정부·지방정부 모두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품질 관리 예산 확대 필요
- 보육료 지원의 근간이 되고 있는 표준보육비용 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정책 제언

■ **국공립 어린이집 전문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있음**

- 공공기관 위탁운영 시 지역사회 내 공적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하고 관련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회계 관리를 중앙에서 전적으로 담당하여 어린이집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가능함
- 장기적으로 재정 관리와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면 보육교사의 임금 수준과 근로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 **이원화된 재정 지원 체계를 일원화 하여 아동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제공되는 기본 보육료와 차액 보육료를 인건비 지원 항목으로 변경하여 보육교사 임금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장기적으로 시설유형에 따른 이중의 재정 지원 체계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공공성과 운영 투명성 확보, 재정지원과 서비스 수준 연계 강화가 선행되어야 함

■ **12시간의 운영구조에서 기본 보육서비스 시간 개념을 도입하고 보육교사 인력 구조를 기본 보육서비스 제공 교사와 보조교사(지원인력)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안 제안**

- 정규 보육서비스 시간은 담임교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의 시간은 지원인력이 담당

연구보고서(일반)
2018- 23청년층의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 연구

Housing Characteristics and Marriage Intentions among the Never-Married in Korea

연구 책임자 변수정
공동 연구자 조성호, 이지혜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미혼 청년의 현재 주거 실태와 향후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 관련된 특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주거특성과 결혼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미혼 청년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현재 주거와 결혼 시 마련하고자 하는 주거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이것이 결혼의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결혼을 하고자 하는 미혼 청년의 주거문제에 대한 정책 방향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 내용

■ 미혼 청년의 주거 실태

- 미혼 청년의 주거 실태는 성별, 연령, 거주지, 취업여부, 부모님 경제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였음
-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은 경우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 거주 비율이 높고 월세 거주가 많으며 청년 스스로 완벽하게 주거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 결혼 시 희망하는 주거와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주거

- 희망하는 신혼집과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신혼집은 성별, 지역, 본인과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남
- 아파트를 희망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희망하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희망하는 주거와 현실적으로 마련 가능한 주거 간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택 점유형태와 적절한 신혼집 비용 등에서도 여전히 나타남

- 희망 신혼집과 마련 가능한 신혼집 간 차이는 결혼하고 싶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룹에서 조금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

■ 정책 욕구

-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정책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 의향도 높게 나타남

■ 미혼 청년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현재 주거 상태 관련 요인보다는 향후 결혼 시 마련할 주거에 대한 조건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침
- 성별로는 여성의 결혼의향이 남성의 결혼의향보다 주거 관련 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가장 집값이 높은 수도권에서 신혼집 유형과 비용 등 신혼집 마련 조건에 따라 결혼의향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주거 마련이 해결되면 결혼하겠다는 그룹의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의 경우 내 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부모님 경제상황에 따라서는 부모님 경제수준이 중간인 경우 다양한 요인들이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정책이 결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수록 결혼 의향이 있을 확률이 높아 주거 마련 해결이 결혼 의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

■ 다차원적 조건을 고려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사회적·경제적 상황에 따라 주거 관련 특성 및 욕구가 매우 다양한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분화된 그룹에 대한 니즈 파악과 그에 따른 주거지원 정책 필요

■ 기존의 청년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검토와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기존 정책에서 강화할 부분과 완화할 기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 활용 방안 모색 필요
- 산발적이고 분절적인 주거 관련 정책을 알기 쉽고 접근 가능하도록 정리하여 홍보 필요

연구보고서(일반)
2018-49**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 - 아동기 학대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Understanding experiences of abuse and violence among children
and youths- A life course perspective연구 책임자 류정희
공동 연구자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생애주기별 상호 관계성 연구의 2차 연도 후속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학대·폭력을 포함한 다양한 부정적 생애경험의 실태, 아동기 또는 청년기에 경험하는 학대·폭력 및 부정적 생애경험의 중복성과 신체적, 심리·정서적 영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에서는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대·폭력 및 부정적 경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 결과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대·폭력과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의 중복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경험의 결정 요인을 분석
- 아동기를 포함한 과거의 폭력·학대 등 부정적 생애경험이 현재의 신체 및 심리·정서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도 등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아동기 학대·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의 시사점을 제시

연구 내용

- 아동 및 청소년의 아동학대, 아동기의 부정적 가족생활사건 경험 등 다양한 부정적 생애경험이 중복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의 성인기 폭력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음
-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 주 양육자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과 현재의 배우자 간 학대 경험이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경험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녀에 대한 신체학대 및 정서학대 가해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부모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아동의 또래폭력과 문제행동 모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의 정서학대 피해와 아동의 부정적 경험을 통해 아동의 또래폭력과 문제행동에 완전매개 형태로 영향을 미침.
- 부모의 신체학대 가해는 아동의 신체학대 피해가 완전 매개하여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영향관계는 아동 스스로가 학대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 아동의 학대·방임 경험과 아동의 건강행태·정신건강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 중복적인 학대·방임의 경험이 아동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동의 부정적 생애경험이 아동 삶의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청년의 부정적 생애경험 중 학대 경험은 29.6%로, 이 가운데 신체학대 경험이 26.1%로 가장 높았음.

- 현재 우리나라의 18~29세 청년은 타인에 의한 직접적인 학대보다 가정폭력 혹은 지역사회폭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간접적인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간접적인 노출만으로도 청년의 현재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과 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가정폭력의 간접적 노출이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학대만큼 위험하며, 전 생애에 걸쳐 정서적 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 청년의 성인기 폭력 경험과 신체·정신건강의 관계성에 대한 분석 결과 BMI 및 주관적 건강상태로 측정된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성인기 폭력 경험의 영향은 다소 혼합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음.

- 성인기 폭력 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울과 삶의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성인기 폭력 경험은 우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아동기 부정적 생애경험을 통제하게 되면 성인기 폭력 경험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음.

정책 제언

- 피해 아동과 부모를 포괄한 학대 대응 및 개입의 필요성
-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 및 대응의 체계화

■ 아동학대 경험과 건강행태 및 정신건강의 연결을 차단하는 사회적 개입 방안 개발

- 아동기의 학대와 방임 사례들을 발견한 이후 장기간 이들의 건강행태와 정신건강 수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 아동 및 가족 중심 통합적 지원체계의 구축

- 현재와 같은 분절된 아동·청소년 부처의 업무와 전달체계로는 중복적 위기를 경험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 어려우므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가정 내 체벌 금지의 입법화 필요

■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보호의 강화

- 부정적 생애사건 중 부모의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분명하게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의 정신건강과 심리·정서적 지원 정책의 구축 필요

- 청년 세대의 경우는 과거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초기 성인기의 폭력 경험, 그리고 진학, 취업, 결혼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된 상황에 직면해 있음.
- 학대 예방 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의 발전과 청년 복지를 통해 우리나라 청년의 삶의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연구보고서(수시)
2018-06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Child benefit and parental decision making about the form of child care

연구 책임자 **고제이**
공동 연구자 **고경표**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인 자녀 출산·양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수당제도 시행 초기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음.

- 현재 가정양육과 보육료 지원으로 이분화된 지원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부모들의 양육 방식 선택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를 정책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아동수당제도 도입 전후 부모 설문조사의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영유아 양육 부모들의 자녀 양육 행태에 변화가 있는가를 파악함

연구 내용

■ 아동수당제도의 이용 행태와 인식에 관한 분석

- 설문조사분석 결과, 조사 가구의 91.0%가 아동수당제도의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였음.
- 특히 자녀 양육 부담 완화와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제도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반면 자녀출산과 양육 부담의 사회화와 관련해서는 아동수당제도의 기능이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0~5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자녀 출산과 돌봄·양육지원 정책의 적절성 측면에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

■ 아동수당제도의 개인적·사회적 영향과 보육 지원 체계와의 복합적 작용에 관한 분석

- 대부분의 조사 가구는 아동수당 수급이 자녀 양육 방식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양육 방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정책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 체계와 맞물려 영아기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음.

-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가정양육으로 전환하거나 유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고소득층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 전환 또는 유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관련 제도 간 적절한 조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재정적 측면에서도 현재의 지원 단가 체계가 조정되지 않을 경우,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추가적 보육 재정 소요가 2,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계됨.
- 제도 간 조율 방안 검토와 관련하여 현행 보육 체계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조사한 결과,
- 가정양육수당 인상과 함께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지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남.
 - 가정양육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가정양육수당 단가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큰 맞벌이 가구나 고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나, 인상 금액 수준에 따라 반응하는 가구 집단이 달라짐을 알 수 있었음.
 - 아동수당제도의 중요한 개선 과제로는 조사 가구 대부분이 지급 연령과 금액의 확대를 꼽으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 체계의 설계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정책 제언

■ **별개의 정책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 라 하여도, 그 제도들이 동일한 정책 집단에 각각의 영향을 미칠 때, 하나의 제도 또는 제도들에 대한 조정에 있어서는 개별 제도의 효과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영향까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함.**

- 특히 영아기 불필요한 보육서비스 이용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동수당제도는 물론 가정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단가 체계의 조정이나 보육료 지원 대상의 변화 등과 같은 보육 체계 전반에 걸친 조정이 필요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 001-08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The Effect of Income Support for the Households with Children on
Redistribution of Income

연구 책임자 정은희
공동 연구자 백승호, 김성아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국가의 아동가구에 대한 투자 정도를 평가한다는 점과 아동은 미래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라는 점에서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의 효과를 평가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임.
- 우리나라에서 아동가구에 대한 다양한 소득지원제도를 포괄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엄밀히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아동가구의 소득보장제도를 포괄하고 소득보장 정책의 대상 연령에 따른 제도의 개별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 내용

■ **소득분포 분석 결과, 아동가구의 시장소득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증가하였으며 소득 하위 분위의 소득점유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지니계수는 2006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다 2016년에 상승함. 시장소득 증가 요인과 지니계수의 변화 요인은 일부는 저소득 아동가구의 비율 감소와 소득 하위 계층의 아동 수 감소로 인한 것이며, 일부는 정부의 소득지원제도로 인한 불평등 감소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정부의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감소 효과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였으며, 소득 하위 계층의 아동 수 및 아동가구 비율 또한 감소하는 추세임. 이와 같은 사실은 정부의 아동가구에 대한 소득지원제도의 효과성이 실제로는 더 낮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함.

- 아동가구를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 중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와 같은 개별 프로그램의 재분배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육료 지원은 만 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의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을 2010년에 4.3% 정도, 2016년에 4.2% 정도 감소시키고 해당 연령 아동의 불평등은 2010년에 4.6% 정도, 2016년에 4.7% 정도 감소시킴. 양육수당은 2016년 만 0-5세 아동가구의 시장소득 불평등을 1.1% 정도, 해당 연령 아동의 불평등을 1.3% 정도 감소시킴. 근로장려금은 같은 기간에 아동가구와 아동의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을 각각 0.1% 정도 감소시켰고, 자녀장려금은 각각 0.2% 정도 감소시킴
- 보육료 지원의 불평등 감소효과가 큰 것은 지출규모가 큰데서 일부 기인할 가능성이 있고 보육료지원이 저소득층 가구의 시장소득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아동가구는 2006년 이후부터 시장소득이 증가하였고, 소득이 낮은 아동가구의 비율감소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에, 보육료지원의 시장소득 증가 효과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 평가가 필요함

정책 제언

- 어떤 경우에는 아동에게 계층상승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함. 아동의 현재 소득지위에 대한 원인이 아동에게 있지 않으며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결과도 아니기 때문임. 또한 현재 본인의 노력으로 바로 계층상승으로 이어지지도 않을뿐더러 노력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노력의 기회조차 얻기 힘들기 때문임.

- 아동빈곤율과 소득불평등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서 이들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됨. 우리나라 아동 대상 소득지원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는 않음.
 - 이뿐만 아니라 아동가구 소득지원제도의 불평등 완화 효과나 빈곤율 감소 효과는 그크기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 아동가구대상 소득지원제도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동가구에 제공하는 현금급여의 확대 또한 필요함. 특히 2018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제도는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도입당시 아동수당은 고소득층의 자녀를 제외하였고 0-5세 아동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음. 또한 아동에 대한 지원이 0-5세에 집중되어 있고 학령기 아동에 대한 지원은 규모가 작기 때문임.

연구보고서(일반)
2018-37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The 2018 National Survey on Fertility and Family Health and Welfare

연구 책임자 이소영
공동 연구자 김은정, 박중서, 변수정, 오미애, 이상림, 이지혜

연구 목적

-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는 가임기(15~49세) 기혼 여성의 결혼·출산·양육관련 가치관, 행태와 미혼 남녀(20~44세)의 결혼, 출산 관련 가치관과 태도를 파악하여 기존 인구정책을 평가, 개선하며 관련 학술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음

연구 내용

■ 결혼 실태 및 결혼 관련 가치관

- 기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태도 및 경험에 관한 조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상당 부분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형식이나 규범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자녀 가치관

- 기혼 여성 중 약 17%는 자녀가 없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혼 남성의 28.9%와 미혼 여성의 48%가 이러한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유배우 여성의 이상자녀수는 평균 2.16명이나 기대자녀수는 1.92명으로 이상자녀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임신과 출산 실태

- 유배우 여성의 12.1%는 난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52.1%는 난임을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남
- 출산 전 검진은 모든 기혼 여성이 받은 반면 출산 후 진찰(검진)은 94.7%가 받아 산전

수진율과 비교 시 약간 낮은 편임

■ 자녀 양육 실태

- 남편과의 가사, 육아 부담이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각각 48.0%, 61.1%로 조사됐으나, 남편의 실제 가사와 육아참여 시간은 아내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부의 성역할 인식 조사 결과, 양육(특히 영아돌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여성이 한다는 인식이 강하나 여성이 일 하는 것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미취학 자녀의 돌봄으로 국공립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중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영아기 16.7%, 유아기 36.5%였음.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으로 초등돌봄·방과후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중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1~3학년은 75.6%, 초등학교 4~6학년은 66.2%로 나타남
- 자녀 양육비는 1자녀 가구는 월평균 73만 3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일·가정양립 실태

- 첫째 자녀 임신 당시 취업 중이던 기혼 여성의 65.8%가 첫째 자녀 출산 후 둘째 자녀 임신 전까지 경력단절을 경험하였으며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경력단절 경험 비율이 46.1%로 나타남. 경력단절 시기는 임신 후 출산 전까지가 가장 많았음
-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고 첫째자녀에 비해 둘째자녀의 이용 비율이 높음
- 경력단절 경험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이용 비율은 취업 기혼 여성의 당시 직종별, 종사상지위별, 직장 유형별로 차이를 보임

■ 정책 욕구

- 기혼 여성과 미혼 남녀 모두 국가의 결혼·출산·양육 관련 지원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
- 기혼 여성은 결혼 정책에 대해서는 신혼집 마련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자녀를 양육하기에 바람직한 사회여건으로 안전한 자녀 양육 환경 조성, 질 높은 보육·육아지원 시설 확충,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 등을 제시하고 있음
- 기혼 여성의 경우 정부의 결혼, 자녀 출산·양육 지원 정책 전반의 인지도와 도움정도, 중요도가 모두 높았으며 특히 일·가정양립 정책 인지도와 도움 정도, 중요도가 높았음
- 미혼 남녀는 정부정책 인지도가 높은 편이며 이러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정책 제언

■ 비자발적인 만혼과 비혼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자녀 출산과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이상자녀수보다 출생아수, 기대자녀수가 적은 상황이므로 자녀의 양육비·교육비 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등 원하는 만큼 자녀 출산을 못하게 하는 장애요인 제거 노력이 필요함

03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2018년 연구 성과

08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
-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KiHSA

연구보고서(수시)
2018-02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네트워크
구조와 발전 방안Th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A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Its Structure and Improvement연구 책임자 조성은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송철중, 모춘홍, 최소영, 민기재, 고혜진, 조보배, 김예슬

연구 목적

- 2018년 남북 관계의 급격한 회복과 이어진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번영으로 이어지기를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음.

- 평화체계가 정착되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단계에 이르면 아마도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주체는 지금의 아동 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될 것임.
- 북한은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전 주민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위기 상황을 경험함.
 -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고 성장한 영유아·아동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은 지체되었고, 지체된 성장은 임신·출산 과정을 통해 다음 세대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 핵 폐기를 둘러싼 북·미의 힘겨루기가 벌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북한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임.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며, 제한적이지만 비정부기구(NGO) 중심의 사업을 펼 수밖에 없는 여건임.

- 이를 활용한 남북한 교류 활성화는 통일을 대비한 사전 투자의 핵심적인 요인임.
- 특히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보다 우선적으로 재개되어야 함.
 - 비정치 분야에서의 인도주의적 목적의 교류는 부분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므로 국내외의 대북 민간단체나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시점으로, 현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지원 기구들의 네트워크 관계를 분석하여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관련 '지원 행위'와 '지원 기구'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 아동 및 영유아 서비스 지원 과정의 동학(dynamics)을 분석하여 그 양상을 설명하고 속성을 밝히고자 함.

- 이에,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서비스 지원에 참여한 국제기구 및 정부, 국내외 민간단체들의 연결망을 분석하여 전반적인 양상과 속성을 파악하고, 나아가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발전 방안을 도출함.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현황과 구조를 파악하고자 함.

- 북한의 여성, 영유아 및 아동 보건복지 현황과 실태는 주로 2015년 이후 보고된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함.
- 제국내외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현황과 네트워크 구조는 넷마이너(NetMiner)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방법을 활용함.

-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여러 국제기구의 최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낮은 사회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영유아와 아동, 그리고 모성의 건강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임산부를 위한 북한의 산전-분만-산후 관리 시스템에서 노동 간에 확연한 격차가 확인됨.
 - 북한 모성보건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높은 모성 사망률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보건체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 분석 결과, 200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기초보건, 긴급구호 위주의 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북한의 영유아 및 아동의 영양, 건강, 복지 개선을 위한 사업의 실행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관들의 연결망을 분석한 결과, 국내외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에서 한국 정부의 사이 중앙성이 높아 한국 정부가 국내외 조직 간 연계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외 국외 네트워크 중 1~2개 기관의 연결정도 및 위세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 이들 기관을 활용한 정보공유체계가 유용할 것으로 분석됨.

- 반면 공동 지원 사업은 매우 적고, 활동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는 발견되지 않았음. 또한 사업의 범위 역시 편중된 것으로 분석됨.
- 지금까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은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 등 정치적인 상황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 옴.
- 북한의 국제 정치적 행위, 남북 관계의 변화 등이 나타난 시점을 전후하여 지원액은 증감을 반복해 오고 있음.
- 북한의 모성과 영유아, 그리고 아동의 건강 및 보건의료사업은 정치적인 상황과는 별개로 인도적인 원칙에 기초해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 및 국내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만 실질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임.

정책 제언

-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한국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서 정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대북 지원을 수행한 공여국, 기관, NGOs와의 네트워크에서 정부가 중심이 되어 대북 영유아 및 아동 사업이 전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과 협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함.**

- 남북한이 합의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원조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집행하며, 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셋째,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 기구 간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공동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위해 남과 북의 관련자들이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북한의 재정성, 민화협, 교육위원회, 보건성 관계자와 남한의 보건복지부, 통일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과 국제기구, 공여국, INGO, NGO 등이 정기적으로 교류·협력을 위한 의제 설정과 목표, 성과에 대해 공유하는 것은 신뢰 구축에도 아주 좋은 과정이 될 것임.

- **넷째, 지원 기구 간 기본적인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연결정도 및 위세 중심성이 높은 유니세프나 한국 정부, 한국의 민간조직(우리민족서로 돕기운동 등) 등을 중심으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면, 그것의 확산에 효과적일 것으로 봄.

연구보고서(일반)
2018- 001-08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 분석과 전략개발에 관한 연구

Inter-Korean Agenda on Health and Welfar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Plans

연구 책임자 조성은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조성은, 송철중, 노법래, 민기재, 이철수, 허신행, 김예슬

연구 목적

- 2018년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이후 보다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음.

-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교류·협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정부 주도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이 우선적으로 요구 됨. 때문에 문화·체육을 비롯한 비경제적 영역과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한 보건복지 분야의 교류·협력이 우선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단기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보건복지 분야의 대북 논의 의제가 남북 간 교류·협력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닐 것임.

- 이에 비해 지금까지의 남북 보건복지 분야 의제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음.

- 주로 보건의료 분야 의제가 제약공장 지원, 약품 공장 지원, 병원 신설 지원, 의약품 지원 등과 같은 북한의 단기적 요구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개되었으며 여타의 복지 분야(소득보장, 사회서비스)는 거의 의제로 다뤄지지 않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 분석과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 탐색을 바탕으로 남북 보건복지 분야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를 도출하는 데 있음.

연구 내용

- 첫째, 남북 당국 간 합의된 보건복지 공적 의제를 분석함.

- 보건복지 공적 의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실천적 관점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유엔안보리결의에서 제외되는 인도주의 분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실행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보건복지 공적 의제는 거의 이행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둘째, 북한의 사회경제적 요구(demand)에 대해 예비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당 우위의 정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활용하여 텍스트 분석을 시도함.**

- 분석 결과, 우선 영역별로 공통된 요소가 하였는데, 특정한 사회보장 영역이나 대상자에 대한 이슈들에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토픽이 거의 모든 주제에 포함되어 있음.
- 또한 특정 영역과 대상자를 중심으로 남한 사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거의 모든 경우에 다 포함되어 있음.

■ **마지막으로, 남북한 보건·복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에서의 실효성 있는 예비 의제(provisional agenda) 도출을 시도함.**

- 보건·복지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한 의제들은 다음과 같음.
- 남북한 복지 분야 교류·협력에서 '영유아 및 아동의 영양 지원'을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의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북한 보건 분야 교류·협력에서는 '감염병 예방 지원'을 가장 시급한 현안이자 의제로 생각함.

정책 제언

■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의 이해와 우리 정부의 실현 능력이 일치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의제를 주도하여 남북 간 상호 신뢰 형성, 나아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공고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함. 또한, 보건복지 의제 확보를 위한 독자적인 영역화가 필요함.**

- 공적 의제는 연속성 및 이행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함.
 - 그 담보 조건으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 및 중요 장관급회담 합의문들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함.
- 단기적으로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사회통합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목표 중심으로 체계화된 대북 협력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교류·협력은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남북 경제 협력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 인도적 지원 역시 중장기적 합의에 기반 한 지속 가능한 협력 사업 중심으로 개선된다면 대북 보건복지 지원 사업의 체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분석 결과, 북한 당국의 요구와 남측 전문가들의 의제 사이에 간극이 확인됨.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이미 합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음.

-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과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영유아와 임산부 지원 사업, 전염병 공동방역·관리체계 구축, 북측 의료 인력 교육, 기초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병원·의료기구·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 지원 등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의견 조율의 시간을 단축하고 이후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데 유효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의제 영역의 확대는 그 이후의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36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 방안

The Support Project for North Korean Infants and Children: A Social Network Analysis Approach to Its Structure and Improvement

연구 책임자 조성은 연구위원
공동 연구자 조성은, 이수형, 김대중, 송철중, 황나미, 이요한, 민기재, 오인환, Nguyen Thao, 허신행, 김예슬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17년 「통일 이후 북한지역 사회보장제도-통합기 단일체제」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지금까지 제도 통합을 전제로 한 보건·의료분야의 기존 연구를 검토하되 중장기적인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한반도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여 남북한 보건의료에 대한 합리적 통합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단계적 과제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정책적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을 둠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시장화가 진행된 북한 사회의 최근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건강 관련 미시적 변화를 연구에 반영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최근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중 보건의료 종사 경험자에 대한 질적 조사를 통해 가장 최근의 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현실을 연구에 반영함.
- 베트남 사례 분석을 통해 통일 한국에서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남한의 건강보험과 결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함.
 - 통일 한국의 건강보험제 적용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북한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성,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등에 대한 정책 대안 필요성,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의료보험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가입을 독려할 필요성, 높은 의료비 지출에 대한 재정 불균형 문제 및 의료비 지출 효율화,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 남북한 주요 건강지표와 북한의 우선순위 보건의료 문제, 북한 주민의 보건의료 수요 전망 결과에 따라, 심혈관계질환 및 호흡기계질환, 근골격계질환 등의 비감염성질환과 조산으로 인한 합병증, 출산질식 및 외상, 신생아 패혈증 및 감염, 철 결핍 빈혈 등의 모성·아동 질환, 결핵, 설사질환, 뇌염 등의 감염성질환이 북한의 주요 건강 문제로 나타남.

- 남북한 의료이용 행태 비교 결과, 현재 열악한 의료 환경 하에 잠재되어 있던 의료이용은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가동될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비감염성질환, 모성 및 아동 질환, 감염성질환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원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의료시스템 강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남북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해 장기적으로 남북한 보건医료를 하나의 체제로 통합하는 관점과, 북한 고유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관점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시점에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에서 어떠한 실천적 과제들이 있는지 살펴봄.

- 현재 붕괴 수준에 있는 북한 보건의료체계가 주민에 대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함.

- 보건의료 시설 회복 방안,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방안, 보건정보시스템 강화 방안, 보건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보건 거버넌스 및 재정 운영 역량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남북 간 보건의료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논의함.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북한의 건강 수준을 파악하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새롭게 대두될 건강 및 보건의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 방안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 새로운 평화시대에 발맞추어 남북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새로운 교류·협력 방식이 요청되고 있음. 더불어 상호존중과 공동존이의 원칙하에 구축된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협력에 기초하여 장기적으로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 전략과 방식을 마련해야 함.

-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평화와 교류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급진통일과 급진통합 방식을 따른 서독 중심의 독일 식 보건의료제도 개편은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없음.

- 둘째, 평화시대의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자칫 남북한 보건의료 통합을 목표로 하여

- 전개되지 않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셋째, 통독 이전 '동서독 보건협정'의 경험을 한반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남북한 보건의료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함.
 - 넷째, 한반도 통합은 장기적인 시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에 따라 보건의료 시스템 및 의료자원 개발을 단계적으로 구상해야 할 것임.

03

2018년 연구 성과

09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주도 사회안전망 개편방안
- 사회보장정책 업무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
- 2018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

정책자료
2018- 08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2018Social big data trend analysis based on health and welfare issues in
2018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송규원, 전종준, 천미경

연구 목적

- 소셜 빅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이 갖추어지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정형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소셜 빅데이터 활용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블록체인과 관련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이슈를 살펴보고자 함.
 - 블록체인은 암호화폐와 함께 이슈화되었지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로 해마다 발전하고 있으며, 민간 및 정부에서의 활용 사례도 증가하는 상황임.
 - 보건·복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이슈화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블록체인 키워드와 보건 및 복지 키워드 관련 문서를 함께 수집하고,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다양한 분석을 해 결과를 제시함

연구 내용

-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 및 기술적인 요소를 기술하고, 블록체인을 분류하고 블록체인 활용 사례를 수집
 - 소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으로 텍스트마이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고 단어/문장의 특징 추출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제시
 - 블록체인과 보건복지 이슈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텍스트 수집, 자료 정제, 시각화 방법(chord network, sanky network 등)을 제시하고, 한글 문서에서의 이슈와 영문 문서에서의 이슈의 차이도 살펴보기 위해 한글 문서 및 영문 문서를 각각 분석
 - 한글 문서에서는 2015~2017년도에 비해 2018년도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문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수집되었고, 영문 문서의 경우 2015~2016년도에 비해 2017~2018

년도에 블록체인과 관련된 보건 이슈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상황이 상대적으로 늦게 이슈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수집된 문서에서 복지 쪽 이슈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보건 쪽 이슈와 관련이 있음.
- 한글 문서의 5개 토픽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외 투자, 개발에 대한 전망이고, 두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이슈, 세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의료 관련 플랫폼 이슈, 네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복지, 기업 이슈, 다섯 번째 토픽은 기타로 분류할 수 있음.
- 영문 문서의 5개 토픽의 경우 첫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업이고, 두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의료, 보건 이슈임. 세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의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 이슈, 네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과 관련한 가상화폐 이슈, 다섯 번째 토픽은 블록체인 자체의 기술 이슈로 분류할 수 있음
- 토픽 모형 관점에서는 한글 문서보다 영문 문서의 토픽이 더 적절히 분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정책 제언

- 블록체인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공공 분야에서 실행 가능성과 영향력이 꽤 큰 편에 속하는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의 보안성, 투명성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산업과 사회를 혁신하는 기반 기술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이 있음
- 이 연구의 한계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2018. 6. 21.) 하기 전에 문서를 수집한 결과라는 것임. 정부의 블록체인과 관련된 정책이 이슈화된 문서를 수집하여 위의 분석을 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 그럼에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은 보건복지 정책 영역에서 국가적·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이슈의 현 상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정책과 관련한 이슈를 도출하고 연구 전략을 세우는 데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다양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주요 보건복지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영향력 등을 분석하고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본다면 시의성 높은 보건복지 정책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연구보고서(기본)
2018- 16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 보건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omaly detection based on Machine Learning

연구 책임자 오미애
공동 연구자 박아연, 김용대, 진재현

연구 목적

-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란 자료에서 예상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개체 또는 자료를 찾는 것을 의미하며, 이상값은 신용카드 사기, 사이버 침입, 테러 행위 같은 악의적 행동이나 시스템의 고장, 비정상적인 상황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이러한 위험 또는 고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상 탐지는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임.
- 본 연구에서는 이상 탐지 연구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요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 내용

- 이상 탐지 개념을 정의하고 국내·외 활용 사례를 살펴봄.
 - 본 연구에서의 Anomaly detection은 각 분야 및 문제에서 정의된 'normal'의 반대 개념으로 '이상'을 정의하고 이를 찾아낼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함.
 - 국내·외 활용 사례는 연구 분야별 이상 탐지 기법 활용 사례와 데이터 유형별 이상 탐지 기법 활용 사례로 나누어 살펴봄
- 기계학습 기반 이상 탐지 기법으로 분류 기반 이상 탐지 기법, NN(nearest neighbor) 기반 이상 탐지 기법, 군집화(clustering) 기반 이상 탐지 기법, 이상 탐지의 통계적 기법, 정보 이론 이상 탐지 기법, 스펙트럴 이상 탐지 기법, 맥락적 이상 탐지로 나누어 살펴봄. 딥러닝을 활용한 이상 탐지 기법으로는 차원 축소와 이상 탐지 방법을 동시에 학습하는 방법론을 소개.

- 탐색적 자료분석으로, 보건사회 분야 자료를 활용하여 앞에서 서술한 이상 탐지 기법을 적용해 보고 활용 가능성을 검토.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기 때문에 향후 노인들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확대될 수밖에 없음. 고령화 및 노령인구의 증가는 치매 노인 증가, 노인 학대 문제 등 돌봄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노인에 초점을 두어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 조기 진단을 위한 자료(ADNI의 FDG-PET),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학대 노출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2017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음.

정책 제언

-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에 기반한 이상 탐지 기법 연구는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으로 공공·행정 부문에서 효율성 증대가 가능함. 아동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장기 결석, 건강검진 미 실시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대 등 위기 아동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데이터 분석에서 기계학습에 기반을 둔 이상 탐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음.
- 보건사회 분야에서 이상 탐지 기법이 가장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부정 수급 탐지임. 부정 수급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부정 수급의 주요 유형별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패턴을 파악하고, 다른 자료와의 연계를 통해 통합적으로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상 탐지 기법은 개인정보 보호 기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개인정보는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기법 활용은 보건사회 분야에서 특히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이상 탐지 기법의 다양한 방법론을 보건사회 분야의 정책 목적에 맞게 개발해야 하며, 정책 집행에 직접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만들어서 정책 입안자 및 연구자들에게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빅데이터 시대에 데이터의 활용가치는 증대되는 만큼, 최신 기법인 기계학습 기법에 기반한 이상 탐지 기법을 정책 대상 발굴이나 예산 효율성 제고에 접목시켜 활용한다면 예측 가능한 맞춤형 복지에 한층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임

연구보고서(기본)
2018-46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Inter-Korean Agenda on Health and Welfare:
Analysis and Development of Implementation Plans연구 책임자 최현수
공동 연구자 백승호, 진재현, 고금지

연구 목적

-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구현'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함과 동시에 핵심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4차 산업혁명의 발전된 기술을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과 혁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정을 데이터 주도 혁신(Data-driven Innovation) 또는 데이터 주도 정책(Data-driven Policy)의 개념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음.

연구 내용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개편 방안을 통해 기존의 사회안전망이 지닌 한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대안적 소득보장체계인 기본소득과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 방안 제안을 통해 보다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내용을 핵심적인 연구 범위로 설정하였음.

-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구축된 다양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주도 또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패러다임 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변화와 일자리 및 소득 감소 문제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사회안전망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기존의 국정과제나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책 영역별 제도 중심 개편 방안과는 차별화하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데이터 주도의 혁신적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을 통해 포용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핵심적인 개념은 4차 산업혁명, 지능 정보사회, 데이터 주도 정책 혁신,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새로운 사회적 위험, 포용과 혁신의 사회안전망, 복지 패러다임 전환임.

-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과 동시에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 사회안전망 개편 방안'으로 다음 4가지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주도의 포용과 혁신의 소득보장체계 개편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존 사회안전망의 혁신적 개편방안으로 실시간 소득 파악 정보시스템(RTI) 기반의 사회보험 운영 패러다임 개편 및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 두 번째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정책실험 데이터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함.

-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포용과 혁신의 사회서비스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빅데이터와 위험예측 모형 기반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을,

- 두 번째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

연구보고서(수시)
2018- 08사회보장 정책 업무 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Establishing an Integrated Data Management System for Supporting
Social Security Policy연구 책임자 정영철
공동 연구자 이기호, 고금지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사회보장위원회 정책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정책간 연계하며 대국민 서비스의 안정화,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통합적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현황 및 데이터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사회보장 행정 체계 내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함.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업무 간 연계점을 도출함.
- 사회보장위원회 주요 사업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 및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함.

연구 내용

- 사회보장위원회 업무 현황을 파악함.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보장 재정 추계 및 사회복지 지출 산출, 사회보장 통계 작성 및 관리 업무, 사회보장 제도 협의·조정 업무, 사회보장 제도 평가 및 시행계획 평가 업무,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업무 등 사회보장위원회가 중점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관련 법, 관련 문헌, 사회보장위원회 안건 및 회의 결과 자료, 업무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근거 법령, 상세 업무 내용, 업무 흐름, 업무 단계별 생성 및 관리가 필요한 데이터 등을 파악함.

- 기존 관련 DB 관리 및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를 분석함.

- 사회보장 통계 DB 관리 시스템,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시스템, 지역사회보장 평가 정보시스템 구축 내용을 분석함.

- 사회보장위원회 각 업무별 데이터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

- 사회보장위원회 각 업무별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데이터 관리 현황 및 업무 연계상 문제점을 분석·제시함.

-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시스템 구성 방안 및 정책 제언을 제시함.

- 각 업무 단계별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상 문제점 해결을 위해 목표 업무 구성과 업무 체계, 통합 업무 지원시스템 구성 방안,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 제언을 제시함.

정책 제언

- 통합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공유·교류하여 데이터 및 업무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지침, 표준, 전략 및 방향 수립,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및 조직 구성 등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도입이 필요함.

- 관리 데이터 선정, 각각의 데이터 수집·입력·처리 등을 맡은 담당자 선정, 담당자별 권한 및 책임 정도, 공유 및 공개 가능 정도 등 데이터 관리를 위한 정책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함.
- 각 데이터 분류 체계 마련 및 업무 간 상호 호환을 위한 표준안 그리고 표준에 대한 참조안 마련이 필요함.
- 데이터 선정에서부터 생산, 경유, 이송, 보관 등까지의 업무 처리 흐름에 따른 데이터 관리 절차 마련이 필요함.
- 데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 구성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는 사회보장 정책 연구 전문 기관이자 기존 재정 센터, 평가 센터, 통계 센터, 신설·변경 협의단,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중심으로 하여 중앙 및 지역 사회보장 정책 지원을 위한 조직들과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구성이 필요함.

- 데이터 관리 및 업무 연계 비효율성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 주도의 공문화가 필요함.

- 사회보장 정보 관리 센터 및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및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진일보된 연구와 실행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사회보장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보장 정책 관련 분류 체계 및 표준화 연구, 사회보장 정책 관련 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연구,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 사회보장 통합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1단계~3단계) 연구 등 지속적이고도 실증적 후속 연구가 필요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29**빅데이터를 이용한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Assessment of Particular Matter Health Effects and Adaptation
Measures in Municipal Level연구 책임자 이수형
공동 연구자 오수진, 윤희영, 이보람, 정수경**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영향을 파악하여 지역 단위에서의 미세먼지 건강영향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적응대책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오염 현황을 진단하고, 다양한 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영향을 평가함.
 - 국내외 미세먼지 건강피해 적응대책 현황을 파악하여 앞서 연구한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결과와 종합함으로써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적응대책의 필요성과 지역별 미세먼지 적응대책을 시범적으로 제시함.

연구 내용

- 미세먼지 건강영향 및 오염 현황 진단
 - 국내 미세먼지 건강영향과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을 수행함. 이를 통해 미세먼지 건강영향 파악을 위해 향후 수행되어야 할 연구 영역을 살펴봄.
 -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자료를 바탕으로 대기오염 모델링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를 산출하고 오염 현황을 진단함.
-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 지역별 미세먼지와 건강영향을 파악하고자 대기질 모델링 방법 중 화학수송 모델을 이용하여 2012~2014년 시군구 기준 미세먼지 및 오존의 월평균 노출 농도를 산출함. 또한 미세먼지 관련 질환 사망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적 상관성을 이용한

disease mapping을 시행함.

- 시군구별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 관련 질환 사망과의 관련성을 생태학적 측면(Ecological Perspectives)에서 살펴봄으로써, 지역별 미세먼지 관련 질환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
- 주요 지역에 한하여 탐색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배출원(배출원별 배출량)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초미세먼지 건강영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함.

■ 국내외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피해 적응대책 현황 조사

-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살펴봄. 특히 국내 현황은 서울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파악해봄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건강피해 적응대책이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함.

정책 제언

- 미세먼지 건강영향은 질환에 따라 다소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지역 차원의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건강피해 적응대책이 필요함.
- 미세먼지의 지역별 건강영향과 지역별·배출원별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민감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피해 적응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가령, 충청남도의 경우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제조업 연소와 에너지산업 연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기업 내 직장인과, 산업·기업 시설이 위치한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피해 적응대책을 마련해야 함.
- 미세먼지 취약계층(민감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함께, 지역별 미세먼지 건강피해 적응대책 수립을 위해 미세먼지와 민감계층 간의 건강상관성(위해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 이를 근거로 하여 미세먼지 민감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개발 추진을 검토함.

연구보고서(일반)
2018- 322018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Health and Welfare Data Portal
System 2018연구 책임자 이연희
공동 연구자 김성희, 황남희, 송태민, 전지수

연구 목적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기반의 보건복지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의 종합적 고품질 서비스 체계 구축

- 다양하고 적절하며 정확한, 최신의 정형·비정형 보건복지통계 및 마이크로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제공
 - 소셜데이터로 통계수집 범위 확대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보건복지 이슈·현상에 대한 통계 및 기초자료 제공

연구 내용

■ 보건복지분야 국내·외 마이크로·매크로데이터의 지속적 통합 관리 및 제공체계 구축

- 보건복지부문 통계청 승인통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미승인 마이크로데이터 수집 및 통합관리
 - 2017년 노인실태조사, 장애인실태조사 등 7종의 신규 마이크로데이터 DB 구축
- 해외 Micro&Macro Data의 최신 정보 업데이트 및 신규 데이터 수집·링크·서비스
 -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핀란드, 독일, 중국의 복지관련 Micro&Macro Data 발굴을 통한 정보 서비스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의 사회보장통계 등 보건복지부문 주요 시계열 통계의 시의성 유지 강화

- 기 구축된 통계 약 140여종에 대한 최신 시계열 통계 업데이트 실시
- 시도별 보건복지통계연보 신규 통계 108종 DB화

■ 보건복지 연구결과 확산 및 통계정보 이해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제공

- 2017년도 장애인실태조사, 노인실태조사의 주요 통계에 대한 시각화 서비스
 - 노인실태조사 16개 통계지표, 장애인실태조사 25개 통계지표를 시각화하여 통계 이해도 제고
- 2017년 노인실태조사 주요 통계 중 '노인의 주거생활환경', '노후생활에 대한 인식' 관련통계를 인포그래픽스로 제작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주요 통계 중 '장애인의 건강권' 관련통계를 인포그래픽스로 제작

■ SNS 기반의 소셜 이슈 및 정책 통계 DB 구축

- 보건복지에 관한 정책, 이슈, 분야, 대상, 연령에 대한 소셜 통계 구축
 - 분기별 TF, DF, TF-IDF 통계 제공

정책 제언

■ 공공데이터 공유·확대 시 콘텐츠의 최신성 및 신뢰성을 갖춘 포털 운영이 중요함

- 2018년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운영 결과, 전년 대비 이용률의 엄청난 상승은 콘텐츠의 시의성 있는 업데이트 및 비정형 통계 등 콘텐츠 다양성 확보에 따른 결과로 나타남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이 대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한 웹 접근성 및 호환성 실천 시급

- 웹 표준기술 적용 및 비표준기술 제거,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 등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에 적절히 대응 가능한 웹서비스 지원

0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8 ANNUAL REPORT

2018년 연구 활동

KiHSA

-
- 01.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 02. 2018년 정기간행물
-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 자체과제(기본/일반/협동연구)

번호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기본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연구	18.02.01. ~18.11.30.	정경희 서제희
2	기본	건강행태의 변화에 따른 질병예측 및 질병부담 추계 연구	18.01.01. ~18.10.31.	김대중
3	기본	미래형 보건의료기술의 포괄적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8.02.01. ~18.11.30.	고숙자 정영호
4	기본	과로로 인한 한국사회 질병부담과 대응방안	18.02.01. ~18.11.30.	정 연
5	기본	재원조달 방안별 복지지출의 파급 효과 비교 분석	18.01.01. ~18.12.31.	남상호
6	기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연금제도 활용 방안 연구	18.02.01. ~18.11.30.	백혜연
7	기본	질병으로 인한 가구의 경제활동 및 경제상태 변화와 정책과제	18.01.01. ~18.10.31.	김수진
8	기본	현금지원과 현물지원 정책의 구성과 효과	18.01.01. ~18.12.31.	이현주
9	기본	지방화의 진전과 복지격차: 전달체계 여건을 중심으로	18.01.01. ~18.10.31.	함영진
10	기본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 전달체계 연구(II): 지역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18.02.01. ~18.11.30.	강혜규
11	기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규모의 경제 효과를 중심으로	18.02.01. ~18.11.30.	이철선
12	기본	범부처 사회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방안 연구: 보장성 분석을 중심으로	18.02.01. ~18.11.30.	안수란
13	기본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와 공적 편의지원 방안 연구	18.02.01. ~18.11.30.	오욱찬
14	기본	중·장년층 가족의 이중부양부담 구조변화와 대응방안 연구	18.02.01. ~18.11.30.	김유경
15	기본	치매 노인과 돌봄 제공자를 위한 맞춤형 정책방안 모색	18.02.01. ~18.11.30.	유재연
16	기본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이상 탐지(Anomaly detection) 기법 연구: 보건사회분야를 중심으로	18.01.01. ~18.12.31.	오미애
17	기본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지출 연구(I):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18.01.01. ~18.12.31.	고경환
18	기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주도 사회안전망 개편방안	18.02.01. ~18.11.30.	최현수

번호	구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9	기본	지역별 의료비 정보의 생산과 활용 강화 방안 연구	18.02.01. ~18.11.30.	신정우
20	기본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	18.01.01. ~18.12.31.	오윤섭
21	일반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18.01.01. ~18.12.31.	김종훈
22	일반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18.01.01. ~18.12.31.	전진아
23	일반	건강영향평가사업 운영	18.01.01. ~18.12.31.	정영호
24	일반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방안 연구: 사회복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18.01.01. ~18.12.31.	여유진
25	일반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18.01.01. ~18.12.31.	정해식
26	일반	아시아 사회보장제도 비교연구: 아시아 주요국의 노인빈곤 및 고용실태 비교연구	18.01.01. ~18.12.31.	노대명
27	일반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18.01.01. ~18.12.31.	이연희
28	일반	사회보장제도 수급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 주거복지분야	18.01.01. ~18.12.31.	임완섭
29	일반	2018 한국의료질보고서: 한국의료시스템의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18.01.01. ~18.12.31.	강희정
30	일반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	18.01.01. ~18.12.31.	김동진
31	일반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연구: 아동기 학대·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18.01.01. ~18.12.31.	류정희
32	일반	남북한 보건복지 제도 및 협력 방안	18.01.01. ~18.12.31.	조성은
33	일반	2018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18.01.01. ~18.12.31.	이소영
34	일반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18.01.01. ~18.12.31.	김태완
35	일반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18.01.01. ~18.12.31.	김남순
36	일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 인프라 개선	18.01.01. ~18.12.31.	정보기술 팀장
37	일반	건강노화를 위한 노인 친화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방안	18.01.01. ~18.12.31.	김남순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 수시연구

번호	비고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1	수시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수준의 적정수준과 정책방향	18.07.09. ~18.10.31.	오영호
2	수시	남북 보건복지의 공적 의제(inter-governmental agenda) 분석과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	18.07.16. ~18.10.31.	조성은
3	수시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영유아 보육서비스 이용행태 분석	18.07.27. ~18.10.31.	고제이
4	수시	사회보장정책 업무지원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18.07.30. ~18.10.31.	정영철
5	수시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보건업 대응방안 마련 연구	18.08.27. ~18.11.30.	윤강재
6	수시	미래 보건의료 정책 수요 분석 및 정책 반영 방안	18.09.05. ~18.11.30.	황도경
7	수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	18.10.29. ~19.02.28	이아영
8	수시	시니어 비즈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기반 통계의 문제점과 과제	18.11.01. ~19.02.28.	고경환
9	수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관점에서의 남북 보건복지 교류협력 방안 연구	18.11.20. ~19.03.31.	조성은

■ 정부 수탁 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1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위탁운영	18.01.01. ~18.12.31.	강혜규
2	2018 WHO 주요 이슈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18.05.03. ~18.11.30.	전진아
3	지역단위 사회서비스 기초통계 개발 및 관리방안 연구	18.01.26. ~18.08.17.	정해식
4	사회서비스 지역격차 파악 및 해소방안 마련	18.01.26. ~18.08.23.	함영진
5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마련 연구	18.01.30. ~18.06.29.	이철선
6	아동수당 소득,재산 조사방법 및 선정기준 도출 연구	18.01.30. ~18.11.27.	최현수
7	출산육아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	18.01.31. ~18.10.15.	류정희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8	종이제 가구 및 용기·포장 유래 이행물질 조사연구 -미네랄오일, 과불화화합물 등	18.02.01. ~18.11.30.	김정선
9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개선방안 연구	18.02.08. ~18.10.31.	김태완
10	생계급여 평가 개선방안 연구	18.02.08. ~18.10.31.	김태완
11	긴급지원제도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18.02.08. 18.08.31.	여유진
12	한국 여성의 건강통계 산출 및 만성질환 치료관리의 성별차이 분석	18.02.20. ~18.12.19.	김남순
13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	18.02.27. ~18.11.30.	신정우
14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및 실천방안 제안	18.03.08. ~18.12.19.	신현웅
15	2017년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정책성과평가	18.03.09. ~18.11.30.	이태진
16	OECD 보건복지 이슈 분석 및 대응, 국내 활용전략 수립 연구	18.05.02. ~18.12.14.	강희정
17	치매관련 통계 생산 및 관리 체계화 방안	18.03.14. ~18.12.08.	이윤경
18	2018년 OECD 등 국제기구통계 생산 및 관리	18.03.14. ~18.12.08.	고경환
19	2017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18.03.28. ~18.07.27.	이소영
20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모형 고도화 연구	18.03.28. ~18.11.30.	신화연
21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시나리오 분석 연구	18.03.28. ~18.11.30.	신화연
22	주류광고 및 마케팅 규제 분석 연구	18.03.28~ 18..08.24.	정영호
23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18.03.28. ~18.11.23.	이소영
24	국가 정신건강현황 통계 지표 심층 분석	18.03.29. ~18.05.31.	전진아
25	남북 인구구조 변화 분석과 보건복지정책 방향 연구	18.05.15. ~18.11.30.	조성은
2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18.04.04. ~18.12.26.	정은희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27	사회서비스 종합대책 수립지원 연구	18.04.04. ~18.10.31.	강혜규
28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반 구축 연구	18.04.09. ~18.10.05.	오윤섭
29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종합계획 연구용역	18.04.10. ~18.09.28.	김성희
30	ODA 시행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및 기관평가 연구	18.04.11. ~18.11.30.	노대명
31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에 건강보험료 추가 관련 효과 분석	18.04.13. ~18.11.30.	신영석
32	2018년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용역	18.04.19. ~18.12.21.	임완섭
33	비전 사회보장 2040 및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19~23) 수립	18.04.24. ~18.12.20.	노대명
34	미세먼지 대비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안) 구축	18.04.26. ~18.11.25.	채수미
35	의료급여 외래 의료이용 적정화 방안 연구	18.04.25. 18.11.30.	신현웅
36	석면 건강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연구	18.04.30. ~18.11.30.	이수형
37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운영지원 연구	18.05.01. ~18.12.07.	함영진
38	2017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18.05.03. ~18.10.01.	오윤섭
39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개선방안 연구	18.05.03. ~18.10.01.	강지원
40	노노돌봄 현황 실태조사	18.05.03. ~18.11.02.	유재언
41	사회보장제도「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핵심평가	18.05.03. ~18.12.07.	류정희
42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체계 합리화 연구	18.05.16. ~18.11.30.	함영진
43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연구용역	18.05.18. ~18.11.14.	김중훈
44	조건부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18.05.18. ~18.11.30.	정은희
45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 직무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18.05.18. ~18.08.16.	김희성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46	간호인력 근무여건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18.05.24. ~18.12.14.	이상영
47	모유은행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18.05.18. ~18.11.30.	이소영
48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18.05.29. ~18.12.14.	신영석
49	지방분권과 복지재정 운영체계 연구	18.05.28. ~18.11.30.	고제이
50	민간부담 의료비 중장기 추계	18.05.28. ~18.11.30.	신화연
51	담배규제 및 체계적 관리에 관한 정책 연구	18.05.30. ~18.11.30.	최은진
52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 마련 연구	18.05.30. ~18.11.26.	함영진
53	2017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평가 및 저소득층 지원실태 분석	18.05.28. ~18.11.23.	황나미
54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산출	18.06.01. ~18.11.30.	고경환
55	2018 사회보장통계 구축 및 관리	18.06.05. ~18.11.30.	최현수
56	빈곤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강화방안 연구	18.06.04. ~19.08.30.	노대명
57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개발 관리지원 사업	18.06.08. ~18.11.30.	황남희
58	나눔실태 2017	18.06.08. ~18.12.04.	고경환
59	전국단위 읍면동 신청 접수 관리모형 개발 연구	18.06.08. ~18.11.05.	함영진
60	2018 보건복지부 국제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18.06.08. ~18.11.30.	김현경
61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모델 개발 연구	18.06.12. ~18.11.30.	박세경
62	18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연구	18.06.12. ~18.10.10.	김미곤
63	사회서비스 일자리 통계 활용방안 연구	18.06.12. ~19.03.29.	최현수
64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18.06.12. ~18.11.30.	정영호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65	건강증진정책 특성성별영향분석평가	18.06.19. ~18.12.18.	김남순
66	다함께 돌봄 운영 및 성과관리 방안 연구	18.06.20. ~18.11.30.	강지원
67	공공사회지출의 경제 사회적 영향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18.06.20. ~18.10.17.	고제이
68	중장기 사회정책 추진방향 연구	18.06.20. ~18.11.16.	김미곤
69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요금감면 신청서비스 확대 방안 연구	18.06.20. ~18.11.30.	이기호
70	원자폭탄 피해자 현황 및 건강·생활 실태조사	18.06.25. ~18.12.12.	정연
71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방안	18.06.25. ~18.12.14.	최현수
72	2017년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연구	18.06.25. ~18.12.21.	김미곤
73	(가칭)사회서비스원 사업운영모델 마련 연구	18.06.25. ~18.11.21.	이철선
74	아동종합실태조사	18.07.06. ~19.03.29.	류정희
75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 전략 추진방향	18.07.04. ~18.11.30.	최현수
7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판정방식 합리화 연구	18.07.04. ~18.11.30.	함영진
77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도구 및 근로연계체계 마련 연구	18.07.10. ~18.11.30.	오욱찬
78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성과관리체계 연구	18.07.11. ~18.12.07.	강혜규
79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 연구	18.07.19. ~19.11.19.	오영호
80	2018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현황 평가 및 체감도 조사	18.07.23. ~18.11.30.	정영호
81	근로능력수급자 탈수급 현황 분석 및 탈수급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18.07.17. ~18.12.10.	정해식
82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방안 및 예비조사	18.07.17. ~18.11.30.	정연
83	장애인 이동서비스 지원을 위한 종합조사도구 개발 연구	18.07.20. ~18.11.30.	오욱찬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84	2018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	18.07.24. ~18.12.20.	안수란
85	의·한의 이원화체계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	18.07.24. ~18.12.06.	윤강재
8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방안 연구	18.07.25. ~18.12.21.	최현수
87	인구정책 모니터링 구축 사업	18.07.24. ~18.12.31.	변수정
88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발전 방안 연구	18.08.07. ~19.03.15.	최현수
89	아동정책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18.08.10. ~18.11.30.	김은정
9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방안 연구	18.08.07. ~18.11.30.	안수란
91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분석 및 통계구축방안 연구	18.08.23. ~18.11.30.	김성희
92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 사업	18.09.03. ~18.12.07.	조성호
93	소득분배 동향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18.09.03. ~18.11.30.	김태완
94	지역사회보장계획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18.09.06. ~18.12.10.	함영진
95	주요 국가의 장애판정제도 비교 연구	18.09.06. ~18.11.30.	김성희
96	일본의 경제·인구구조 변화와 고용·복지 대응정책 분석	18.09.28. ~19.04.30.	조성호
97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18.10.18. ~18.12.07.	이상정
98	국가건강검진 수가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18.10.25. ~19.10.22.	여나금
99	생계급여 제도 국제비교 연구	18.11.01. ~18.12.10.	김기태
100	최저임금과 근로장려세 관계 및 개선방안	18.10.17. ~18.12.15.	김현경
101	아동수당 제도발전 방안 관련 연구	18.11.02. ~19.03.31.	조성은
102	고독사 위험집단 데이터 분석 기반 예방 및 발굴 지원방안 연구	18.11.23. ~19.08.21.	최현수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103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설립방안 연구	18.11.21. ~19.10.31.	신현웅 전진아
104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18.12.10. ~19.06.07.	김성희
105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및 평가제도 개선방안	18.12.12. ~19.07.09.	신현웅
106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입원 적정성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18.12.13. ~19.08.09.	황도경
107	의료급여 재가급여 시범사업 운영방안 연구	18.12.24. ~19.08.20.	신현웅
108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18.12.24. ~19.10.31.	배재용

■ 민간 수탁 연구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1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모형 연구용역	18.01.18. ~18.06.17.	백혜연 원종욱
2	(3차년도)점진적 기계학습 기반 자가진화(Self-Evolving) 에이전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사회변화 예측분석 기술 개발	18.01.01 ~18.12.31.	오미애
3	(5차년도)고령친화형 특수용도 식품의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및 경제 /사회적 지원 방안	18.01.01. ~18.12.31.	김정선
4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수가기준 마련 연구	18.03.26. ~18.10.31.	신현웅
5	보장성강화정책의 방향 및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전망	18.03.12. ~18.05.31.	신현웅
6	몽골의 보건분야 개발협력 방안 연구	18.04.02. ~18.11.01.	전진아
7	빈곤층 및 빈곤지역에 대한 복지·안전지원 제도현황 및 개선안 분석	18.04.03. ~18.11.30.	임완섭
8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지원사업-보건복지분야	18.04.09. ~18.11.30.	강혜규
9	동아시아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국제비교연구: 문화와 세계화	18.04.19. ~18.12.10.	이상림
10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용역	18.04.30. ~18.12.30.	강희정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11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 평가 연구 연구용역	18.04.30. ~18.12.21.	윤강재
12	농작업 재해 실태조사 및 농업인안전보험 제도개선 연구용역	18.05.14. ~18.12.13.	백혜연
13	커뮤니티 케어 기반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회서비스 R&D 기획연구	18.04.30. ~18.12.31.	임성은
14	인구고령화분야 중장기 전략수립	18.04.16. ~18.10.31.	정경희
15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모형 구축 및 검증을 위한 사회복지·도시건축 융복합 연구	18.05.18. ~18.10.29.	황남희
16	사회보장분야 중장기전략	18.04.16. ~18.10.31.	이현주
17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회계조사 연구용역	18.06.07. ~19.08.30.	신영석
18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18.01.01. ~18.12.31.	김남순
19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	18.06.01. ~18.11.30.	김동진
20	두개악안면기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연구	18.06.25. ~18.12.24.	김수진
21	헤이그입양협약 이행 관련 외국 아동의 한국(in-bound) 입양체계 내 실무 준비에 관한 연구	18.06.29. ~18.11.30.	신윤정
22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연구	18.07.03. ~18.11.20.	정해식
23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통합적 보건·의료·복지 지원모델 개발 연구	18.07.03. ~18.11.30.	이수형
24	약사직능 발전을 위한 미래약사비전 수립 연구 - 지역 약국을 중심으로	18.07.09. ~19.02.28.	신영석
25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연구	18.07.05. ~19.02.28	황나미
26	산재보험 의료기관평가 결과 분석 및 평가항목 개발 연구용역	18.07.24. ~18.12.14	오영호
27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2)	18.07.25. ~19.03.20.	정해식
28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출산, 양육 등) 전략	18.08.22. ~18.11.21.	조성호
29	국민건강증진기금 정책 우선순위 및 지출 개선방안 연구	18.08.20. ~18.11.30.	정영호

2018년도
수행 연구사업
현황

번호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연구책임자
30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한국의료패널 제2기 패널가구 유치조사	18.01.01. ~18.12.31.	김남순
31	건강보험 재정확충 다양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	18.09.14. ~18.12.22.	신영석
32	건강형평성 거버넌스에 관한 국제워크숍	18.08.31. ~18.12.13.	김동진
33	2018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지역서비스 체계 구축 연구: 사회문화예 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18.09.17. ~18.12.28.	임성은
34	포용성장의 비전과 전략	18.10.12. ~19.03.31.	김태완
35	인구동태 예측시스템 구현을 위한 전이확률 테이블 구축 연구	18.10.15. ~18.11.30.	우해봉
36	중증응급질환 지역네트워크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용역	18.10.23. ~19.02.22.	신정우
37	포괄적 의료보장관리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18.11.16. ~19.02.16.	여나금
38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18.12.04. ~19.10.04.	신현웅
39	보건계정체계에 기초한 보건의료의 효과성 지표 검토	18.12.06. ~19.08.05.	신정우
40	노르딕 모델과 대륙형 모델의 형성 및 변천과정 연구	18.12.14. ~19.07.15.	여유진
41	입원병실의 질적 차이를 고려한 입원료 차등화 방안	18.12.19. ~19.07.19.	강희정
42	지역사회 정신건강 데이터 기반 근거중심 정신건강사업 전략개발 연구	18.12.21. ~19.04.20.	전진아 오미애

정기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
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 발행합니다.

• 제38권 1호(2018.03)

제목	저자
올림픽, 평화, ‘Primum non nocere (first, do no harm)’ 그리고 하늘의 별	신영전
노인복지정책의 관점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과제	권중돈
간호의 견지에서 본 치매대응체계 진단과 제언	홍(손)귀령, 박경옥 오은미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 고용보험 신규가입연력 상한기준을 중 심으로	조보배, 최요한
노인의 사회경제적 박탈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수영, 허성희, 장수지
독거노인의 죽음불안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기태, 송진영, 정종화
노인의 건강 특성과 사회적 관계망이 우울 증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 : 성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박소영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충동성과 우울, 당뇨병 관련 자기관리행동이 혈당조절에 미 치는 영향	서지현, 김정민, 최지영
Korean Version of the Care-Receiver Efficacy Scale : Factor Structure Identification and Validity Test of the Shot From (KCRES-SF) and the Revised Shorter From (KCRES-SR)	Jung, Soyoon Seo, Honglan
노인의 노인복지관 물리치료 이용 특성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송이슬, 김기원
개호보험에서 케어직원이 인식하는 좋은 돌봄에 대한 중요도-수행도 분석 : 일본 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정미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김정오, 문희, 박옥임
사회복지기관의 조직문화유형이 사회복지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내 갈 등의 매개효과 분석	김년희, 조정숙
인구 집단 측면의 복지 수요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 증가를 견인하였는가?	장인수, 김흥석
인구·성장·이자·소득의 상대적 관계가 국민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김용하
서울시 북한 이탈주민 대상 A형 간염 백신 무료접종사업비용-효과분석	박세희, 김선영, 이태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의 건강도시사업 연구경향 분석	이문재, 윤기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및 자격관리에 대한 정책결정과정 연구 : King의 정 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이유리, 최성경, 김인숙, 강선주
학자금 대출과 혼인이행 : 4년제 대학 졸업 여학생을 중심으로	배호중, 한창근

정기간행물

제목	저자
우리나라청소년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 형성 변화 과정 : 가족, 학교, 지역사회 각 영역별 결속형 사회적 자본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탐색	유창민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에 미치는 영향 : 여가활동 만족도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정진희, 권오영, 김석준
평화가 길이다	신영전
저출산과 모멘텀 그리고 한국의 미래 인구변동	우해봉, 한정림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산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김현식
청년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노혜진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제안의 평가와 과도기적 기본소득의 제안: 청장년 근로시민 기본소득이유권	석재은
베이비붐 세대의 재무적 노후준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후기 베이비붐 세대 비교연구	박명아, 조시울, 신혜리, 박설우, 김영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은퇴시점 및 저축수준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원종욱, 이연희
국민연금 가입구조 개선방안 연구: 개인단위 연금체계로의 개편을 중심으로	정인영, 김아람
중고령 은퇴가구의 소득구성과 의료비 지출의 관계 분석	황인옥, 이태진
배우자와의 지원교환 유형이 전기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남석인, 김세진, 김호정
개인이 인지한 지역특성과 주관적 건강 및 우울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변인과의 상호작용 효과	김진영
노인 도박중독자의 회복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카지노 단도박자를 중심으로	강준혁, 주완태
심리부검 기반 자살유형 연구	서종한, 최선희, 김경일
한국 전공의들의 직장 내 차별 경험과 심리적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 생각과의 연관성	최보경, 김지환, 김승섭
소아암 경험자 및 보호자의 취약성과 치료계획 기반 심리사회적 서비스 요구	최권호
Market Competition and Hospital Specialization in Inpatients with Disease of Circulatory System in Korea	Kim, Jae-Hyun
병원종사자의 조직 의사소통과 팀워크가 환자안전관리 중요성 인식 및 환자안전보장활동에 미치는 영향	박은진, 한지영
흡연의 위험 인식을 약화하는 담배 광고 기법: 국내 잡지에 게재된 담배 광고 내용분석 연구, 1994-2014	백혜진
The Development of a Social Service Quality Scale for Disabled Adults	Park, Susie
한국 사회복지학의 최근 연구경향: 연관규칙 분석의 활용	유혜림, 민인식
북한 내과 학술지 논문에서 다루어진 질환들의 분포	하신, 이요한

제목	저자
소유양식과 불안정, 그리고 저출산	여유진
이원적 자아존중감의 10년간의 변화과정: 성인초기, 중년기, 노년기를 중심으로	유창민
아동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이상정, 정익중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원식
체형지수(A Body Shape Index)와 주관적 불건강 상태(Poor Self-Rated Health)와의 관련성	장세균, 김재현
고용불안정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고용상태 변화 유형과 우울의 인과관계 추정	변금선, 이혜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문난영, 김석선, 길민지
외상후인자가 성폭력 피해 여성의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	김소향, 최지영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이세원
Perceived Benefits and Challenges of Psychosocial Service Uses for Adolescents and Young Survivors of Childhood Cancer	Kim, Min Ah Yi, Jaehee Choi, Kwonho
의사의 환자 지향적 커뮤니케이션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과의 관계: 건강행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선, 최만규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의 담뱃갑 포장: 저타르와 가향 담배의 인식과 선택을 예측하는 포장 요인 연구	백혜진
국내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감염관리 업무, 업무 수행 시 어려움과 교육 요구	정선영, 김옥선, 최정화, 이소진
근로 장애인의 장애수용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김자영
사회복지조직의 내부마케팅과 조직성과에 대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심정미, 조성숙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정합성 연구: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김민지, 김인숙, 이유리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참여경험 연구	안희란
탈시설과 지역사회중심 복지서비스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자립과 상호의존을 융합하는 커뮤니티 케어	김용득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에 대한 지방정부의 평가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등록제를 중심으로	전용호, 이민홍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예산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이종하, 황진영
2017년 광역자치단체 자살예방정책: 제3차 국가자살예방기본계획 및 지자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매뉴얼을 기준으로 한 구성요소 및 세부과제 분석	김정수, 김지은, 송인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성공의 전제	신영전
노인 돌봄의 연속성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보건·복지 서비스의 이용과 연계	전용호

정기간행물

제목	저자
노인의 미충족 돌봄과 미충족 의료에 대한 탐색적 연구	박금령, 최병호
암환자 가족의 돌봄 경험, 돌봄 시간, 만성질환 여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계숙, 김진욱
농어촌지역 고령자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박창제, 신동호
중년 여성과 고령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결정 요인과 우울 증상에 관한 종단연구	박소연, 박소영
노인의 고독감에 미치는 거주환경 만족의 영향: 거주유형별 다집단분석	백옥미
노년기 삶에 대한 독거효과 분석 연구: 성향매칭분석을 통한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 비교	강은나, 이민홍
아동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 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계층분석을 중심으로	김수정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사회적 위축의 구조적 관계: 비행경험 유무의 차이를 중심으로	이순희, 허만세
한국 언론의 정신건강 보도에 관한 내용 분석 연구: 뉴스 프레임과 기사 논조를 중심으로	황애리, 나은영
제6기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활용한 국내 성인의 체형지수 및 주관적 체형인식이 주관적 건강상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재현
장애인 흡연에 관한 종단 연구	김현식
계획된 행동이론을 적용한 음주와 흡연 행동의 국내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정지형, 홍석호, 장수미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조성호
배우자 간 학력 격차 변화와 결혼 선택: 출생코호트별 중심으로	신윤정, 박신아
청년층의 주관적 계층의식과 계층이동 가능성 영향요인 변화 분석	이용관
한국의 비근로가구는 증가하였는가?	안서연
간호사의 문화역량, 문화간 의사소통역량, 병원의 문화역량지지가 외국인환자 간호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윤경, 안정원, 김금순
간호사의 회복탄력성과 소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송진숙, 허수연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인의 경험에 관한 연구	임소연, 이진숙

■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전달 하는 전문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호	제목	저자
01월 통권 제255호	뉴 패러다임으로 거대한 후퇴에 대응하자	김미곤
	국내 질병 관리 및 건강불평등 현황과 정책과제	김남순, 박은자, 전진아 김동진, 서제희
	문재인케어의 쟁점과 정책 방향	강희정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여유진
	복지행정 부문의 현황과과제	강혜규, 함영진
	인구정책 및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망	김종훈
	국내 건강불평등 인식 현황과 합의	최지희, 김동진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02월 통권 제256호	포용적 성장 담론을 담아낸 2018년 복지 예산	최병호
	아동수당 지급 예산 현황과 논점	고제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김문정
	노인복지 예산의 현황과 과제	윤석명
	건강보험 재정의 현황과 정책과제	이은경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에 관한 의료적 관리의 필요성과 원칙 : 호주, 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박실비아
03월 통권 제257호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통일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노용환
	북한·통일 사회보장 연구 주제의 동향 분석	조성은, 김예슬
	남북한 사회보장 통합 시나리오 : 과도기 이중체제와 통합기 단일체제	이철수
	남북 사회보장제도 통합을 위한 경제·사회적 요건 고찰	송철용
	남북한 연금 통합 논의와 과제	정해식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04월 통권 제258호	좀 더 '변혁적'인 장기 계획의 등장을 기대한다	김교성
	의료계획의 수립과 쟁점	이규식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진단과 과제	노대명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변수정, 황남희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과 발전 방안	김성희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15~2019) 추진의 과제	박세경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 동향 및 보건복지 정보통계 분야 활용 방향	진재현, 고금지
05월 통권 제259호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행복한 아동을 만드는 사회-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송상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지역기반 아동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류정희
	아동빈곤의 현황과 정책과제	여유진
	교육복지의 현황과 과제	우명숙
	아동의 놀이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김명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보호 현황과 저해 요인 분석	이윤경
06월 통권 제260호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지역 건강불평등, 형평성의 의미를 찾아서	강영호
	지역 건강불평등 현황	박진욱
	지역박탈에 따른 사회계층 간 건강형태의 격차 현황과 과제	김동진
	지역 건강형평성 완화를 위한 해외의 경험	기명
	지역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	정백근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역사회 주민 참여 접근	허현희
07월 통권 제261호	성인자녀 부양 특성과 정책과제	김유경
	보건복지 소식광장	보건복지부
	‘사람 중심’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이동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다원적 성격과 정책적 시사점	김종훈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격과 전망 : 성평등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정재훈
	친밀성의 위기와 저출산 : 가족정책과 인구정책의 교차성	김혜영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 : 인구정책적 관점	이철희

호	제목	저자
07월 통권 제261호	범죄 피해 불안과 인구사회학적 요인 : 유럽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우선희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08월 통권 제262호	보건복지 분야 국가통계의 발전을 기대한다	황수경
	국제 수준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현황과 통계 생산과제	고경환
	보건복지 부문의 정보화 정책 및 정책 추진 근거 법령 현황 분석	정영철
	전자의무기록 자료의 수집과 활용 제고를 위한 과제	신정우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에 대한 통계적 접근과 관련 이슈	박아연, 오미애
	사회서비스 분야 성과관리 개선 방향	오윤섭
	한·중·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 비교 분석	이강호
09월 통권 제263호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가 우리 사회에 주는 울림	이승기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김성희
	장애인의 보건의료·건강 실태와 정책과제	권선진
	장애인의 경제 상태와 정책과제	이선우
	장애인의 차별 인식 실태와 정책과제	오욱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와 정책과제	윤상용
10월 통권 제264호	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문화·여가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이민경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현재 노인 삶의 모습이 주는 의미	이동욱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정경희
	노인의 건강과 돌봄	이윤경
	노인의 경제생활 여건과 정책 방향	황남희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강은나
11월 통권 제265호	고령자 맞춤형 식품 및 급식서비스 관리 현황과 정책과제	김정선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해야 한다.	박진도
	행복지수 개발의 정책적 함의 ; ‘행복빈곤’의 시론적 검토	여유진, 김미곤
	한국인의 행복과 행복 요인	이용수
	‘일과 행복’ 협동연구 3년의 성과	안주엽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11월 통권 제265호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현황과 과제	정도채
	의약품 접근성과 약가 투명성 : 트레이드오프인가?	박실비아
	기초연금 추가 지급에 따른 노인빈곤율 변화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고려를 중심으로	임완섭
12월 통권 제266호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 방향	곽숙영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대근무 실태와 정책과제	김유경
	사회복지 종사자의 보수 실태와 처우 향상	박경수
	사회복지 종사자의 단기 대체인력 활용 실태와 정책과제	임성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현황과 정책과제	박신아, 김유경
	사회서비스 보장 현황과 정책 함의	안수란
	보건복지 소식 광장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 Issue&Focus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발행합니다.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345호 (2018-01)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이연희	2018/01/29
제346호 (2018-02)	9.26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 후 보건 분야의 연구 및 적응 대책 방향	이수형	2018/02/12
제347호 (2018-03)	유전자 검사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강화 방안	정영철	2018/02/26
제348호 (2018-04)	소득·교육 수준에 따른 나쁜 생활습관의 격차와 함의	김동진	2018/03/12
제349호 (2018-05)	기후변화와 건강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국가의 역할	채수미	2018/04/02
제350호 (2018-06)	시·군·구 지역 출산율과 신혼부부 비율	이상림 이지혜	2018/06/25
제351호 (2018-07)	북한 영유아 및 아동 지원 사업의 분석 결과와 향후 과제	조성은	2018/07/30
제352호 (2018-08)	미래 인구변동의 인구학적 요인 분해와 시사점	우해봉	2018/08/13
제353 (2018-09)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대응한 국내입양 체계 개편 방안	신윤정	2018/09/17
제354호 (2018-10)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	노대명	2018/10/15
제355호 (2018-11)	건강보험 재정수입 관련 주요 과제	신영석	2018/11/05
제356호 (2018-12)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실태와 정책적 함의	오욱찬	2018/11/19
제357호 (2018-13)	은퇴가 정신건강 및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이아영	2018/12/24

정기간행물

■ 국제사회보장리뷰

세계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합니다.

호	제목	저자
통권 제4호 (2018.03)	핀란드 자살예방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와 함의	티모 파르토넨
	일본의 자살예방 대책	정진욱
	호주의 자살 현황과 정책 동향	전진아
	동유럽의 자살 동향과 해석:성(性), 연령 중심으로	페테르 베르니크, 메리케 시사스크, 아이리 베르니크
	영국 장애인 보건의료정책의 동향	유동철
	해외 기본소득 실험의 의의와 한계	강남훈
	미국 노인의 성생활 건강과 성적 권리 보호	유재언
	일본의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 정책:도·도·부·현 사례를 중심으로	이정아, 김동진
	미국에서의 사망률 증가와 시사점	김수진
	중국의 일·가정 양립: 정부, 기업, 지역사회의 대응	유명
	뉴욕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하여	김태근
	일본의 장애인 고용할당제와 장애인 고용	유야마 아쓰시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담	김정윤
	일본의 2018년 개호보수 개정	김명중
	스웨덴 학교 내 차별 문제와 정부의 대응 방안	송지원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전략적 자살예방 사례	이지현
통권 제5호 (2018.06)	프랑스의 포용적 장애인 복지 전달체계	박혜미
	스웨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자기결정권	신은경
	일본의 중증방문개호: 지적장애인 '지켜보기'의 사회화	정희경
	미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시사점	전지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접근권과 반차별권	서정희, 심재진, 오옥찬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지역포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임정미
	미국 국가자살예방전략에 따른 뉴욕주 자살예방정책	손해인
	베트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정책의 과제와 방향	타오응우옌
	영국의 지역 단위 박탈 수준 측정 현황과 활용	김동진
	겐트(Ghent)시스템 개혁 이후 핀란드 실업보험 동향	신영규

호	제목	저자
통권 제5호 (2018.06)	일본의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	유야마 아쓰시
	영국 아동건강가정방문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서영민
	노동시장의 성 불평등, 중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유명
	이민자 통합을 위한 스웨덴 사민당의 스웨덴어 강조 공약	송지원
통권 제6호 (2018.09)	일본의 정부 간 관계 : 사회보장 재정을 중심으로	국중호
	영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 및 행정 체계	김보영
	미국의 정부 간 복지 재정 분담과 보조금 제도	윤태섭
	폴란드의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Famliy 500+’시행 3년, 사회경제적 성과와 변화	고제이
	프랑스 복지국가의 개편 노력과 일반사회보장기여금	최영준
	네덜란드의 장기요양 개혁	이윤경
	스웨덴 장애인 돌봄 정책 :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요한나 구스타프손
	난민이 해외 수용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박복영
	중국의 주요 주거보장정책 및 향후 과제	유명
	스웨덴 노인주거복지서비스 현황과 정책 대응	김연진
	영국 국가생활임금의 도입, 영향 및 과제	김경환
	일본 노인빈곤 현황과 최근의 논의	유야마 아쓰시
	영국의 시설퇴소아동 지원	서영민
	프랑스 장기요양제도와 사회적 돌봄	블랑시 르비앙
통권 제7호 (2018.12)	위기에 처한 영국의 사회적 돌봄 :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캐럴라인 글렌디닝
	호주의 노인 돌봄 최근 동향	줄리 바일스
	스웨덴의 노인 돌봄 서비스와 지역사회의 역할	게르트 손드스트룀
	일본의 포괄적 지원체계 현황과 과제	나가타 유우
	네덜란드 ‘참여사회’에 대한 비판적 접근 : 역량 중심 평가	마라 이에르커스
	퀘벡의 사회적경제 : 보육, 성인 돌봄, 주거를 중심으로	최혜진
	싱가포르 노인 보건의료체계의 최근 동향	백상숙
	미국의 아동 자립지원제도와 시사점	이상정
	중국 도시 주택보장 정책의 발전과 최근 동향	왕징
	영국 복지의 조건부 경향과 과제	김경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여론	신영규

정기간행물

호	제목	저자
통권 제7호 (2018.12)	중국의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그 영향	유명
	뉴욕시 정신보건 시스템 개혁 : 시민을 위한 정신보건 로드맵	손해인
	일본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정책	김명중

■ Research in Brief

해외 전문가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내 보건복지 관련 이슈를 영문화하여 발간합니다.

번호	제목	저자	발행일
1	Household Expenditures on Outpatient Care, Inpatient Care, and Prescription Medication: Trends by Income Quintile	Youn Jung Sukyong Jung	2018/01
2	Policy Response to Low Fertility in Korea: A Look through OECD Indicators	Yoon-jeong Shin	2018/01
3	Reimbursement Strategies for New Specialty Drugs in Selected Countries: Implications for Korea	Sylvia Park	2018/02
4	Korea's New Comprehensive Plan on Fine Dust and Its Implications for Policy and Research	Suehyung Lee	2018/03
5	Income- and Education-related Disparities in Unhealthy Lifestyle Habits and Their Implications	Dong-jin Kim	2018/05
6	Climate Change and Its Health Impacts: Public Awareness and Government's Role	Su-Mi Chae	2018/06
7	Fertility and the Proportion of Newlyweds in Different Municipalities	Sang-Lim Lee Ji-Hye Lee	2018
8	Demographic Components of Future Population Change and Their Implications	Haebong Woo	2018
9	Indebted Working-Poor Household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Dae-myung No	2018
10	Some Policy Issues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Finance	Young-Seok Shin	2018
11	Additional Costs of Disability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Wook-Chan Oh	2018

05

부록

- 01. 도서관
- 02. KIHASA 웹사이트
- 03. 간행물 회원제 안내

도서관



[도서관 방문 이용 시간]

평일: 9:00~18:00
주말 및 공휴일,
개원기념일(7. 1.) 휴관

[이용 범위]

연구원 직원: 열람, 복사, 대출 가능
외부 이용자: 열람, 복사 가능

[이용 문의]

전화: 044-287-8004
팩스: 044-287-8056
이메일: library@kihas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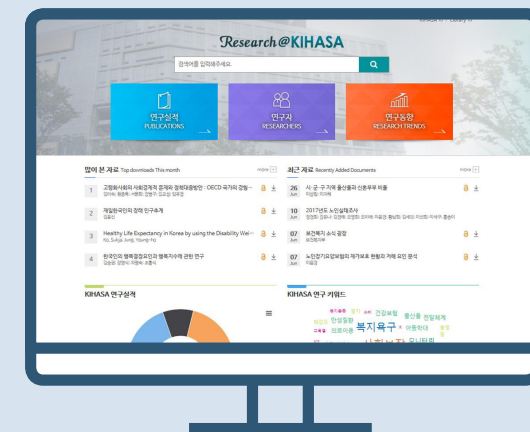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관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구 및 가족계획 등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학술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 도서관입니다.
-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회의자료 등 단행본 5만여 권과 정기간행물 900여 종을 비롯하여 CD-ROM, 전자저널, 학술 DB 등 보건복지 분야의 학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도서관은 인터넷 접속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자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든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관련 웹사이트



전자도서관 [http://library.kihasa.re.kr]

전자도서관을 통해 인쇄 자료와 전자저널 및 전자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인터넷 정보원 및 정책연구정보 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



Research@KIHASA [http://repository.kihasa.re.kr]

Research@KIHASA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모든 연구 성과물을 디지털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자 페이지를 통해 연구자 정보와 각종 연구 동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IHASA 웹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고서와 정기간행물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의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면 최신 보건복지 정보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www.koweps.re.kr]

-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가구와 개인의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 한국의료패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 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 추출 및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초연구보고서, 심층분석보고서 등의 연구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 [http://data.kihasa.re.kr]

- 보건복지데이터포털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구 DB, Data Bank, 해외 자료 등 영역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통계정보와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간정보통계, 인포그래픽스 등 다양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http://hia.kihasa.re.kr]

-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은 건강영향평가(HIA: Health Impact Assessment)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학습이나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더욱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회원제 안내

회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 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회원 종류

전체 간행물 회원
120,000원

보건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사회 분야 간행물 회원
75,000원

정기 간행물 회원
35,000원

가입방법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영문문고(종로점)
399-560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Yes24
Http://www.yes24.com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2019년 12월 발행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재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문의 044-287-8000

편집·인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827-504-3 93330
